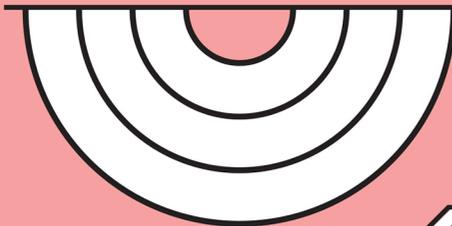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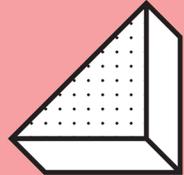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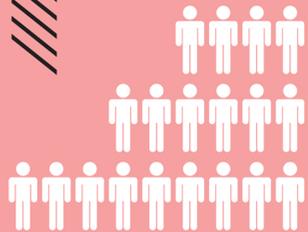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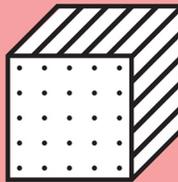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변미리 지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  
**연구책임**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장

•  
**공동연구**

민보경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원

박민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  
**외부 공동연구**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채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사회학과 교수

---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



한 도시에서의 인구통계는 경제, 복지, 노동, 주택, 문화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출산을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축소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나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 등 인구구조와 가구구성이 변화하는 근저에는 이러한 현상을 불러온 가치관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 관련한 경제활동의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변화 등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인구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서로 다른 인구 집단(유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인구 등)과 가구 유형(1인가구, 노인가구, 이혼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서울의 인구와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환경, 주택, 고용, 교육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인구통계와 가구통계에서 세분화된 인구 집단별 상세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와 가구 변화에 조응하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201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기본으로 서울의 인구통계와 가구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어떤 정책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통계로 보는 서울 인구' 편, 2부는 '통계로 보는 서울 가구' 편, 3부는 '정책 이슈' 편이다.

1부는 총 4개의 장으로, 1장 인구통계에서는 인구통계가 갖는 의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장 인구성장에서는 서울의 총인구성장과 자치구별 인구 변화를 분석한 다음, 2045년 인구 규모 추계를 다루고 있다. 3장 인구구조에서는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를 제시하고,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인구구조와 혼인인구, 외국인 인구 등을 분석하였다. 4장은 서울 인구가동을 다루고 있는데, 전출입

인구,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 등을 분석하였다.

2부는 서울의 가구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장에서는 가구 유형의 변화와 자치구 단위의 가구 수 분포 등을 분석하고, 6장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서술하였다. 7장은 노인가구, 8장은 이혼가구, 9장은 다문화가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1부의 인구통계와 2부의 가구통계에 근거하여 3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이슈들로 구성하였다. 10장에서는 서울시가 인구성장 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1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화가 갖는 의미를, 12장에서는 서울의 고령화 추이와 관련하여 정책 이슈와 함께 대안적 지표를 활용한 인구 고령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13장에서는 서울시의 인구이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14장에서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 편을 실었다. 서울시의 인구통계와 가구통계 연구와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글이다. 이는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미국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책은 서울연구원과 외부 연구진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변미리 미래연구센터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민보경 초빙연구원과 박민진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외부 연구진으로는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가 12장 고령화에 따른 정책 이슈에 대한 글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의 임채운 교수가 부록으로 실린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분석적 글을 주셨다. 연구책임자로서 외부 연구진 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힘들게 완성한 이 책이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의 도시정책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일 때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용이하며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변미리

| 1장 | 인구통계 ————— 12

01 인구통계의 의의와 활용 · 12

인구통계의 의의 | 인구통계의 활용

02 인구통계의 선정 · 14

인구통계 분석 항목 선정

| 2장 | 인구성장 ————— 16

01 인구 변화와 인구성장률 · 16

총인구성장률과 성장률 | 서울 자치구별 인구 변화

02 2045년 인구 규모 예측 · 24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

03 요약 · 25

인구 변화와 인구성장 | 2045년 인구 규모 예측

| 3장 | 인구구조 ————— 27

01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 27

02 성별 인구구조 · 30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 출생 시 성비의 변화

03 **연령별 인구구조** · 36

학령인구의 변화, 2000~2045

04 **교육 수준별 인구구조** · 38

05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 41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1980~2015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2015~2045 | 부양비, 1970~2045

06 **혼인인구의 변화** · 45

서울시 혼인인구 변화 | 20~49세 연령층의 미혼인구 변화 | 이혼인구의 변화

07 **외국인 인구** · 49

외국인 인구 변화 | 외국인 인구의 성비 변화 | 외국인의 연령구조

08 **요약** · 54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 학령인구와 교육 수준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 혼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 4장 | **인구이동** \_\_\_\_\_ 58

01 **거주지 이동** · 58

서울 인구 출생지 분포 | 서울 전출입인구 |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 | 서울 대도시권 연령별 전출입 | 서울 자치구별 전출입

02 **통근통학인구** · 84

통근통학 이동 구간 | 주간인구

03 **요약** · 89

서울 전출입인구 |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

2부

통계로 보는 서울 가구

| 5장 | **가구구조의 변화** \_\_\_\_\_ 94

01 **가구 수의 변화** · 94

02 **가구 유형의 변화** · 95

03 **자치구 가구 수 분포** · 97

04 **가구소득** · 99

서울시 보통가구의 소득

| 6장 | 1인가구 ————— 100

- 01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 100
- 02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수의 변화 · 102
- 03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특성 · 105
- 04 서울 1인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 108
- 05 여성 1인가구 · 109

| 7장 | 노인가구 ————— 111

- 01 노인가구의 변화 · 111
- 02 서울 자치구별 노인가구 현황 · 112
- 03 서울 노인 1인가구주의 차별적 특성 · 114

| 8장 | 이혼가구 ————— 116

- 01 이혼가구의 분포 · 116
- 02 이혼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특성 · 118
- 03 이혼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가구원 구성 · 119

| 9장 | 다문화가구 ————— 121

- 01 다문화가구의 분포 · 121
- 02 다문화가구의 특성 · 123
- 03 다문화가구의 연령구조 · 124

- 통계로 보는 서울 가구 요약 · 126

| 10장 | 인구성장 이슈 ————— 132

- 01 인구성장 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 · 132
- 02 인구 규모 예측에 따른 시사점 · 133

| 11장 | 인구구조 이슈 ————— 134

- 01 인구구조 최적화 상태에서 점차 악화 · 134
- 0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 · 135

| 12장 | 고령화 이슈 ————— 137

- 01 서울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추이 · 137
- 02 개념적 논의와 인구 지표 · 138
- 03 서울의 인구 변화: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 · 141
- 04 서울의 인구 고령화: 서울시 자치구 비교 · 148
- 05 대안적 지표를 활용한 서울의 인구 고령화 분석 · 153
- 06 정책적 함의 · 158

| 13장 | 인구이동 이슈 ————— 160

- 01 서울 대도시권 권역별 발전 전략 필요 · 160
- 02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방안 모색 · 161
- 03 서울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효율적 체계 구축 · 162

| 14장 | 가구구조 이슈 ————— 163

- 01 다양한 가구구조와 소규모 가구의 증가 · 163
- 02 1인가구 증가와 지역적 대응 · 164
- 03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 다변화 · 165
- 04 이혼가구의 다양성 증가 · 166
- 05 다문화가구 증가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 · 166

| 참고문헌 | · 168

| 표·그림 색인 | · 170

| 부록 | · 175

1부



# 통계로 보는 서울 인구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인구통계

## 01 인구통계의 의의와 활용

### 인구통계의 의의

- 사회변동을 읽는 주요 키워드

인구통계는 인구 집단의 규모, 구조, 분포, 변동 및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량적 자료이다. 인구통계는 인구를 일정 시점의 정지된 상태에서 관찰하여 파악하는 정태통계(static statistics)와 출생, 사망, 이혼, 혼인, 이동 등 그 변동요인을 파악하는 동태통계(vital statistics)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인구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사회변동은 사회 여러 부분의 변화가 한데 모여 이뤄진 결과물이다. 현재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인구통계는 인구의 단기적, 중장기적 변화와 동태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이다. 인구변동을 나타내는 인구통계는 사회변동을 사회 전체 수준, 개인 수준, 가족·가구 수준에서 알려 주는 주요 키워드이다.

### ● 한국 사회 변화의 선도 요소

서울은 한국의 중심도시로 한국 사회의 변동을 선도한다. 다른 한편, 서울의 변동은 다른 지역의 변동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의 인구는 다른 지역의 인구보다 젊어서 농촌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늦다. 이처럼 서울은 한국 사회의 변동을 이끌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의 변동과 차별성을 갖기도 한다. 한국의 사회변동을 서울의 변동 속에서 이해하고 서울의 사회변동을 한국의 사회변동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하듯이, 서울의 인구변동도 한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인구통계의 활용

### ● 사회 변화의 정책적 대응 기준

인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급격한 인구변동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사회변동으로 개인, 제도, 사회가 적응하기 곤란하여 여러 형태의 부적응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자체는 한국 사회의 지대한 사회변동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여러 형태의 기술 발전, 그리고 가치관의 변동과 맞물려 새로운 변동을 낳고, 과거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그러므로 인구통계가 의미하는 지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 ● 미래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차원적 이정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동,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 변동, 그리고 여전히 가족 부담 중심의 불안정한 복지정책의 영향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에 반영되어 있고, 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인구와 가구 변화로 나타난다. 인구통계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필수이므로, 사회 변화를 읽기 위한 다차원적 이정표로 활용해야 한다.

### ● 서울, 수도권, 전국 등 다층적 비교 분석 필요

서울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를 서울 외의 지역과 비교 분

석해야 그 변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와 가구의 특성을 서울 자체만 파악할 경우 부분적 파악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구이동 현상은 서울, 수도권, 전국 단위의 상호비교 분석을 통해서만 그 변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 서울 인구의 지속적 팽창은 전국에서 서울로의 인구이동 급증 현상과 맞물려 있고, 오늘날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도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 지역적 고령화 현상과 긴밀한 관련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서울, 수도권, 전국 사이의 다층위 분석을 통해 현재 변화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02 인구통계의 선정

---

### 인구통계 분석 항목 선정

- 인구성장, 인구구조, 가구구조, 인구이동 등 4개 부문으로 인구변동과 가구변동 파악

사회의 기본적인 변화는 인구와 가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인구와 가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인구변동은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가구변동은 가구구조를 상세 분석하여 파악한다. 인구성장률과 인구 규모 예측,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부양인구, 혼인인구 및 외국인 인구 등이 인구변동의 상세 영역으로 포함된다. 가구구조는 1인가구, 노인가구, 이혼가구와 다문화가구 등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인구이동은 주거 이동과 통근통학 이동이 포함된다.

- 인구 및 가구조사 자료의 세분화된 분석에 근거한 다양한 통계지표 구축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와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자료, 다양한 행정자료를 다층위적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하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종합하여 다양한 통계지표를 구축하였다.

| 표 1-1 | 인구통계 분석 항목 및 통계자료

부문	항목	자료	자료원	기간	분석단위
인구성장	총인구성장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49~2015년	서울시, 수도권
	인구 규모 예측추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7년 (2015~2045년)	서울시, 수도권
인구구조	성별 인구구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서울시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연령별 인구구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교육 수준별 인구구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2015년	서울시, 수도권
	학령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서울시	2017년 (2000~2045년)	서울시, 수도권
	생산가능인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혼인인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외국인 인구	체류외국인통계	법무부	1992~2015년	서울시, 수도권
가구구조	가구 유형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서울시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1인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서울시	1980~2015년	서울시, 수도권
	노인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서울시	2000~2015년	서울시, 수도권
	이혼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0~2015년	서울시, 수도권
	다문화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년	서울시, 수도권
인구이동	거주지 이동	국내인구 이동통계	통계청	2015년	서울시, 수도권
	통근통학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년	서울시, 수도권

# 인구성장

## 01 인구 변화와 인구성장률

### 총인구성장률과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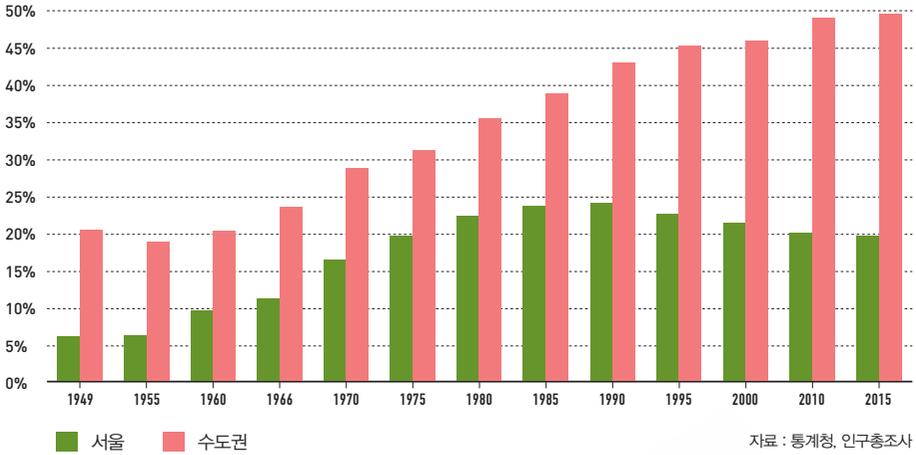
-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성장

인구총조사(2015년)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인구는 990만 명으로 1949년 144만 명에 서 약 6.7배 성장하였다. 해방 후 1955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서울 인구는 157만 명이였다.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울 인구는 1990년 1060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과 전국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서울시 인구증가율은 1990년부터 음(-)의 증가율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55~1960년에 55.8퍼센트, 1960~1966년에 55.1퍼센트로 정점에 달한다. 이후에도 1990년까지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1995년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3.6퍼센트이고, 이후 2015년까지 음(-)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은 여전히 양(+ )의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 그림 2-1 | 전국 인구 중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1949~2015)



| 표 2-1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수 추이(194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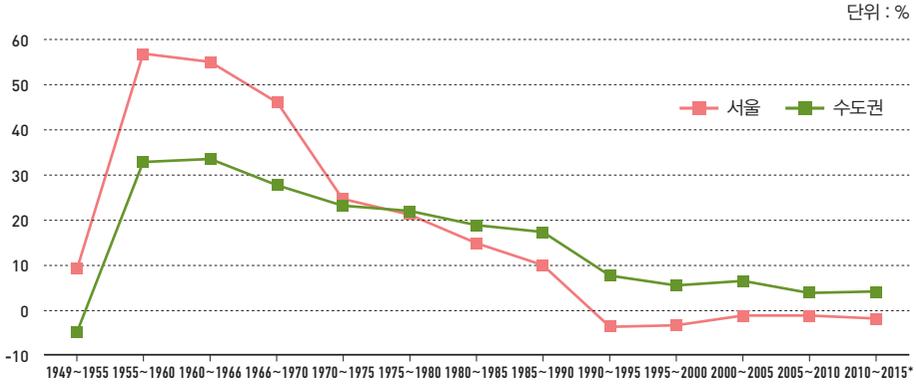
	서울		수도권	
	명	%*	명	%
1949	1,437,670	7.1	4,171,614	20.7
1955	1,568,746	7.3	3,928,304	18.3
1960	2,445,402	9.8	5,194,167	20.8
1966	3,793,280	13.0	6,895,605	23.6
1970	5,525,262	17.6	8,878,534	28.2
1975	6,879,464	19.8	10,914,171	31.5
1980	8,350,616	22.3	13,280,951	35.5
1985	9,625,755	23.8	15,803,288	39.1
1990	10,603,250	24.4	18,573,937	42.8
1995	10,217,177	22.9	20,159,295	45.2
2000	9,853,972	21.4	21,258,062	46.2
2005	9,762,546	20.8	22,621,232	48.1
2010	9,631,482	20.1	23,459,570	48.9
2015**	9,904,312	19.4	25,273,824	49.5

\* "%열은 전국 인구 대비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비중

\*\* 2015년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산정한 인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그림 2-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증가율(1949~2015)



\* 2010~2015 등록센서스 방식 적용

| 표 2-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증가율(1949~2015)

	서울	수도권
1949~1955	9.12	-5.83
1955~1960	55.88	32.22
1960~1966	55.12	32.76
1966~1970	45.66	28.76
1970~1975	24.51	22.93
1975~1980	21.38	21.69
1980~1985	15.27	18.99
1985~1990	10.15	17.53
1990~1995	-3.64	8.54
1995~2000	-3.55	5.45
2000~2005	-0.93	6.41
2005~2010	-1.34	3.71
2010~2015*	-1.59	3.42

\* 2010~2015 등록센서스 방식 적용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서울 자치구별 인구 변화

### ● 서울 자치구 중 송파구 인구가 가장 많아

잠실 지역이 포함된 송파구는 1990년에 인구 63만 명이었고 2005년에 57만 명으로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면 63만~64만 명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 지역에 속하는 자치구의 인구는 많은 반면, 과거 도심 지역이면서 정치 1번지로 알려진 종로구, 중구 등의 상주인구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에 불과해 상주인구 측면에서 상위 자치구의 위상을 잃었다. 그러나 유동인구 등 주간인구를 고려하면 도심 지역 자치구의 1일 인구는 여전히 매우 크다. 2015년 현재는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상주인구 규모가 크다.

### ●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인구에 가까운 자치구는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수는 작게는 12만 명에서 많게는 63만 명에 달한다. 구별 인구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약 4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진 구는 동작구, 영등포구, 중랑구, 마포구 등이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중랑구, 마포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의 인구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 규모와 비슷하다.

| 그림 2-3 |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인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2-3 | 서울 자치구별 인구 규모 추이(196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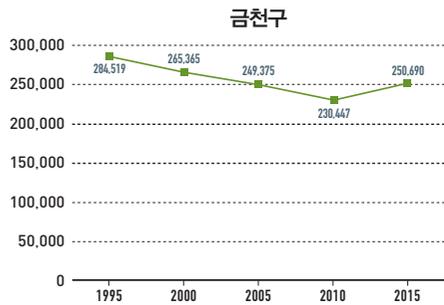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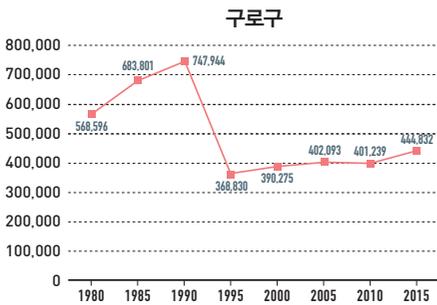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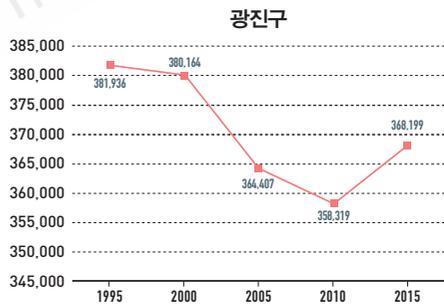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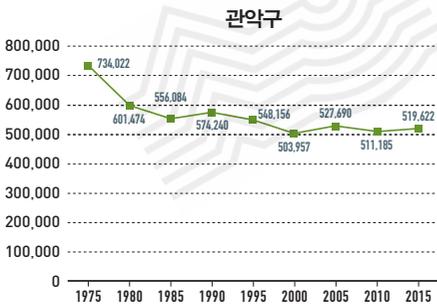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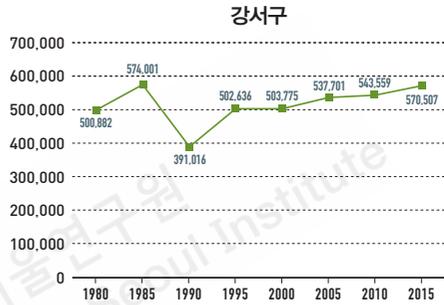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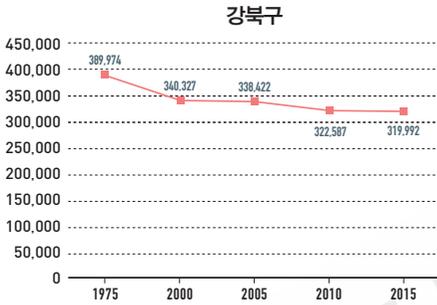
	1966	1970	1975	1980	1985
강남구	-	-	326,174	474,121	770,097
강동구	-	-	-	511,279	885,919
강북구	-	-	-	-	-
강서구	-	-	-	500,882	674,001
관악구	-	-	734,022	501,474	556,084
광진구	-	-	-	-	-
구로구	-	-	-	568,596	683,801
금천구	-	-	-	-	-
노원구	-	-	-	-	-
도봉구	-	-	631,484	753,181	846,644
동대문구	521,148	737,191	737,871	847,620	942,275
동작구	-	-	-	392,719	405,779
마포구	306,280	348,953	422,132	432,131	441,032
서대문구	531,744	784,325	794,666	417,854	402,945
서초구	-	-	-	-	-
성동구	554,822	817,828	629,254	687,249	750,949
성북구	519,510	979,584	604,359	588,347	583,281
송파구	-	-	-	-	-
양천구	-	-	-	-	-
영등포구	675,193	1,203,002	1,050,035	431,291	445,941
용산구	303,051	303,583	334,524	330,730	321,791
은평구	-	-	-	382,706	441,789
종로구	224,761	215,971	333,049	291,960	265,342
중구	156,761	134,815	281,832	238,476	208,085
중랑구	-	-	-	-	-
총계	3,793,270	5,525,252	6,879,402	8,350,616	9,625,755
평균	421,474	613,917	573,284	491,213	566,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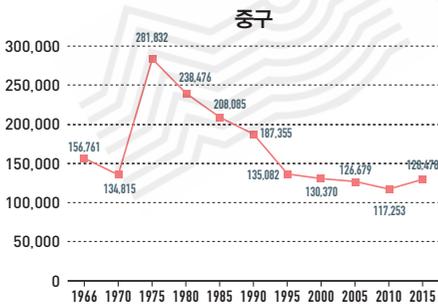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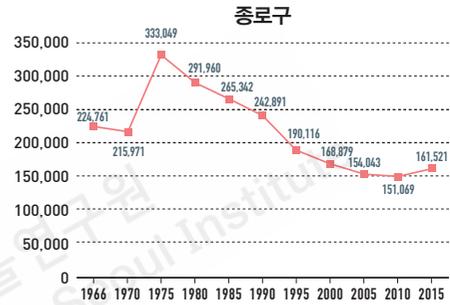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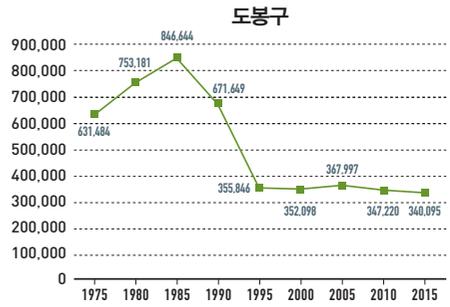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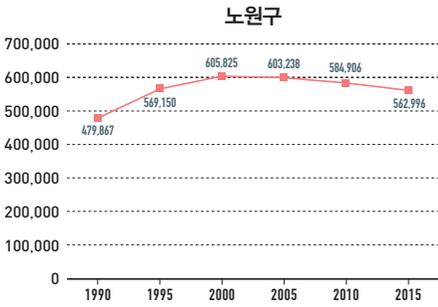
\* 2015년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산정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490,767	534,188	521,436	508,108	522,198	541,688
532,305	487,012	473,572	444,258	462,500	444,385
-	389,974	340,327	338,422	322,587	319,992
391,016	502,636	503,775	537,701	543,559	570,507
574,240	548,156	503,957	527,690	511,185	519,622
-	381,936	380,164	364,407	358,319	368,199
747,944	364,830	390,275	402,093	401,239	444,832
-	284,519	265,365	249,375	230,447	250,690
479,867	569,150	605,825	603,238	584,906	562,996
671,649	355,846	352,098	367,998	347,220	340,095
503,257	415,232	366,282	371,024	339,599	364,787
403,647	422,267	400,351	407,644	390,197	407,894
435,176	385,347	365,398	370,790	363,343	381,330
385,476	357,503	348,769	340,327	307,562	308,768
395,362	384,221	367,096	370,850	388,220	420,804
798,510	333,976	322,990	324,986	290,277	295,006
551,017	489,626	459,011	440,254	452,704	456,844
634,124	636,473	632,983	577,362	640,732	634,941
490,343	460,349	458,998	472,751	466,456	465,512
469,862	413,473	387,404	392,507	374,543	406,528
300,264	250,567	226,540	211,109	217,228	227,282
469,795	484,896	442,089	446,550	448,112	478,374
242,891	190,116	168,879	154,043	151,069	161,521
187,355	135,082	130,370	126,679	117,253	128,478
448,383	439,802	440,018	412,380	400,027	403,237
10,603,250	10,217,177	9,853,972	9,762,546	9,631,482	9,904,312
481,966	408,687	394,159	390,502	385,259	396,17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그림 2-4 | 서울 자치구별 인구 규모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년도

● 역사적으로 인구 100만 명에 가까웠던 거대 자치구는 영등포구, 성북구

197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상주인구는 120만 명이였다. 1975년에도 역시 100만 명이 넘었다. 이후 구로구, 금천구 등이 분구하여 영등포구 인구는 2015년 기준 40만 명 수준이다. 성북구의 상주인구는 1970년 98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 성북구의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2015년 현재 성북구의 상주인구는 45만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 규모 이상이다.

## 02 2045년 인구 규모 예측

###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

- 서울시 인구는 2009년 1013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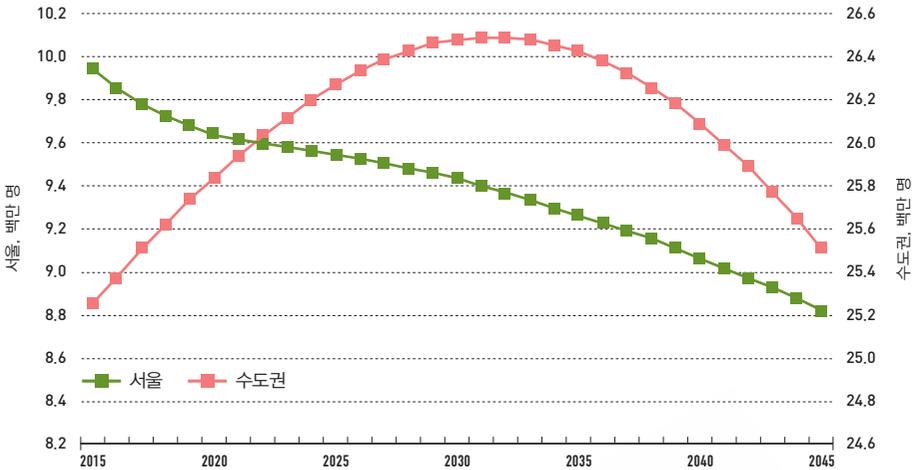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감소 추세인 서울시 인구는 2013년 999만 명으로 천만 명 이하가 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45년 881만 명 규모로 예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이동 덕분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수도권은 2031년 2649만 명을 정점으로, 전국은 2031년 5295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 서울시 인구추계는 여러 가정이 반드시 필요

인구추계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가 이동의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고 출산력 회복의 기대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 출산력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에 사망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사망력 감소는 평균수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한다.

인구가 이동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인구가 감소한 데는 서울로의 유입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앞으로도 서울의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낮은 출산력과 노년층의 사망력 감소는 서울 인구의 고령화를 지속시킬 것이다. 여기에 서울로의 인구유입 억제가 결합하여 서울의 인구증가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그림 2-5 |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2015~204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 03 요약

### 인구 변화와 인구성장

- 서울 인구는 감소, 수도권 인구는 성장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수도권 인구는 서울 인구를 흡수하여 성장하는 추세이다. 서울 인구는 50여 년 전인 1960년 240여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천만 도시로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기준 990여만 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감소는 수도권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나타나 2015년 수도권 인구는 2500여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9.5퍼센트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의 자치구 평균인구는 40여만 명**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40여 만 명이며, 2015년 기준 송파구는 63만여 명으로 인구 규모가 가장 크다. 도심의 자치구인 중구와 종로구는 상주인구가 각각 12만 명, 16만 명으로 가장 작다.

## **2045년 인구 규모 예측**

- **서울시 인구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09년 101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999만 명으로 천만 명 이하가 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45년 881만 명 규모로 예측된다. 수도권은 인구이동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31년을 정점으로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수도권은 2031년 2649만 명을 정점으로, 전국 인구는 2031년 5295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서울 인구 고령화와 인구유입 억제의 결합이 원인**

서울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인구유입이 억제되면서 서울의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 199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한 데는 서울로의 유입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앞으로도 서울의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낮은 출산력과 노년층의 사망력 감소는 서울 인구의 고령화를 지속시킬 것이며, 여기에 서울로의 인구유입 억제가 결합하여 향후 서울의 인구는 쉽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인구구조

### 01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 전통적인 유형에서 벗어난 1980년도 인구 피라미드

합계출산력 2.0에 접근한 1980년도 인구 피라미드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벗어난 형태이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출산력 저하를 경험했다. 1960년에 합계출산율 6.0 수준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0 수준으로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1960년대 초반에 도입된 강력한 출산력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졌다. 그러면서 고출산, 고사망 상태의 전형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유소년층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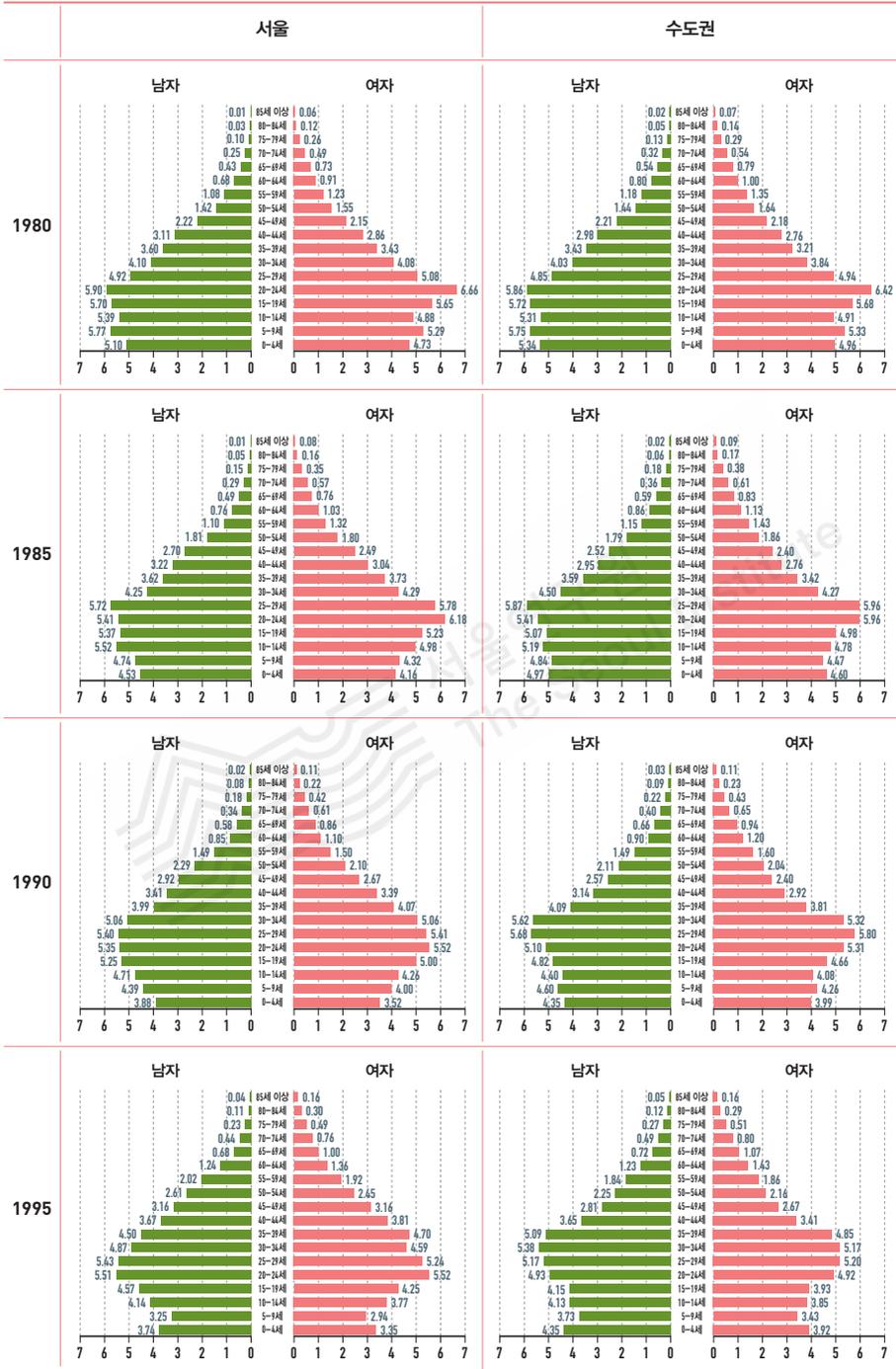
1980년도 서울의 인구구조는 밑이 넓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인구 피라미드가 아니라, 서울로 인구유입이 지속되면서도 출산력이 낮아져 0~4세 인구 비율이 5~9세 인구 비율보다 낮은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 1995년 인구구조는 출산력의 상승을 반영

1990년대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변화를 겪는다. 출산력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출산력 억제 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출산력 증가 정

| 그림 3-1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피라미드(1980~1995)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1995)

| 그림 3-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피라미드(2000~2015)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책으로 선화한 것도 아니다. 갑자기 출산력 억제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피임 등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출산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의 인구구조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의 인구구조는 0~4세 인구 비율이 5~9세 인구 비율보다 더 높다. 즉 1990년대 출산력 상승으로 다시 0~4세 인구가 증가하여 5~9세 인구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 2015년 인구구조는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출산율 때문에 2000년대부터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총조사인구를 보면 0~4세는 4.13퍼센트, 5~9세는 4.28퍼센트를 차지하였다. 2015년에는 0~4세가 4.02퍼센트, 5~9세가 3.85퍼센트로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총조사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40~50대 인구가 311만 명(32.6퍼센트)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30대 미만 인구와 60대 이상 인구가 적은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보이고 있다.

---

## 02 성별 인구구조

---

###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 2015년 서울의 성비는 96.3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는 1980년과 1985년 100명 미만이었다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명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다 2005년부터 서울의 성비는 100명 미만을 기록하며, 2005년 98명,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96명

| 그림 3-3 |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표 3-1 |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5)

단위 :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99.3	99.0	100.8	100.9	100.7	98.2	96.3	96.3
수도권	99.8	99.7	101.0	101.4	101.3	99.7	98.5	99.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을 기록한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성비가 낮아지나, 서울의 여성 대비 남성 인구 수의 감소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 2015년 서울에서 성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104.4명)로 나타났다. 이어 관악구(101.7명), 영등포구(100.5명), 구로구(100.5명), 동대문구(98.7명)가 2~5위를 기록했다. 금천구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 존재하고 있어 남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의 성비가 모두 100명 이상인 것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 남성 노동자가 많은 까닭이다.

| 표 3-2 | 서울 자치구별 성비 변화(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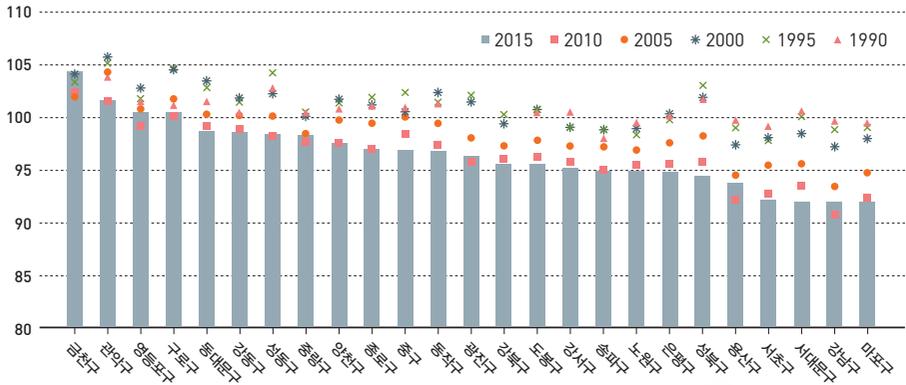
단위 :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금천구				103.3	104.1	101.9	102.3	104.4
관악구	101.7	101.4	103.9	105.1	105.7	104.2	101.5	101.7
영등포구	97.9	98.2	101.5	101.7	102.8	100.7	99.2	100.5
구로구	97.6	98.6	101.2	104.6	104.5	101.6	100.1	100.5
동대문구	100.3	99.2	101.5	102.8	103.4	100.2	99.1	98.7
강동구	99.4	98.5	100.4	101.4	101.8	100.1	98.8	98.6
성동구	100.7	101.0	102.8	104.2	102.2	100.0	98.2	98.4
종랑구			100.4	100.5	100.1	98.3	97.7	98.3
양천구			100.8	101.3	101.7	99.6	97.5	97.6
종로구	96.6	96.3	101.1	101.9	101.1	99.3	96.9	97.0
중구	99.6	98.2	100.9	102.3	100.5	99.9	98.3	96.9
동작구			101.3	101.3	102.3	99.3	97.3	96.8
광진구				102.0	101.5	97.9	95.8	96.3
강북구				100.2	99.3	97.2	96.0	95.6
도봉구	100.1	99.5	100.5	100.6	100.6	97.7	96.2	95.6
강서구	100.1	98.9	100.5	99.0	98.9	97.2	95.7	95.2
송파구			98.0	98.8	98.8	97.1	94.9	95.0
노원구			99.5	98.3	98.9	96.8	95.3	94.9
은평구	99.2	99.6	100.2	99.8	100.2	97.5	95.5	94.7
성북구	98.4	99.3	101.7	103.0	101.8	98.1	95.7	94.4
용산구	98.1	97.1	99.7	99.0	97.3	94.4	92.1	93.8
서초구			99.2	97.8	98.0	95.3	92.6	92.2
서대문구	99.0	97.8	100.6	100.0	98.4	95.5	93.4	92.0
강남구	97.4	97.9	99.7	98.8	97.2	93.3	90.7	92.0
마포구	98.9	97.6	99.5	99.0	97.9	94.6	92.3	91.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그림 3-4 | 서울 자치구별 성비 변화(1990~201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0~2015)

### 출생 시 성비의 변화

- 서울시 출생 시 성비는 지속 감소하여 2015년 104.3명을 기록

전국적으로 1990년대에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다. 1990년 출생 시 성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116.5명이고 수도권은 112.2명, 그리고 서울은 113.3명이다. 대개 자연 상태에서 출생 시 성비는 102~107명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출생 시 성비는 거의 자연 상태의 성비로 돌아왔다. 2015년 현재

| 그림 3-5 | 서울과 수도권의 출생 시 성비 변화(1990~201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90~2015)

전국의 출생 시 성비는 105.3명, 수도권 105.4명, 서울은 104.3명 수준으로 정상 성비 범위 내에 있다.

● 셋째 자녀 이상 순위의 출생 시 성비는 남아선호 현상을 반영

출생 순위별로 출생 시 성비를 보면 서울의 경우 1990년에 첫째 자녀의 출생 시 성비는 108.3명, 둘째 자녀 출생 시 성비는 113.0명이었다. 그런데 셋째 자녀의 출생 시 성비는 199명이었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여아 1명이 태어나면 남아 2명이 태어날 정도로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최소한 남아 1명은 있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둘째 자녀까지도 아들을 얻지 못한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에서는 꼭 아들을 낳겠다는 태도가 반영되었다.

●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셋째 자녀의 성비는 크게 감소

1994년 셋째 자녀의 성비는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2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130명 안팎까지 떨어졌다. 1998년 성비는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전후에는 110명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15년에는 105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표 3-3 |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 순위별 성비 변화(1990~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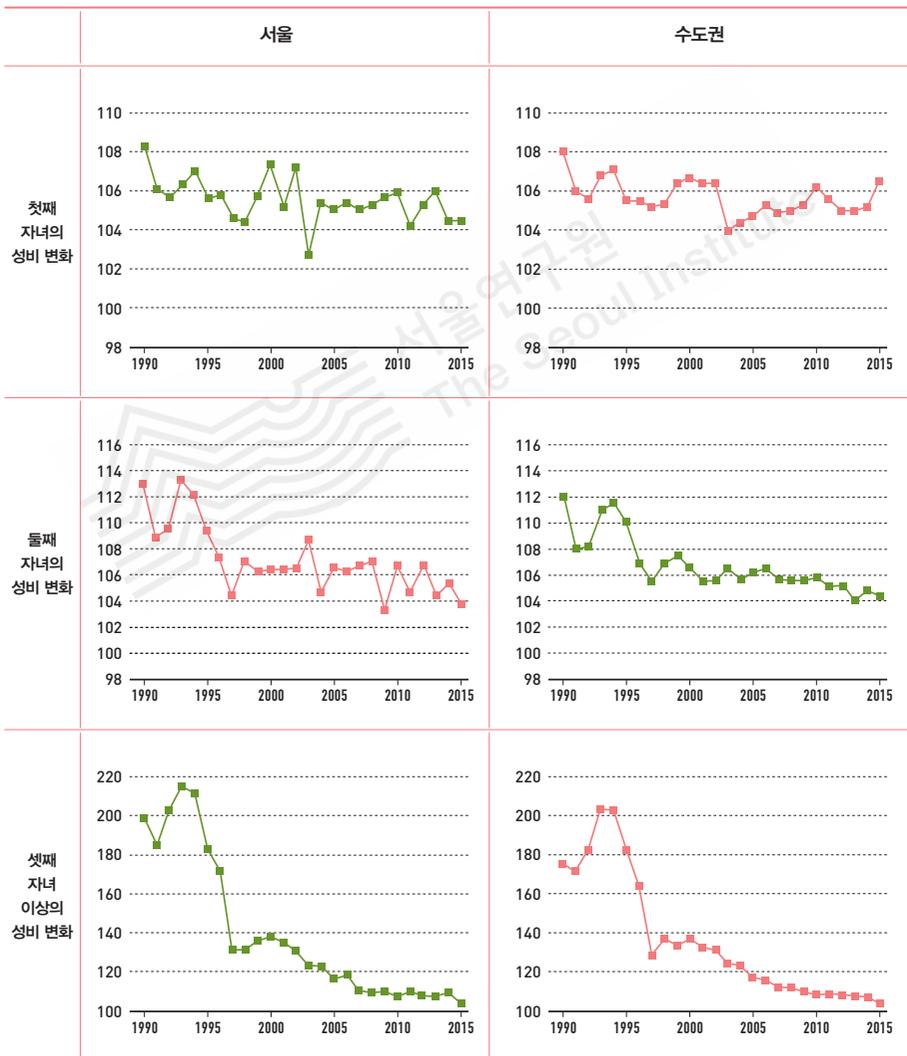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전체 출생아	113.3	110.8	108.9	106.6	106.6	104.3
	첫째 자녀	108.3	105.6	107.3	105.1	105.9	104.7
	둘째 자녀	113.0	109.4	106.4	106.6	106.7	103.7
	셋째 자녀 이상	199.2	182.9	137.9	116.5	107.4	104.2
수도권	전체 출생아	112.2	111.6	109.0	106.6	106.5	105.4
	첫째 자녀	108.1	105.5	106.7	104.7	106.2	106.5
	둘째 자녀	112.0	110.1	106.6	106.2	105.8	104.4
	셋째 자녀 이상	173.8	182.7	137.1	117.5	108.3	103.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90~2015)

1996년까지는 서울의 셋째 자녀 성비가 수도권이나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1997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다. 1997년 이후에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전국의 셋째 자녀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 성비는 전국 105.6명, 서울 104.2명, 수도권 103.7명이다.

| 그림 3-6 |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 순위별 출생 시 성비 변화(1990~201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90~2015)

# 03 연령별 인구구조

## ● 고령인구는 지속적 증가, 유소년인구는 지속적 감소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인구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의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1980년 31.3퍼센트에서 2015년 12.1퍼센트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2.6퍼센트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유소년인구는 수도권의 경우 31.8퍼센트에서 14.0퍼센트, 전국의 경우 34퍼센트에서 13.9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고령인구는 수도권의 경우 2.9퍼센트에서 11.4퍼센트, 전국의 경우 3.8퍼센트에서 13.2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인구 비율과 서울의 고령인구 12.6퍼센트를 비교하면 서울은 고령화 수준이 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며 15~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연령층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이다.

| 그림 3-7 | 서울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표 3-4 | 서울과 수도권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14세 이하	31.3%	28.5%	24.7%	21.6%	18.6%	16.7%	13.9%	12.1%
	15~64세	66.2%	68.7%	71.8%	74.2%	76.1%	76.2%	76.7%	75.4%
	65세 이상	2.5%	2.9%	3.5%	4.2%	5.3%	7.1%	9.3%	12.6%
수도권	14세 이하	31.8%	29.1%	25.6%	23.8%	21.5%	19.3%	16.2%	14.0%
	15~64세	65.4%	67.7%	70.5%	71.8%	73.0%	73.6%	74.9%	74.5%
	65세 이상	2.9%	3.2%	3.9%	4.5%	5.5%	7.1%	9.0%	11.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학령인구의 변화, 200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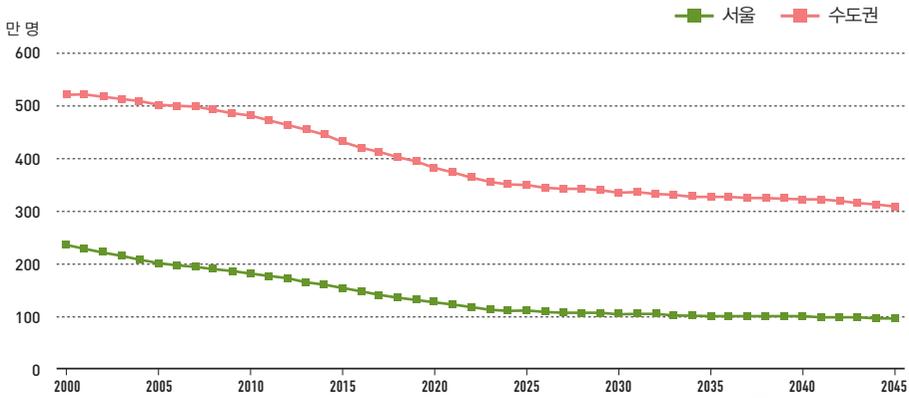
- 2015년 현재 서울의 학령인구 규모는 154만 명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각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지를 학령인구라고 칭한다. 서울시 학령인구 규모는 2000년에는 234만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154만 명으로, 지난 15년 사이에 80만 명 감소하였다.

- 서울의 학령인구는 2025년 110만 명, 2045년 95만 명까지 감소 예상

인구총조사 결과 2015년 서울의 학령인구는 154만 명이지만,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110만 명, 2045년에는 9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은 저출산 현상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는 큰 폭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8 | 서울과 수도권의 학령인구 변화(2000~2045)



자료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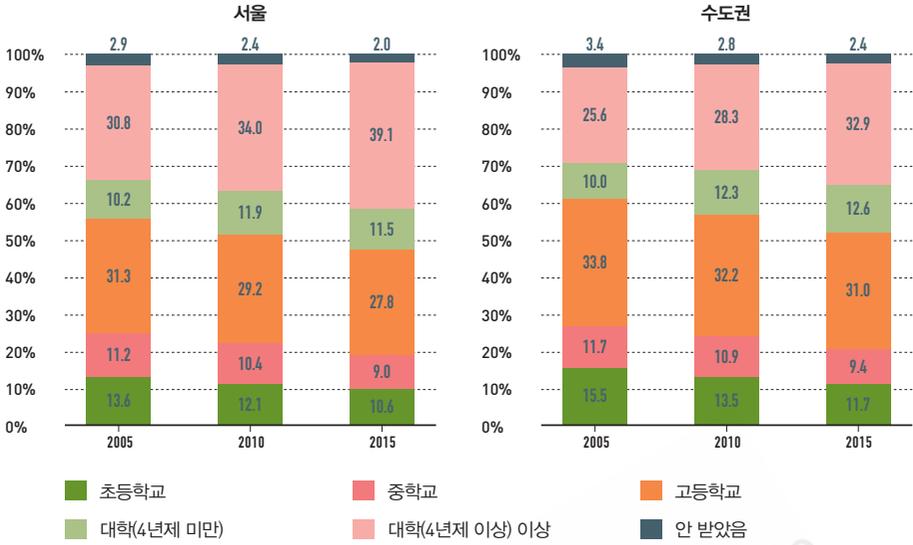
## 04 교육 수준별 인구구조

### ●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은 서울시 인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교육은 인적자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한 인구 집단의 교육 수준은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고, 인적자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육 수준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인구의 질적 수준은 다른 어느 지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2005년에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서울시 인구의 30.8퍼센트였는데, 2010년 34퍼센트, 2015년 39.1퍼센트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2005년에 대졸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25.6퍼센트였고, 2010년 28.3퍼센트, 2015년 32.9퍼센트였다. 수도권과 비교하여도 서울의 고등교육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9 |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 수준별 인구 비중(2005, 2010, 2015)



\*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하며, 해당 교육 수준의 재학, 중퇴, 수료, 졸업 상태를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2015)

| 표 3-5 |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 수준별 인구와 비중(2005, 2010, 2015)

	서울			수도권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초등학교	명	1,252,384	1,105,890	962,222	3,273,060	2,991,738	2,691,912
	%	13.6	12.1	10.6	15.5	13.5	11.7
중학교	명	1,033,718	950,644	816,155	2,468,459	2,415,164	2,174,428
	%	11.2	10.4	9.0	11.7	10.9	9.4
고등학교	명	2,887,186	2,677,977	2,528,037	7,144,331	7,113,982	7,141,414
	%	31.3	29.2	27.8	33.8	32.2	31.0
대학 (4년제 미만)	명	940,581	1,092,359	1,042,682	2,114,330	2,724,266	2,898,886
	%	10.2	11.9	11.5	10.0	12.3	12.6
대학교 (4년제 이상) 이상	명	2,833,827	3,116,526	3,555,173	5,413,369	6,254,965	7,566,317
	%	30.8	34.0	39.1%	25.6	28.3	32.9
안 받았음	명	266,476	216,985	183,982	727,615	625,959	558,053
	%	2.9	2.4	2.0	3.4	2.8	2.4
계	명	9,214,172	9,160,381	9,088,251	21,141,164	22,126,074	23,031,010
	%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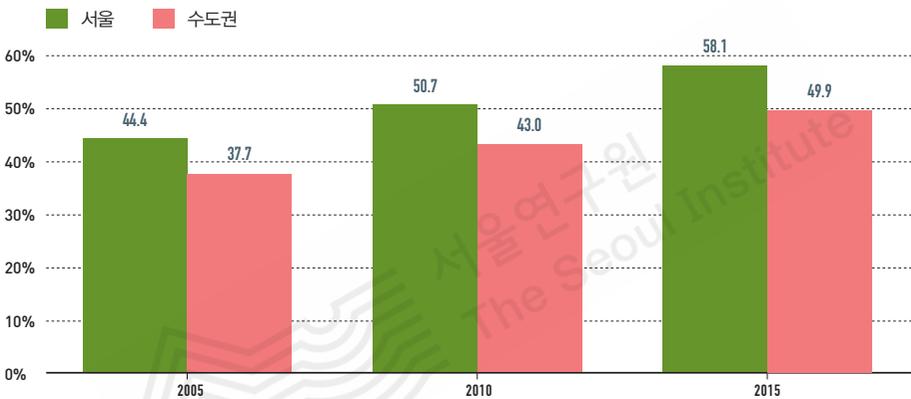
\*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2015)

● 20~49세 인구의 58.1퍼센트가 대졸 이상 학력층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에서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20~49세 연령층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 비율은 5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이 연령층의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은 44.4퍼센트였지만 2015년에는 58.1퍼센트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49.9퍼센트와 비교하면 서울에 고학력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10 |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연령층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중



\* 주 : 2005, 2010년도 전수부문, 2015년도 표본부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2015)

| 그림 3-11 | 2015년 서울과 수도권의 성별 대졸 이상 인구 비중



\*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고학력층의 급격한 증가는 낮은 출산력·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연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낮은 출산력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의 상승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수준 향상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력을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 05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1980~2015

- **2010년에 비해 2015년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1980년 서울시 부양인구 규모는 56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6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 인구의 65퍼센트, 전국 인구의 62퍼센트가 부양인구였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합으로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년 피부양인구는 증가했다. 2010년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770만 명이고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6.7퍼센트에 달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이 비율은 74.9퍼센트로 서울보다 낮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72.8퍼센트에 그쳤다. 즉 2010년 서울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절정에 다다라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 2015년 서울의 부양인구는 75.4퍼센트, 수도권의 부양인구는 61.3퍼센트로 2010년에 견줘 서울과 수도권 모두 감소하였다.

---

\* 부양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정의한다. 반면에 피부양인구는 유소년 피부양인구와 노년 피부양인구로 나뉘는데,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이고, 노년 피부양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된다.

표 3-6 |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변화(1980~2015)

	서울				수도권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980	5,638,269	66.2	2,878,181	33.8	8,853,779	65.4	4,690,225	34.6
1985	6,678,573	68.7	3,046,874	31.4	10,804,804	67.7	5,158,368	32.3
1990	7,516,847	71.8	2,956,405	28.2	12,931,464	70.5	5,410,681	29.5
1995	7,678,526	74.2	2,663,698	25.8	14,646,132	71.7	5,767,725	28.3
2000	7,670,195	76.1	2,408,239	23.9	15,882,666	73.0	5,864,675	27.0
2005	7,631,239	76.2	2,380,085	23.8	17,077,530	73.6	6,124,605	26.4
2010	7,709,438	76.7	2,341,070	23.2	18,230,448	74.9	6,109,046	25.1
2015	7,210,830	75.4	2,356,366	24.6	14,965,774	61.3	9,450,452	38.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2015~2045

- 2045년까지 서울의 부양인구는 감소, 피부양인구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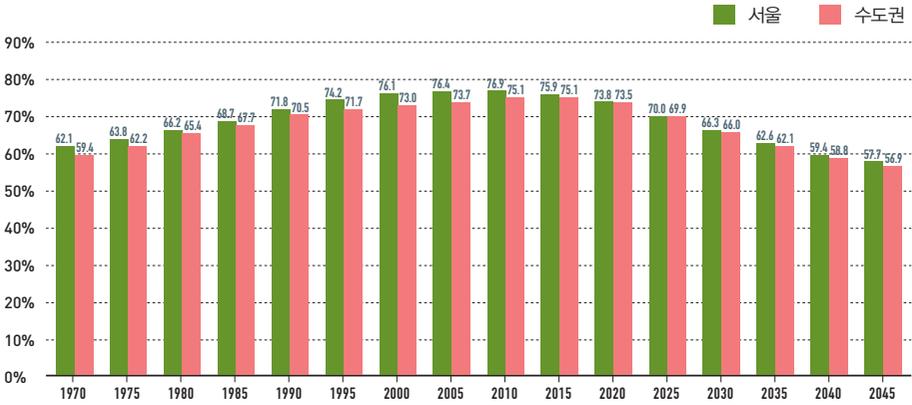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부양인구 비율이 76퍼센트대에 들어선 때가 2000년이다. 이때 부터 10년 동안 부양인구는 76퍼센트대를 유지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2011년(77.0 퍼센트) 부양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 가고,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비율은 줄어들며, 대신 피부양인구의 규모와 비율은 증가하여, 고령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양비, 1970~2045

- 2015년 기준 서울의 총부양비는 31.8

저출산은 유소년인구의 규모를 줄이고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늘려 결국에는 고령 인구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효과가 고령화에 반영되기까

| 그림 3-12 | 서울과 수도권의 5년 단위 부양인구 비중 변화



자료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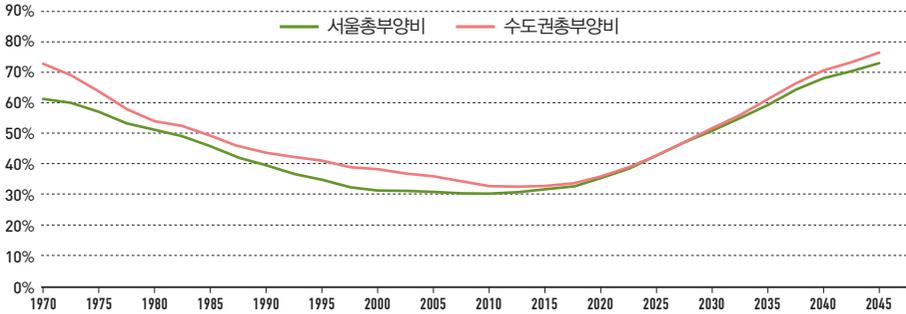
| 표 3-7 |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추계(2015~2045)

	서울				수도권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2015	7,543,476	75.9	2,397,686	24.1	18,960,565	75.1	6,286,482	24.9
2020	7,107,700	73.8	2,527,414	26.2	18,987,311	73.5	6,847,061	26.5
2025	6,685,641	70.0	2,859,638	30.0	18,366,471	69.9	7,902,849	30.1
2030	6,247,878	66.3	3,180,922	33.7	17,482,359	66.0	8,998,663	34.0
2035	5,797,770	62.6	3,466,620	37.4	16,416,260	62.1	10,005,244	37.9
2040	5,387,005	59.4	3,676,039	40.6	15,331,979	58.8	10,756,838	41.2
2045	5,084,691	57.7	3,728,459	42.3	14,502,944	56.9	11,002,964	43.1

자료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지 시간 지체가 있어, 저출산이 지속되면 유소년부양비의 감소 정도가 노년부양비의 증가보다 높아 총부양비는 감소한다. 서울의 총부양비는 1980년에는 51.0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총부양비가 31.8로 198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그림 3-13 |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양비 변화(1970~2045)



자료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 표 3-8 |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변화(1970~2045)

산출식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고령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단위		단위		단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1970	61.1	72.8	58.4	68.8	2.7	4.0
1975	56.8	63.3	53.5	58.8	3.3	4.5
1980	51.0	53.9	47.3	49.3	3.7	4.6
1985	45.6	49.1	41.5	44.1	4.2	5.1
1990	39.3	43.3	34.4	37.5	4.9	5.7
1995	34.7	41.1	29.0	34.8	5.6	6.3
2000	31.4	38.1	24.4	30.6	7.0	7.6
2005	31.0	36.0	21.4	26.5	9.2	9.5
2010	30.0	33.1	18.1	21.5	12.0	11.6
2015	31.8	33.0	15.8	18.4	16.0	14.6
2020	35.5	35.9	14.7	17.1	20.8	18.8
2025	42.8	43.1	15.0	17.2	27.8	25.9
2030	50.9	51.7	15.5	17.6	35.4	34.2
2035	59.8	61.4	16.3	18.5	43.5	42.9
2040	68.3	70.7	16.5	18.7	51.8	52.0
2045	73.3	76.5	15.9	18.1	57.4	58.4

\* 주 : 1970~2015년까지는 확정인구, 2016년 이후는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중위추계 기준

자료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인 백분비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율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

- 노년부양의 부담이 유소년부양의 부담을 앞질러

2015년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보다 감소하였다. 저출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서울의 유소년부양비는 16.2이고 노년부양비는 15.1이었으나, 1년 후인 2015년에는 유소년부양비가 15.8이고 노년부양비는 16.0이 되었다. 2045년에는 서울의 총부양비가 73.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부양비의 78퍼센트는 노년부양비에 기인한다.

---

## 06 혼인인구의 변화

---

### 서울시 혼인인구 변화

-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 상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늘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 상태 구성도 크게 변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 상태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1980년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은 37.7퍼센트, 유배우는 55.7퍼센트, 사별은 5.9퍼센트, 이혼은 0.8퍼센트였다. 35년이 지난 2015년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 비율은 35.4퍼센트, 유배우 비율은 53.4퍼센트로 198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 지난 3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이혼율의 상승

지난 35년 동안 미혼과 유배우 상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혼 상태의 인구는 1980년 0.6퍼센트에서 2015년 5.0퍼센트로 4.4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다.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도 의미하지만 공식 통계로는 재혼이 유배우 상태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

표 3-9 | 서울시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중 변화(1980~20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계	명	5,748,352	6,906,420	7,977,882	8,051,161	8,035,723	8,143,250	8,276,179	8,393,83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2,169,121	2,527,497	2,838,759	2,818,650	2,810,217	2,882,222	2,952,687	2,974,906
	%	37.7	36.6	35.6	35.0	35.0	35.4	35.7	35.4
유배우	명	3,201,764	3,945,479	4,617,764	4,665,689	4,593,286	4,526,590	4,492,568	4,481,669
	%	55.7	57.1	57.9	58.0	57.2	55.6	54.3	53.4
사별	명	341,838	382,404	446,406	466,542	456,965	481,211	495,075	519,388
	%	5.9	5.5	5.6	5.8	5.7	5.9	6.0	6.2
이혼	명	35,451	48,483	74,640	97,933	175,148	253,227	335,849	417,869
	%	0.6	0.7	0.9	1.2	2.2	3.1	4.1	5.0

\* 주 : 6세 이상 내국인(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 조사구) 대상,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표본조사 혼인상태 '동거', '별거'는 각각 '배우자 있음', '이혼'에 포함

표 3-10 | 서울시 남성의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율 변화(1980~20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계	명	2,802,440	3,363,668	3,944,926	3,994,024	3,986,199	3,993,031	4,025,875	4,089,11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1,187,689	1,380,095	1,576,281	1,579,924	1,574,876	1,576,217	1,592,218	1,588,213
	%	42.4	41.0	40.0	39.6	39.5	39.5	39.5	38.8
유배우	명	1,569,596	1,927,909	2,285,582	2,317,731	2,283,664	2,244,277	2,227,249	2,263,110
	%	56.0	57.3	57.9	58.0	57.3	56.2	55.3	55.3
사별	명	35,794	38,887	55,449	56,654	56,122	67,305	68,436	71,675
	%	1.3	1.2	1.4	1.4	1.4	1.7	1.7	1.8
이혼	명	9,268	14,661	27,302	37,781	71,514	105,232	137,972	166,117
	%	0.3	0.4	0.7	0.9	1.8	2.6	3.4	4.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표본조사

| 표 3-11 | 서울시 여성의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율 변화(1980~20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계	명	2,945,912	3,542,752	4,032,956	4,057,137	4,049,524	4,150,219	4,250,304	4,304,71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981,432	1,147,402	1,262,478	1,238,726	1,235,341	1,306,005	1,360,469	1,386,693
	%	33.3	32.4	31.3	30.5	30.5	31.5	32.0	32.2
유배우	명	1,632,168	2,017,570	2,332,182	2,347,958	2,309,622	2,282,313	2,265,319	2,218,559
	%	55.4	56.9	57.8	57.9	57.0	55.0	53.3	51.5
사별	명	306,044	343,517	390,957	409,888	400,843	413,906	426,639	447,713
	%	10.4	9.7	9.7	10.1	9.9	10.0	10.0	10.4
이혼	명	26,183	33,822	47,338	60,152	103,634	147,995	197,877	251,752
	%	0.9	1.0	1.2	1.5	2.6	3.6	4.7	5.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표본조사

에 유배우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만 할 수 있다. 재혼으로 이혼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상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 상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 20~49세 연령층의 미혼인구 변화

### ● 서울의 가임기 미혼인구 비율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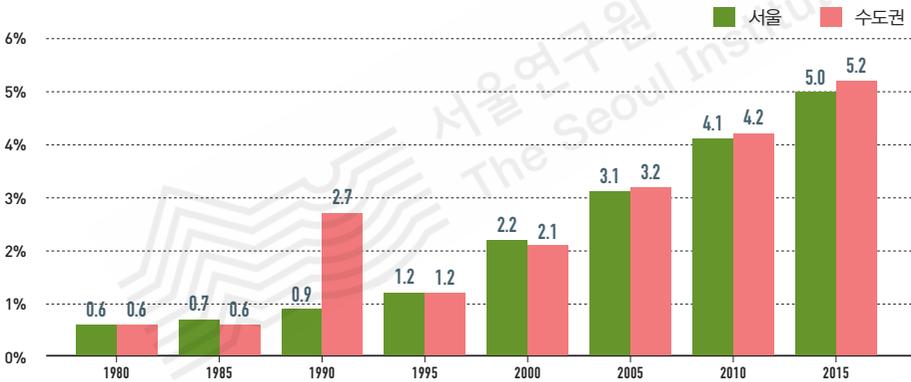
20~49세까지 가임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미혼 비율은 1990년에 31.6퍼센트였고, 이후 2000년 35.5퍼센트, 2010년 46.4퍼센트, 2015년 50.4퍼센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990년 29.6퍼센트, 2000년 29.6퍼센트로 큰 증가가 없다가 2010년 39.8퍼센트, 2015년에는 44.4퍼센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가임 시기 연령층 인구 가운데 2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에 있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비율인 44.4퍼센트가 미혼 상태에 있다.

| 그림 3-14 |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미혼인구의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표본조사

| 그림 3-15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 인구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표본조사

## 이혼인구의 변화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인구는 지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서울의 이혼율은 1980년 0.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는데, 1990년 0.9퍼센트, 2000년 2.2퍼센트, 2005년 3.1퍼센트, 2010년 4.1퍼센트, 2015년 5.0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이혼율도 서울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율의 변화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면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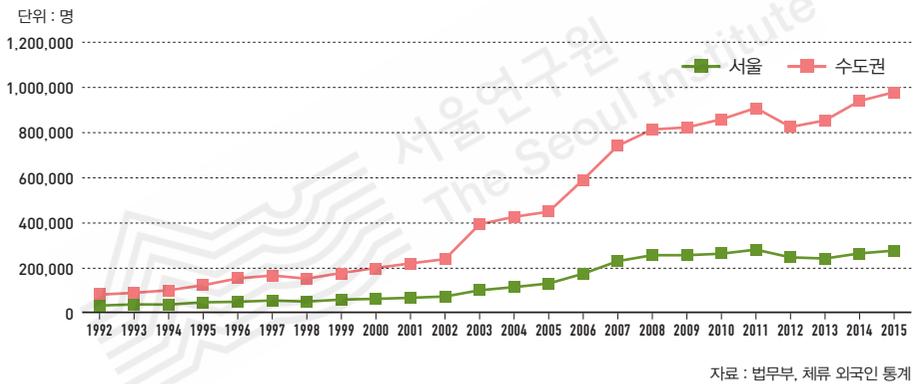
# 07 외국인 인구

## 외국인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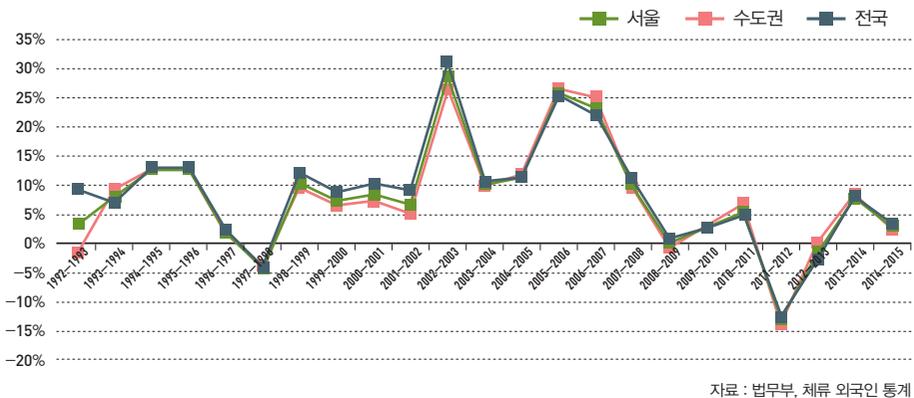
-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1년 27만 9,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5년 서울의 외국인은 총 27만 4,957명으로 여

| 그림 3-16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수 변화(1992~2015)



| 그림 3-17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증감률(199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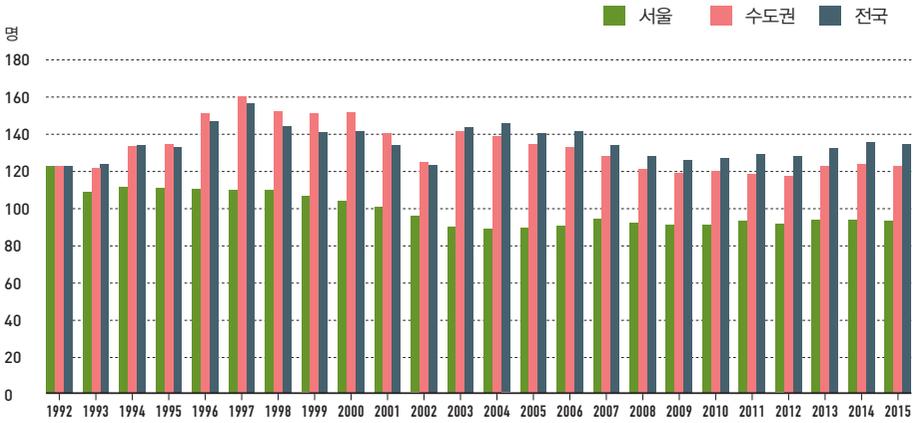
	서울			수도권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1992	34,632	19,095	15,537	45,917	25,296	20,621
1993	35,965	18,793	17,172	52,311	28,742	23,569
1994	39,246	20,727	18,519	63,185	36,154	27,031
1995	45,072	23,745	21,327	76,175	43,721	32,454
1996	51,776	27,208	24,568	99,449	59,873	39,576
1997	52,923	27,736	25,187	112,338	69,299	43,039
1998	50,990	26,731	24,259	103,880	62,718	41,162
1999	57,189	29,521	27,668	120,320	72,416	47,904
2000	61,920	31,581	30,339	139,142	83,917	55,225
2001	67,908	34,045	33,863	152,407	89,180	63,227
2002	73,228	35,869	37,359	163,915	91,152	72,763
2003	102,882	48,786	54,096	288,753	169,379	119,374
2004	114,685	54,066	60,619	312,505	182,030	130,475
2005	129,660	61,246	68,414	317,285	182,307	134,978
2006	175,036	83,374	91,662	415,297	237,258	178,039
2007	229,072	111,467	117,605	508,566	285,717	222,849
2008	255,207	122,923	132,284	560,555	307,149	253,406
2009	255,749	122,090	133,659	570,409	310,068	260,341
2010	262,902	125,483	137,419	598,156	326,451	271,705
2011	279,220	134,655	144,565	631,884	343,201	288,683
2012	247,108	118,329	128,779	582,664	315,448	267,216
2013	244,410	118,482	125,928	609,507	335,875	273,632
2014	266,360	129,245	137,115	673,849	372,793	301,056
2015	274,957	132,607	142,350	702,291	386,946	315,345

\* 주 : 연말 기준, 2011년 고령시에는 구 미상 남자 1명 포함  
2007년까지는 각 시도, 2008년 이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

성(14만 2,350명)이 남성(13만 2,607명)보다 많았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수도권, 서울의 증감 추세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의 증감률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도권의 증감률이 가장 높았다.

| 그림 3-18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인구 성비(1992~2015)



\* 주: 성비: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자료: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1992~2015)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전국의 증감률이 수도권과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5년 서울의 외국인 등록 인구는 전체 등록 인구의 2.7퍼센트

체류 외국인 등록 인구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27만 4,957명으로 전체 등록 인구(내국인+외국인)의 2.7퍼센트를 차지한다. 1995년 4만 5,072명과 비교했을 때 2015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6.1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인구의 성비 변화**

● 2015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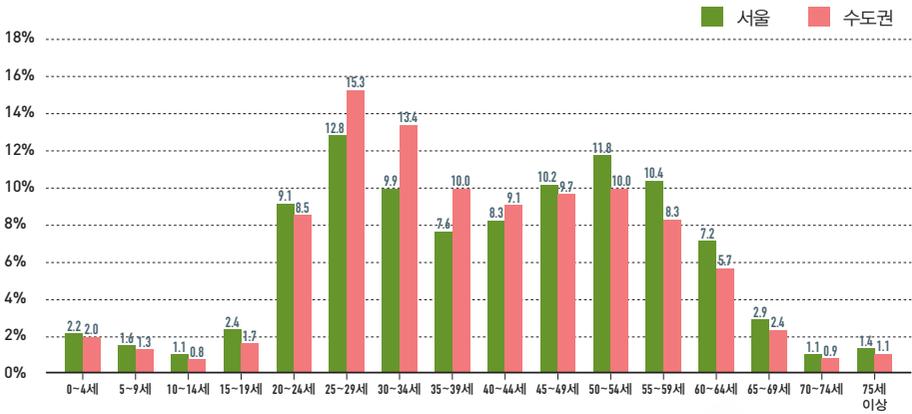
1992년부터 시작된 자료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모두 초기에는 남성 외국인이 여성 외국인보다 유입되는 수가 많았다. 1992년 자료로는 서울과 수도권 모두 외국인의 성비가 123명 정도로 매우 비슷하고, 남성 초과 이민 현상을 보여 준다. 그러나 2002년 자료부터 서울의 외국인 성비는 96.0명으로 여성 외국인이 남성 외국인보다 많아졌다. 즉 서울에 여성 외국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과 전국은 여전히 남성 외국인이 여성보다 많다.

	서울	수도권	전국
1992	122.9	122.7	122.6
1993	109.4	121.9	124.4
1994	111.9	133.8	134.4
1995	111.3	134.7	133.2
1996	110.7	151.3	147.1
1997	110.1	161.0	156.7
1998	110.2	152.4	144.3
1999	106.7	151.2	141.2
2000	104.1	152.0	141.8
2001	100.5	141.0	134.4
2002	96.0	125.3	123.9
2003	90.2	141.9	143.6
2004	89.2	139.5	145.9
2005	89.5	135.1	141.0
2006	91.0	133.3	141.6
2007	94.8	128.2	134.2
2008	92.9	121.2	128.4
2009	91.3	119.1	126.2
2010	91.3	120.1	127.5
2011	93.1	118.9	129.6
2012	91.9	118.0	128.4
2013	94.1	122.7	133.0
2014	94.3	123.8	135.6
2015	93.2	122.7	134.8

\* 주 : 연말 기준, 2011년 고양시에는 구 미상 남자 1명 포함  
 2007년까지는 각 시도, 2008년 이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성비 :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자료 :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

| 그림 3-19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연령구조(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외국인의 연령구조

- 서울과 수도권 모두 25~29세 외국인이 많이 거주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에 따르면, 서울은 25~29세 외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54세(11.8퍼센트), 55~59세(10.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29세 외국인이 15.3퍼센트로 가장 많고, 30~34세가 13.4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0~19세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 2015년 서울의 성비는 96.3명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비는 1980년과 1985년 100명 미만이었다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명 이상을 기록한다. 이후 2005년부터 서울의 성비는 100명 미만을 기록한다. 2005년에는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는 98명,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96명을 기록한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성비가 낮아지나, 서울의 여성 대비 남성 인구수의 감소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 서울시 출생 시 성비는 지속 감소

전국적으로 1990년대에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다. 1990년 출생 시 성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116.5명이고 수도권은 112.4명, 그리고 서울은 113.3명이다.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출생 시 성비는 102~107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출생 시 성비는 거의 자연 상태의 성비로 돌아왔으며, 2015년 출생 시 성비는 서울이 104.3명, 수도권은 105.4명, 전국은 105.3명이다.

- 셋째 자녀 이상 순위의 출생 시 성비는 감소 추세

서울 인구의 출생 순위별로 출생 시 성비를 보면, 1990년에 첫째 자녀의 출생 시 성비는 108.3명, 둘째 자녀 출생 시 성비는 113.0명이었다. 그런데 셋째 자녀의 출생 시 성비는 199명이었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여아 1명이 태어나면 남아 2명이 태어날 정도로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1994년부터 1997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셋째 자녀 이상의 성비는 104.2명으로 나타났다.

- 고령인구는 지속적 증가, 유소년인구는 지속적 감소

서울의 유소년인구는 1980년 31.3퍼센트에서 2015년 12.1퍼센트로, 지난 30년 동안 크

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2.6퍼센트까지 지난 3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유소년인구의 경우 수도권은 31.8퍼센트에서 14.0퍼센트, 전국은 34퍼센트에서 13.9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고령인구는 수도권이 2.9퍼센트에서 11.4퍼센트, 전국이 3.8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인구의 13.2퍼센트와 서울의 고령인구 12.6퍼센트를 비교하면 서울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연령층 인구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이다.

## 학령인구와 교육 수준

### ● 서울의 학령인구 규모는 계속 감소 예상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지를 학령인구라고 한다. 각급 학교별 연령층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2015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154만 명이다. 2000년 서울시의 학령인구 규모는 234만 명이었다. 지난 15년 사이에 서울시의 학령인구는 무려 8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후 학령인구 규모는 2025년 110만 명, 2045년 95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 ● 20~49세 인구의 58.1퍼센트가 대졸 이상 학력층

서울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에서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20~49세 연령층의 교육 수준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인구 비율은 거의 60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대졸 이상자는 2005년 44.4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기준 58.1퍼센트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대졸 이상자 비율 49.9퍼센트와 비교해 보면 서울에 고학력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 2009년 서울의 부양인구(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

1970년 서울의 부양인구 규모는 353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6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 인구의 59퍼센트가 부양인구였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노년 피부양인구는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754만 명이고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5.9퍼센트이다.

- 2015년 기준 서울의 총 부양비는 24.1퍼센트

저출산은 유소년인구의 규모를 줄이고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늘려 결국에는 고령 인구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효과가 고령화에 반영되기까지 시간 지체가 있어, 저출산이 지속되면 유소년부양비의 감소 정도가 노년부양비의 증가보다 높아 총부양비는 감소한다.

- 2010년을 기점으로 부양인구 비율 감소

서울은 1970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부양인구 비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45년에는 57.7퍼센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도 2010~2015년을 기점으로 부양인구 비율이 하락하여, 2045에는 56.9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혼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 2015년 기준 지난 3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이혼 비율의 상승

저출산과 고령화에 사로잡히면 이혼의 증가로 이혼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5년 동안 미혼과 유배우 상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혼 상태의 인구는 1980년 0.6퍼센트에서 2015년 5.0퍼센트로 4.4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다.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도 의미하지만 공식 통계로는 재혼이 유배우 상태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배우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재혼으로 이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상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 상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 **서울의 가임기 미혼인구 비율은 크게 증가**

20~49세까지의 가임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보면, 서울의 미혼 비율은 1990년에 31.6퍼센트였고, 2000년 35.5퍼센트, 2010년 46.4퍼센트, 2015년 44.4퍼센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미혼 비율은 1990년 29.6퍼센트, 2000년 29.6퍼센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2010년 39.8퍼센트, 2015년 44.4퍼센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1년 27만 9,220명에서 2012년에는 3만 2,112명이 감소하여 24만 7,108명이었으나, 2014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총 27만 4,957명을 기록하였다. 체류 외국인 등록 인구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수는 27만 4,957명으로 전체 등록 인구(내국인+외국인)의 2.7퍼센트를 차지한다. 1995년 4만 5,072명과 비교했을 때 2015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6.1배나 증가했다.

- **서울과 수도권 모두 25~29세 외국인이 많이 거주**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은 25~29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54세(11.8퍼센트), 55~59세(10.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29세 외국인이 15.3퍼센트로 가장 많고, 30~34세가 13.4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0~19세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인구이동

## 01 거주지 이동

### 서울 인구 출생지 분포

- 서울 인구의 출생지는 서울 > 경기 > 전남 순

지난 5년간 서울 거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 변화를 보면, 서울 지역 출생 인구 구성비가 2010년 46.5퍼센트에서 2015년 47.9퍼센트로 증가하였다. 2015년 서울 인구 중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생 구성비는 경기(7.9퍼센트), 전남(7.6퍼센트), 전북(5.8퍼센트), 충남(5.2퍼센트), 경북(4.8퍼센트) 순으로 높다.

### 서울 전출입인구

- 인구이동으로 인한 서울 인구감소 (전입인구 < 전출인구)

서울 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2만 명씩 전출입 이동 때문에 감소하였다. 인구이동 흐름은 1년을 기준으로 비

| 표 4-1 | 서울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201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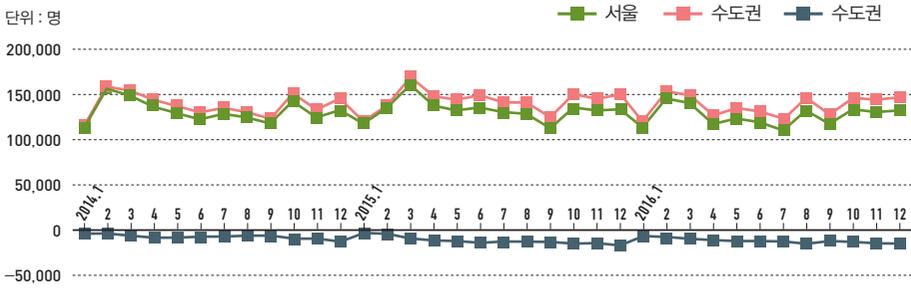
단위 : %, %p

출생지	2010(A)	2015(B)	(B-A)
전 국	100.0	100.0	-
서 울	46.5	47.9	1.5
부 산	2.4	2.6	0.1
대 구	1.6	1.7	0.1
인 천	1.4	1.5	0.1
광 주	1.4	1.4	0.1
대 전	0.9	1.0	0.1
울 산	0.4	0.5	0.0
세 종	-	0.1	-
경 기	7.9	7.9	-0.1
강 원	3.5	3.3	-0.1
충 북	3.1	3.0	-0.1
충 남	5.8	5.2	-0.6
전 북	6.3	5.8	-0.5
전 남	8.1	7.6	-0.5
경 북	5.0	4.8	-0.3
경 남	3.2	3.1	-0.1
제 주	0.5	0.5	-0.0
기 타*	1.8	2.2	0.3

\* 기타는 북한 또는 외국 출생자

교적 주기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2~3월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후 감소하다가 9~10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서울 전입인구는 158만 9,431명, 서울 전출인구는 172만 6,687명으로 순이동은 -13만 7,256명이다. 즉 인구이동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2015년에 13만 7,256명이 감소하였다.

| 그림 4-1 | 서울 인구 총전입, 총전출 및 순이동(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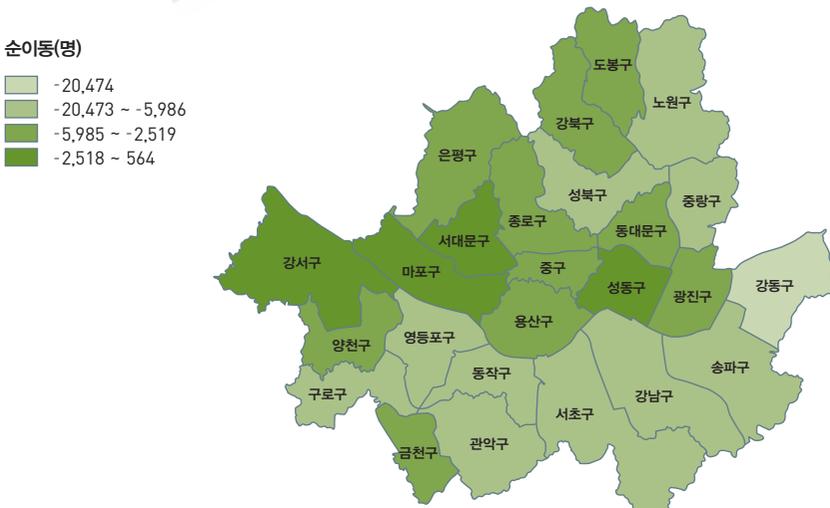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대부분 자치구에서 순이동이 감소

2015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자료를 이용해 자치구별 전출입인구를 살펴보면, 서대문구와 강서구는 총전입이 총전출보다 약간 많았으나 그 밖의 자치구들은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크기 때문에 순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강동구 총전입 인구는 7만 3,000명, 총전출인구는 9만 4,000명으로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노원구는 총전입인구 7만 3,000명, 총전출인구 8만 3,000명으로 1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 그림 4-2 | 서울 순이동(전입-전출) 현황(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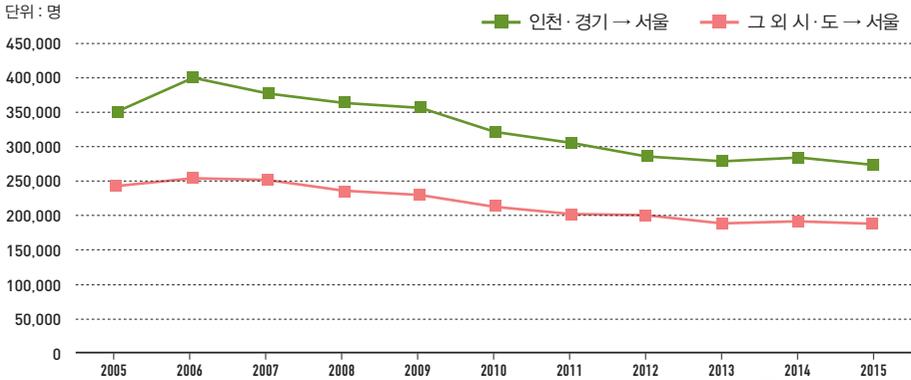


	총전입 ①+②+④	총전출 ①+③+⑤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순이동
			구 내 이동 ①	구간 이동		전입 ④	전출 ⑤	
				전입 ②	전출 ③			
서울시	1,589,431	1,726,687	524,267	605,262	605,262	459,902	597,158	-137,256
종로구	24,951	27,470	4,617	11,846	14,426	8,488	8,427	-2,519
중구	20,078	22,950	4,070	10,073	12,126	5,935	6,754	-2,872
용산구	37,064	41,361	9,049	16,549	18,532	11,466	13,780	-4,297
성동구	48,105	49,091	12,008	23,324	21,935	12,773	15,148	-986
광진구	58,871	63,920	18,401	22,949	23,570	17,521	21,949	-5,049
동대문구	55,990	60,917	17,367	22,257	23,826	16,366	19,724	-4,927
종랑구	64,638	71,284	27,773	22,351	20,339	14,514	23,172	-6,646
성북구	66,804	76,213	22,463	26,805	31,240	17,536	22,510	-9,409
강북구	47,491	52,240	17,050	20,125	20,424	10,316	14,766	-4,749
도봉구	48,961	52,460	17,450	20,163	17,754	11,348	17,256	-3,499
노원구	73,528	83,672	26,191	26,958	26,038	20,379	31,443	-10,144
은평구	82,375	85,329	34,346	27,880	20,433	20,149	30,550	-2,954
서대문구	55,729	55,165	15,178	24,763	22,764	15,788	17,223	564
마포구	71,484	72,254	20,023	30,118	29,185	21,343	23,046	-770
양천구	66,589	70,624	21,529	27,206	25,927	17,854	23,168	-4,035
강서구	94,604	94,501	33,798	33,645	25,985	27,161	34,718	103
구로구	57,099	64,052	16,414	19,681	19,671	21,004	27,967	-6,953
금천구	34,056	37,303	11,341	10,463	9,633	12,252	16,329	-3,247
영등포구	58,936	65,678	14,054	24,161	27,347	20,721	24,277	-6,742
동작구	66,694	76,096	17,787	27,910	31,565	20,997	26,744	-9,402
관악구	94,590	10,724	29,534	29,383	32,946	35,673	38,244	-6,134
서초구	76,543	83,320	22,715	32,933	34,364	20,895	26,241	-6,777
강남구	108,537	114,523	34,336	40,957	41,754	33,244	38,433	-5,986
송파구	101,994	111,346	39,136	34,340	31,936	28,518	40,274	-9,352
강동구	73,720	94,194	37,637	18,422	21,542	17,661	35,015	-20,474

\* 주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자료 활용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가동통계(2015)

| 그림 4-3 | 서울 전입: 시도 간 인구이동(2005~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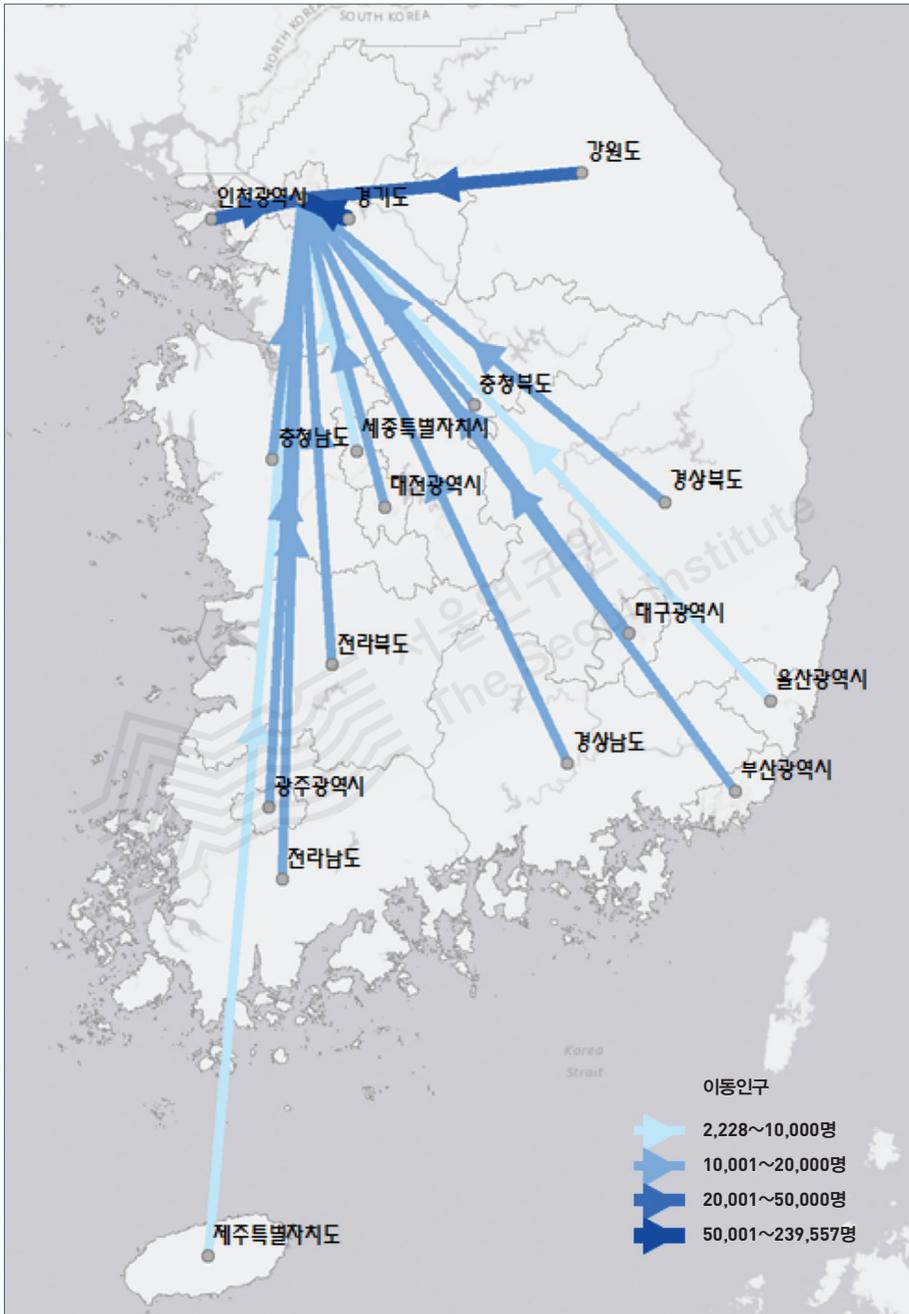
● 서울 전입 : 서울의 흡인력은 감소 추세

서울의 흡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연평균 54만 명으로, 2006년부터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2015년 기준 27만 명으로 전체 전입인구의 약 59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그중 2015년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에서 전입한 인구는 3만 3,000명, 강원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2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서울 전출 : 연평균 경기·인천으로 40만 명, 전국으로 60만 명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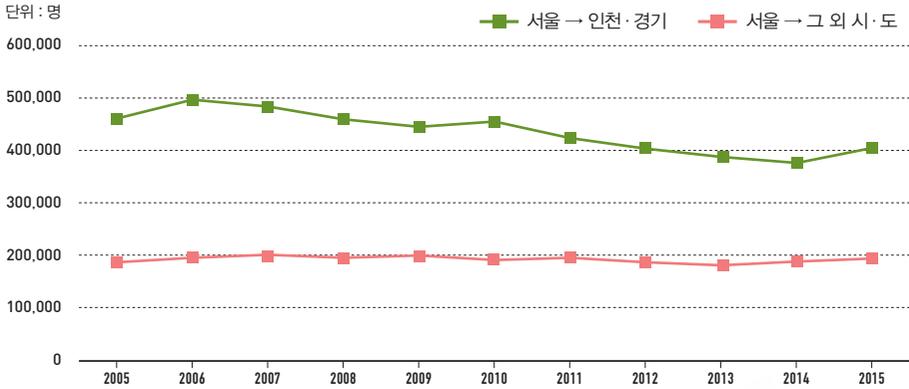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세였으나, 2015년 40만 4,25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그외 시도로 이동한 인구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는 약 36만 명,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약 4만 5,000명, 충청남도 와 강원도로 전출한 인구는 각각 2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 그림 4-4 | 서울 전입인구: 시도 간 이동(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5 | 서울 전출: 시도 간 인구이동(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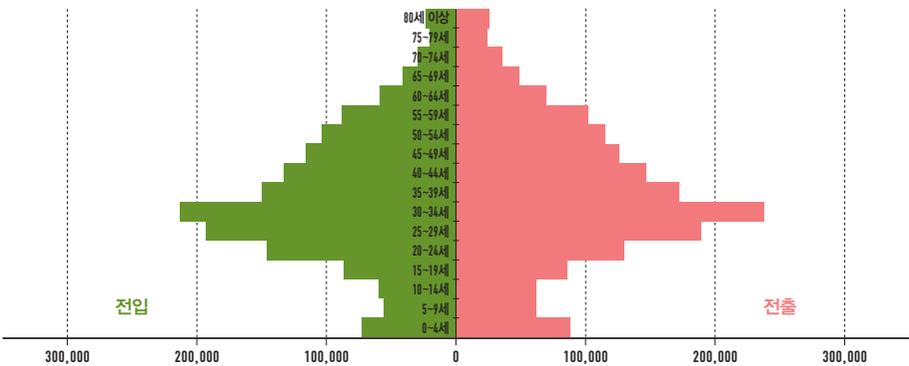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 연령별 전출입 : 25~39세가 활발

전입인구는 30~34세가 13.4퍼센트로 가장 많고, 25~29세(12.1퍼센트), 35~39세(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출인구 또한 30~34세가 13.8퍼센트로 가장 많고 25~29세(11.0퍼센트), 35~39세(10.0퍼센트)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출입이 활발한 연령대는 취업, 결혼 등의 인구이동 요소가 많은 25~39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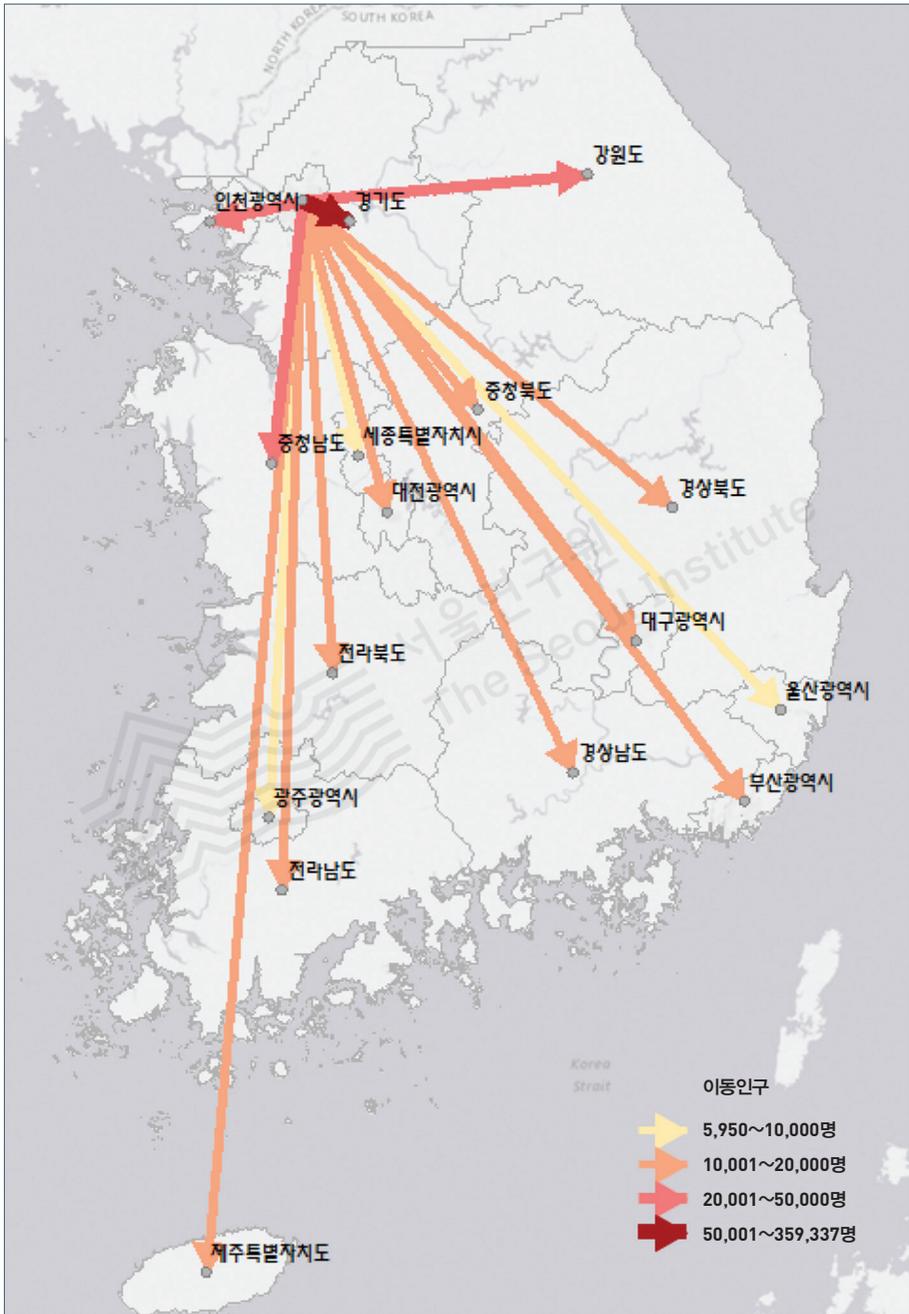
| 그림 4-7 | 연령별 전출입인구(201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연령별)

| 그림 4-6 | 서울 전출인구: 시도 간 이동(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이동 규모별 전출입 : 1~2인이 전출입 전체의 80퍼센트 차지

전입신고 시 함께 신고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이동 규모별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인이 전입한 경우는 67만 285건으로 전체의 68.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이 전출한 경우는 68만 1,407건으로 전체의 66.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 다음으로 이동 건수가 많은 가구는 2인이 이동하는 경우인데, 전입이 12만 1,093건, 전출이 13만 8,35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2인이 이동하는 경우가 전체 이동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입이 80.9퍼센트, 전출이 79.4퍼센트였다.

표 4-3 | 가구규모별 전출입 이동 건수\*(2015)

이동 규모**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내-구내 이동	시내-구간 전입	시내-구간 전출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계	978,123	1,032,191	-54,068	257,767	369,345	369,345	351,011	405,079
1인	670,285	681,407	-11,122	130,320	248,686	248,686	291,279	302,401
2인	121,093	138,351	-17,258	44,121	48,415	48,415	28,557	45,815
3인	92,760	106,979	-14,219	39,020	37,207	37,207	16,533	30,752
4인	75,521	84,559	-9,038	35,092	28,534	28,534	11,895	20,933
5인	15,159	17,085	-1,926	7,499	5,367	5,367	2,293	4,219
6인	2,591	2,992	-401	1,355	889	889	347	748
7인	519	598	-79	262	177	177	80	159
8인	138	145	-7	67	49	49	22	29
9인	55	70	-15	30	21	21	4	19
10인 이상	2	5	-3	1	0	0	1	4

\* 이동 건수 : 전입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동일 시점에 동일 세대 구성원이 동시에 전입신고한 경우 함께 신고한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한 건으로 집계

\*\* 이동 규모 : 전입신고 시 함께 신고한 사람의 수(동반 이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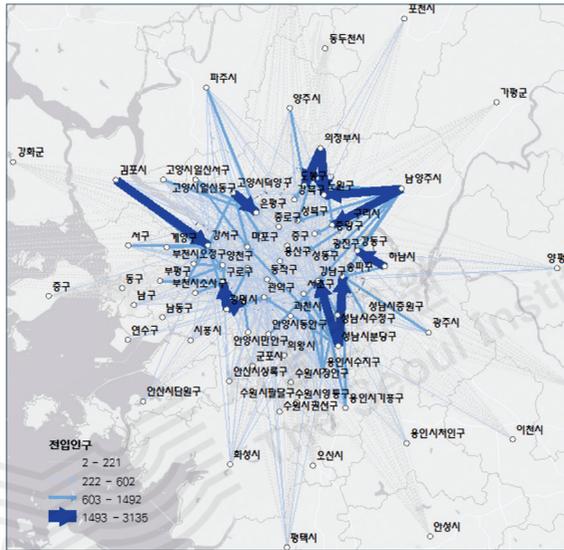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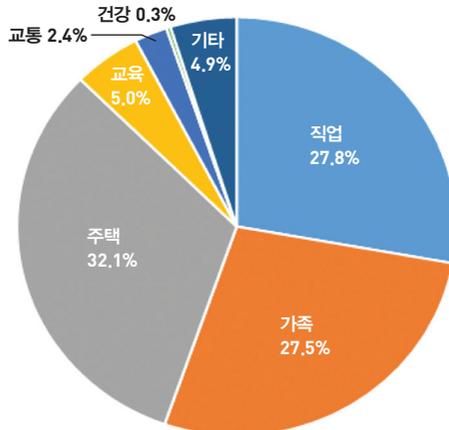
- 최근 서울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천·경기 지역으로 인구유출

수도권 교통의 발달로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서울 인구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현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 대도시권을 중심

| 그림 4-8 | 서울 전입인구 네트워크



| 그림 4-9 | 경기·인천 → 서울 전입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으로 서울 인구의 전출입 이동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한 해 동안 27만 명 전입

2015년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27만 명이다.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동 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주로 인천·경기의 인접지역과 서울 외곽지역 간 권역별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 출발하는 인구 비중이 높으며,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 많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권역은 서북, 서남, 동남, 동북권 순으로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 광명시 → 구로구, 성남시 분당구 → 강남구, 의정부시 → 노원구, 남양주시 → 중랑구, 남양주시 → 노원구, 하남시 → 강동구 등의 이동량이 많다.

● 서울로 이동한 주요 원인은 주택, 직업, 가족

2015년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 사유는 '주택'(32.1퍼센트), '직업'(27.9퍼센트), '가족'(27.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가지 요인이 서울 전입 사유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서울 전입 사유로는 '교육'(5.0퍼센트), '기타'(4.9퍼센트), '교통'(2.4퍼센트), '건강'(0.3퍼센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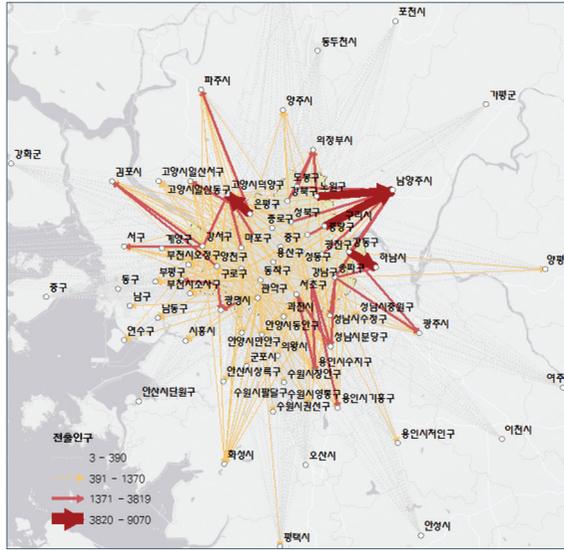
●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한 해 동안 40만 명 전출

2015년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40만 명으로 지역별로는 강동구,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 등에서 출발하는 인구 비중이 높으며,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성남시 분당구 등에 많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출하는 인구는 전입인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외곽지역과 인접한 인천·경기 시군구를 잇는 주요 권역별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동량이 많은 주요 지역은 강동구 → 하남시,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 노원구 → 남양주시, 중랑구 → 남양주시, 노원구 → 의정부시 등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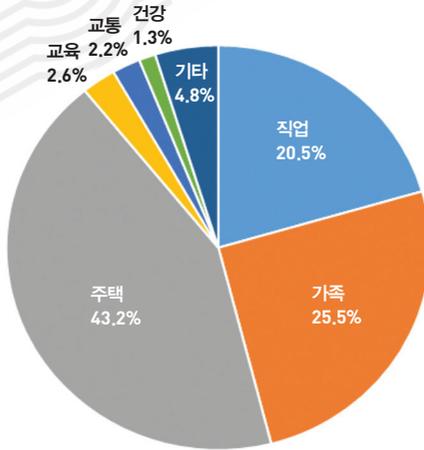
2015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하게 된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컸으며(43.2퍼센트), 그다음에 '가족'(25.5퍼센트), '직업'(20.5퍼센트) 순으로 나타나 서울의 주택 문제가 서울

| 그림 4-10 | 서울 전출인구 네트워크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1 | 서울 → 경기·인천 전출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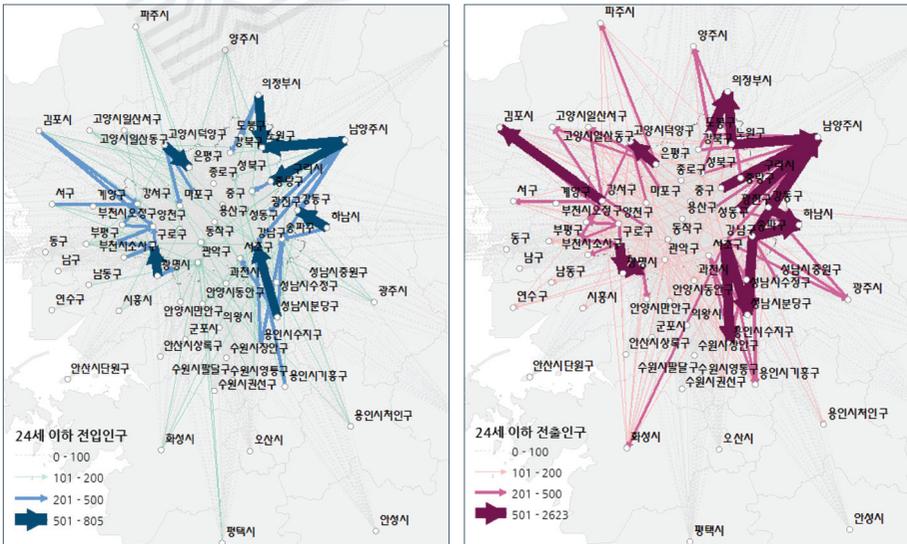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서울 전출 사유로는 ‘기타’(4.8퍼센트), ‘교육’(2.6퍼센트), ‘교통’(2.2퍼센트), ‘건강’(1.3퍼센트) 등이 있다.

## 서울 대도시권 연령별 전출입

### ● 24세 이하는 주택 때문에 고양시, 남양주 등으로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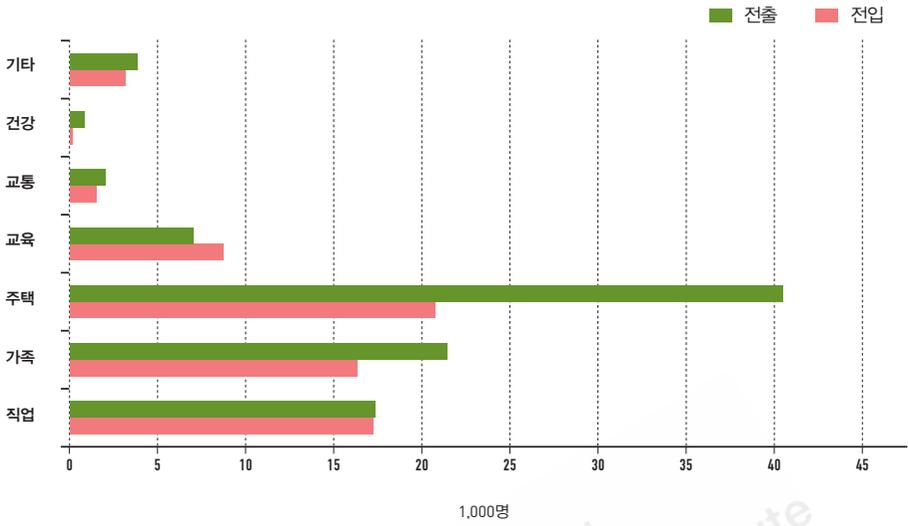
2015년 서울로 전입한 24세 이하 인구의 주요 이동 네트워크는 성남시 분당구 → 강남구(805명),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794명), 의정부시 → 노원구(737명), 광명시 → 구로구(733명) 등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24세 이하 인구는 강동구 → 하남시(2,623명),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2,171명), 노원구 → 남양주시(1,647명), 중랑구 → 남양주시(1,336명), 노원구 → 의정부시(1,070명) 등으로 이동하였다. 전출입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의 경우 서울 전입 사유에서 25.4퍼센트, 서울 전출 사유에서 18.7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24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한 지역은 고양시(1만 778명), 남양주시(8,489명), 용인시(7,144명) 등이다.

| 그림 4-12 | 24세 이하 전출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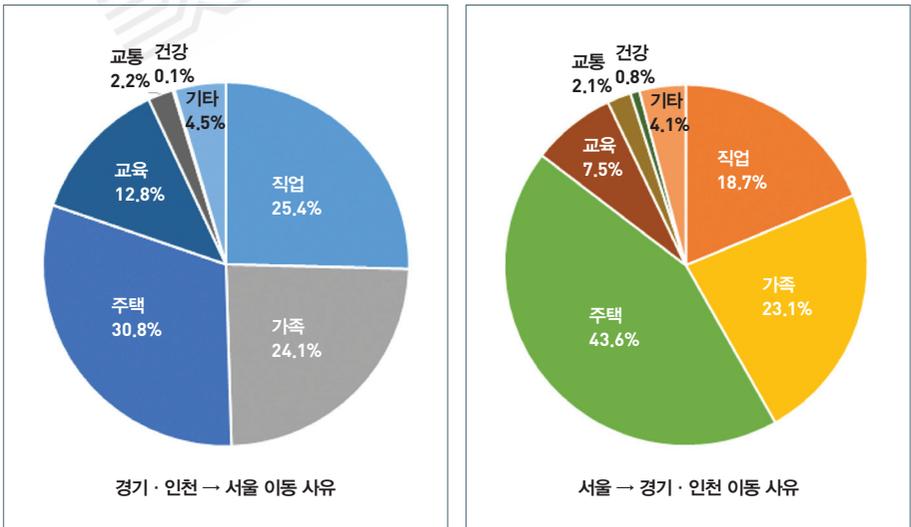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3 | 24세 이하 전출입구 및 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4 | 24세 이하 전출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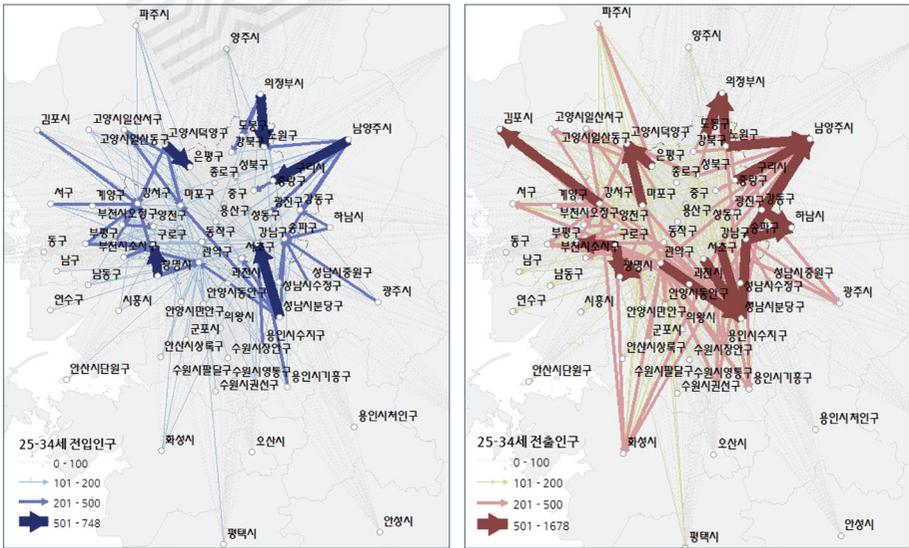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25~34세는 주택과 가족 때문에 고양시, 성남시 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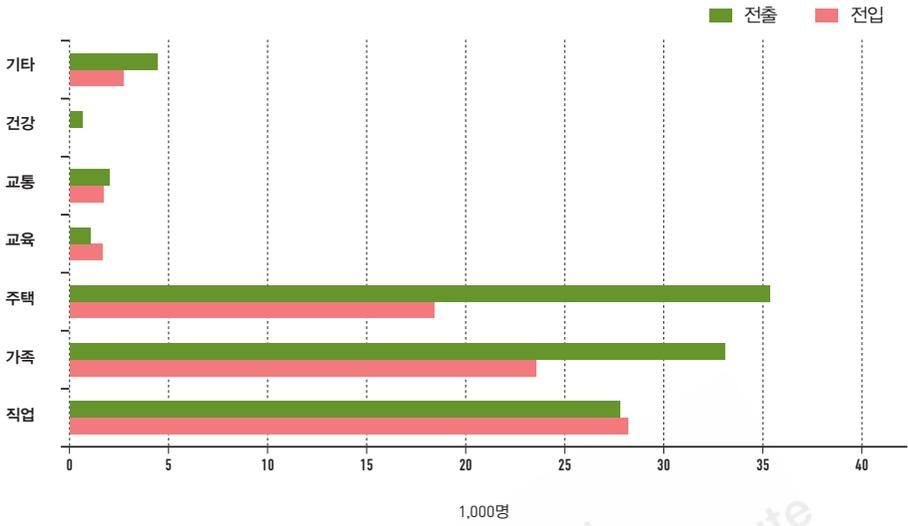
2015년 서울로 전입한 25~34세 인구의 주요 이동 네트워크는 광명시 → 구로구(748명), 성남시 분당구 → 강남구(621명),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581명), 남양주시 → 중랑구(533명) 등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25~34세 인구는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1,678명), 강동구 → 하남시(1,612명), 중랑구 → 남양주시(1,138명), 노원구 → 남양주시(1,138명), 노원구 → 남양주시(1,948명) 등으로 이동하였다. 전출입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의 경우 서울 전입 사유에서 36.9퍼센트, 서울 전출 사유에서 26.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25~34세 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한 지역은 고양시(1만 790명), 성남시(1만 174명), 남양주시(6,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 25~34세 전출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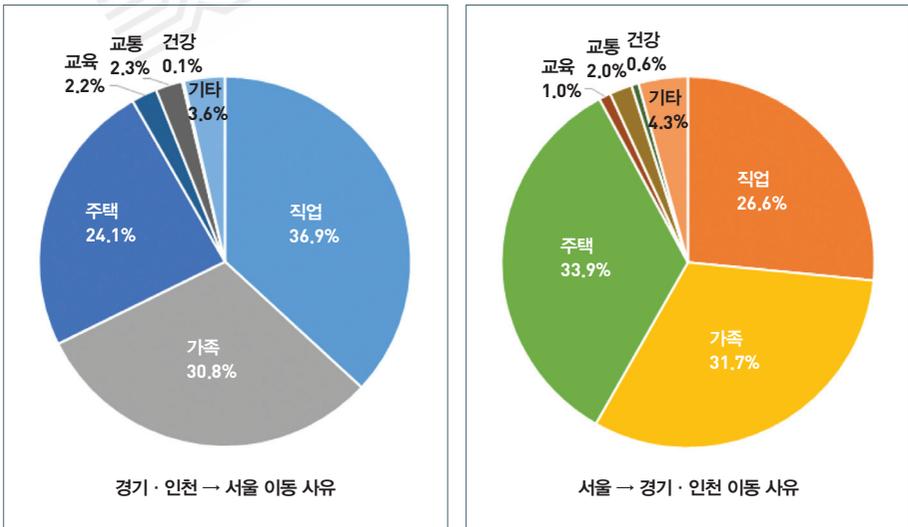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6 | 25~34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7 | 25~34세 전출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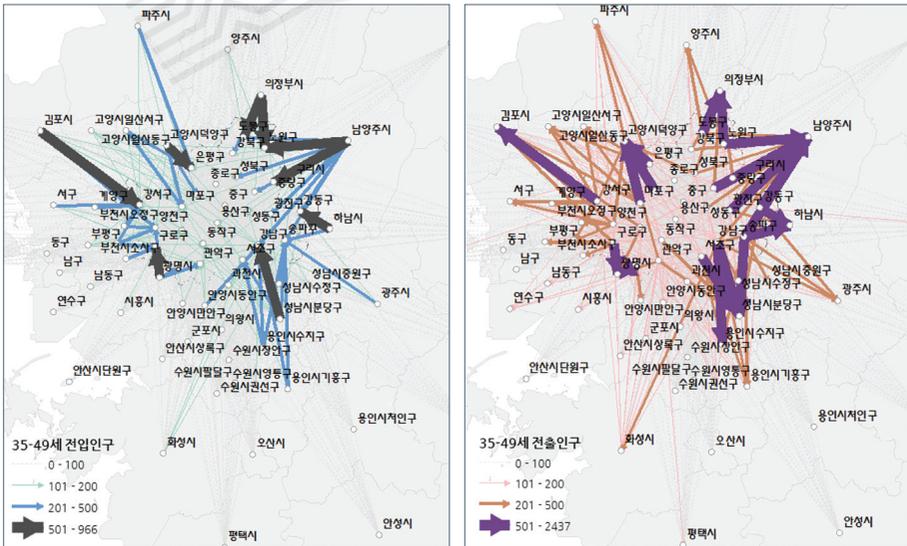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35~49세는 주택과 직업 등을 이유로 고양시, 남양주시 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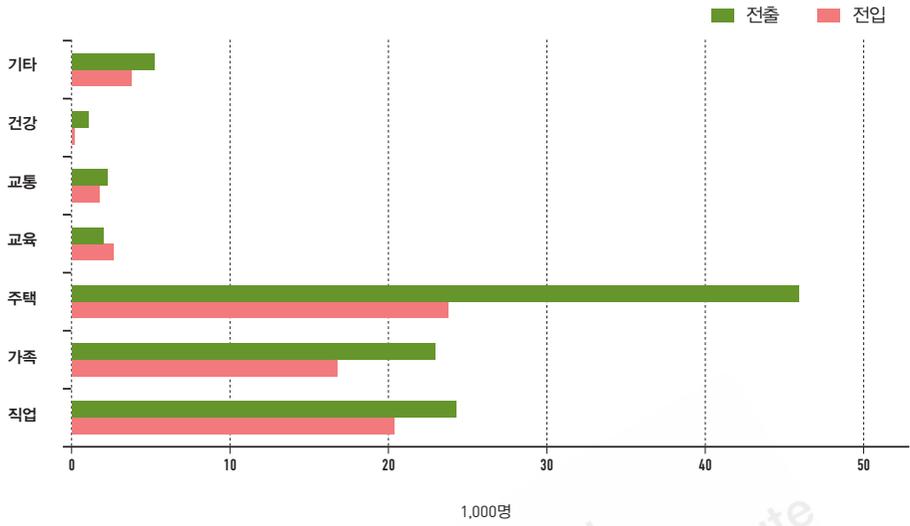
2015년 서울로 전입한 35~49세 인구의 주요 이동 네트워크는 성남시 분당구 → 강남구(966명),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853명), 의정부시 → 노원구(752명), 광명시 → 구로구(748명) 등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35~49세 인구는 강동구 → 하남시(2,437명),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2,180명), 노원구 → 남양주시(1,420명), 중랑구 → 남양주시(1,339명), 송파구 → 하남시(1,002명) 등으로 이동하였다. 전출입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과 '가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35~49세 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한 지역은 고양시(1만 2,548명), 남양주시(8,864명), 성남시(8,321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 그림 4-18 | 35~49세 전출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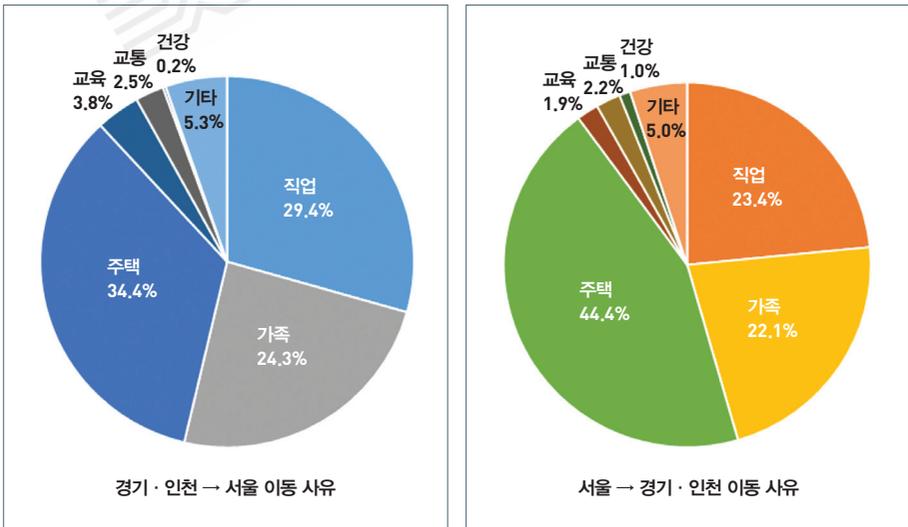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19 | 35~49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20 | 35~49세 전출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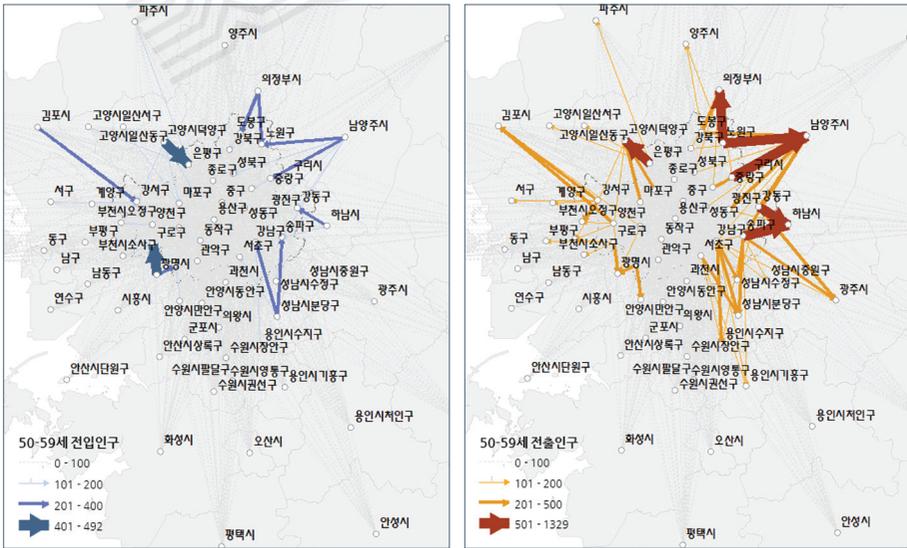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50~59세 서울 인구는 '주택'을 사유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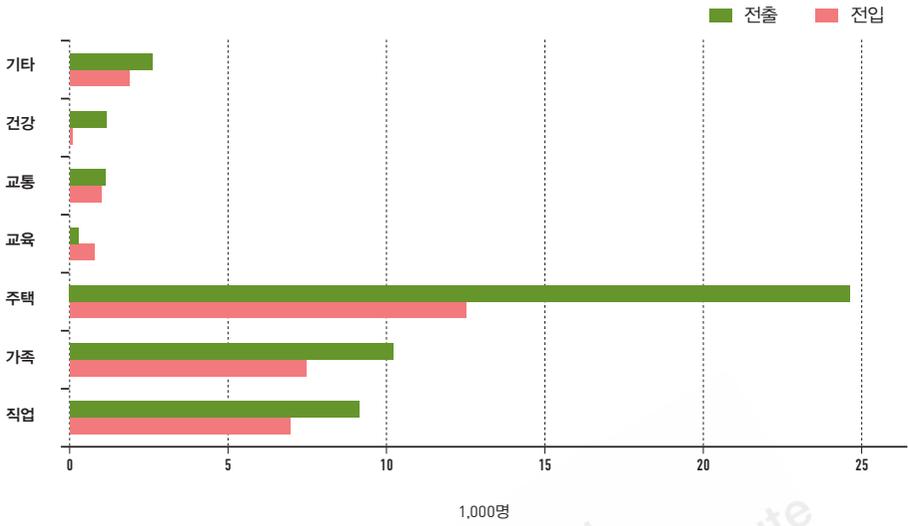
2015년 서울로 전입한 50~59세 인구의 주요 이동 네트워크는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492명), 광명시 → 구로구(428명), 남양주시 → 중랑구(349명), 하남시 → 강동구(315명) 등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50~59세 인구는 강동구 → 하남시(1,329명),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1,253명), 노원구 → 남양주시(884명), 중랑구 → 남양주시(787명), 송파구 → 하남시(553명) 등으로 이동하였다. 전출입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직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50~59세 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한 지역은 고양시(5,588명), 남양주시(4,506명), 성남시(3,573명) 순이다.

| 그림 4-21 | 50~59세 전출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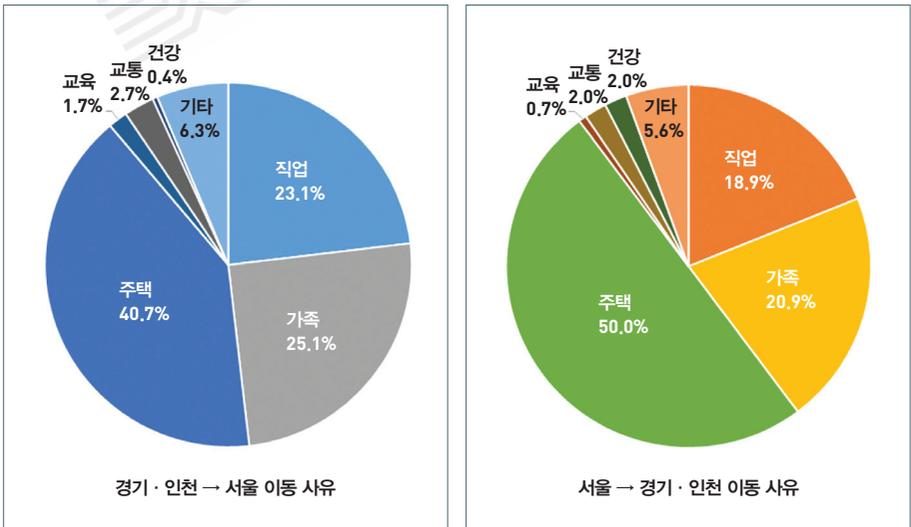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22 | 50~59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23 | 50~59세 전출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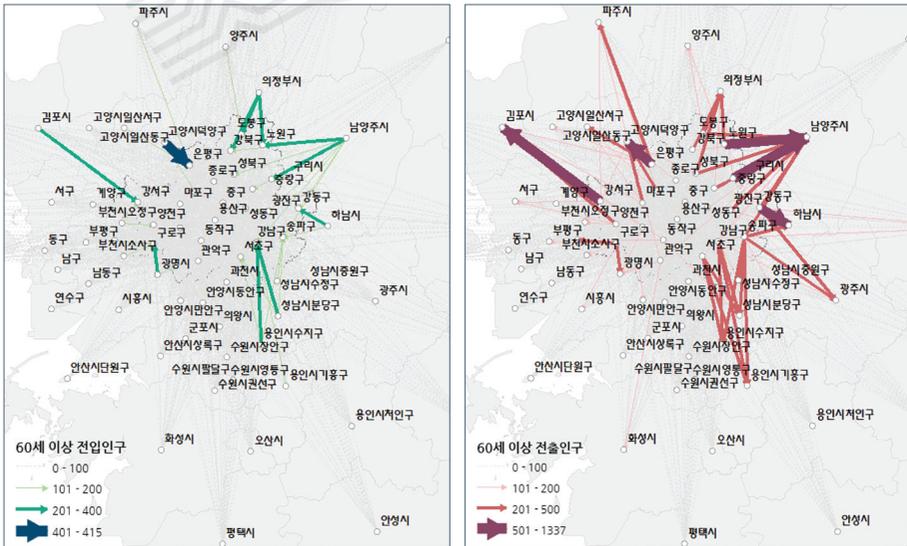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60세 이상 서울 인구는 '주택' 이유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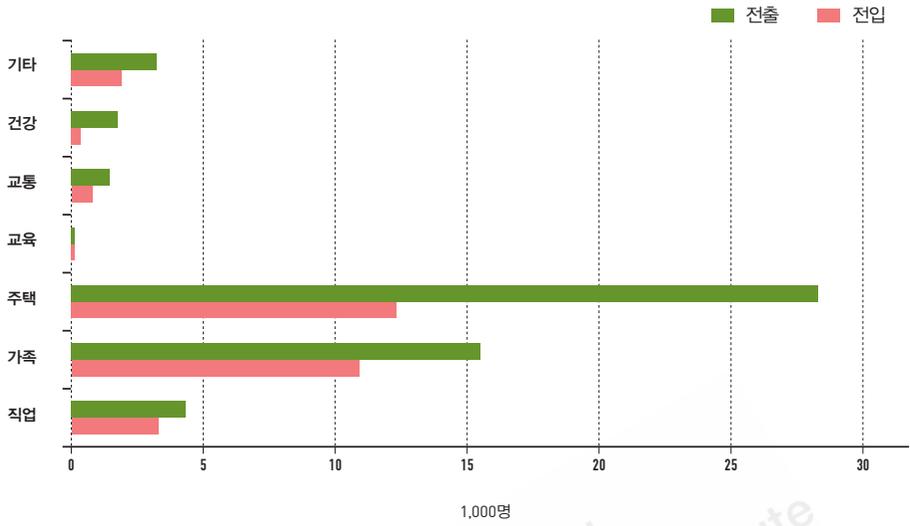
2015년 서울로 전입한 60세 이상 인구의 주요 이동 흐름은 고양시 덕양구 → 은평구(415명), 남양주시 → 중랑구(343명), 광명시 → 구로구(340명), 의정부시 → 도봉구(319명) 등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60세 이상 인구는 은평구 → 고양시 덕양구(1,337명), 강동구 → 하남시(1,069명), 노원구 → 남양주시(705명), 중랑구 → 남양주시(703명), 강서구 → 김포시(585명) 등으로 이동하였다. 전출입 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직업'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한 지역은 고양시(6,671명), 남양주시(4,917명), 용인시(4,31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4 | 60세 이상 전출입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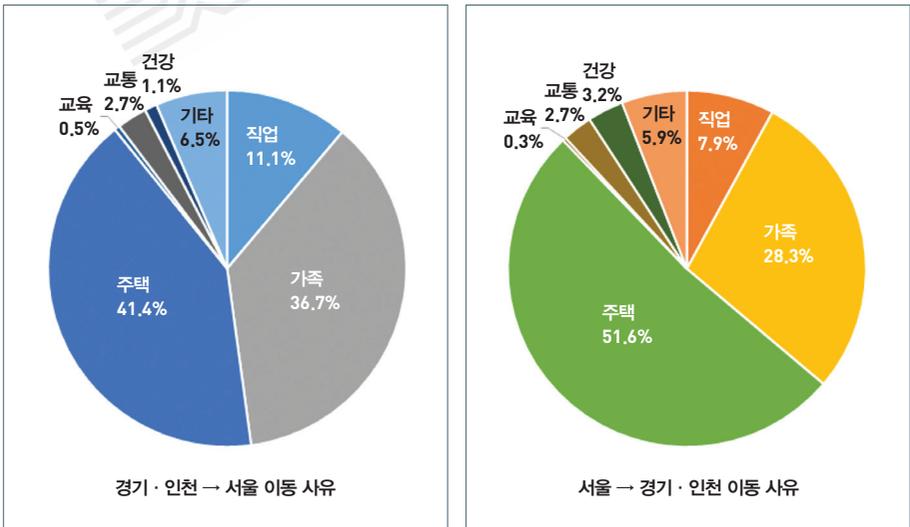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25 | 60세 이상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그림 4-26 | 60세 이상 전출입 사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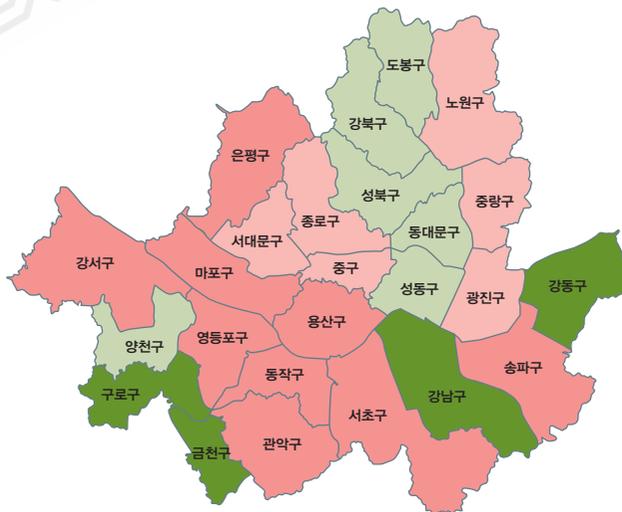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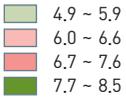
## 서울 자치구별 전출입

-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강남구는 인구이동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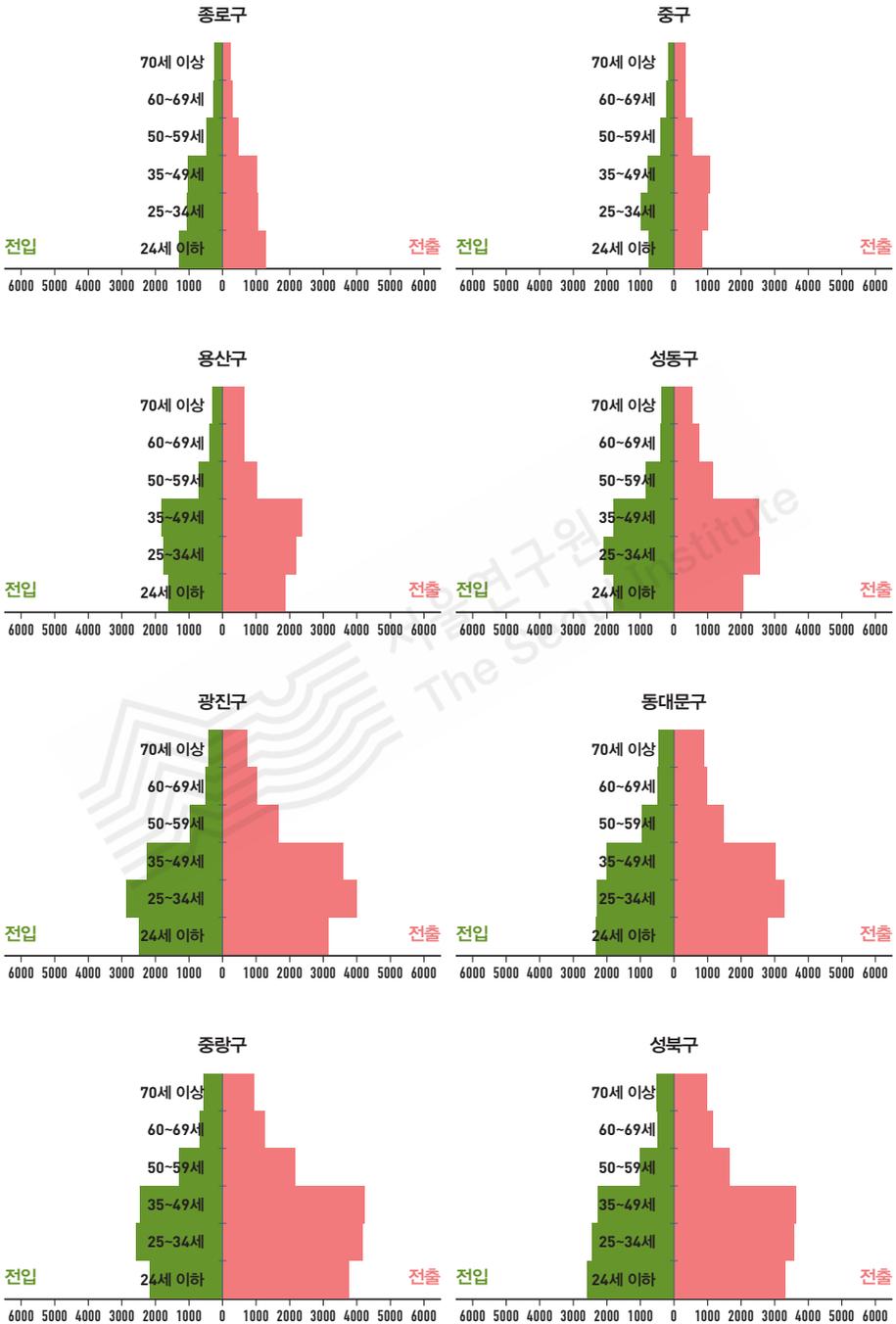
전입과 전출을 포함하여 인천·경기 지역과 활발하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금천구(이동률 8.45퍼센트), 강동구(8.37퍼센트), 구로구(8.32퍼센트), 강남구(8.01퍼센트) 등이다. 금천구와 구로구는 주로 25~34세, 35~49세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강동구와 강남구는 24세 이하, 50세 이상 등을 포함하여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출입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강북구의 이동률이 4.9퍼센트, 성북구의 이동률은 5.2퍼센트로 나타났다.

| 그림 4-27 | 자치구별 이동률(서울-경기·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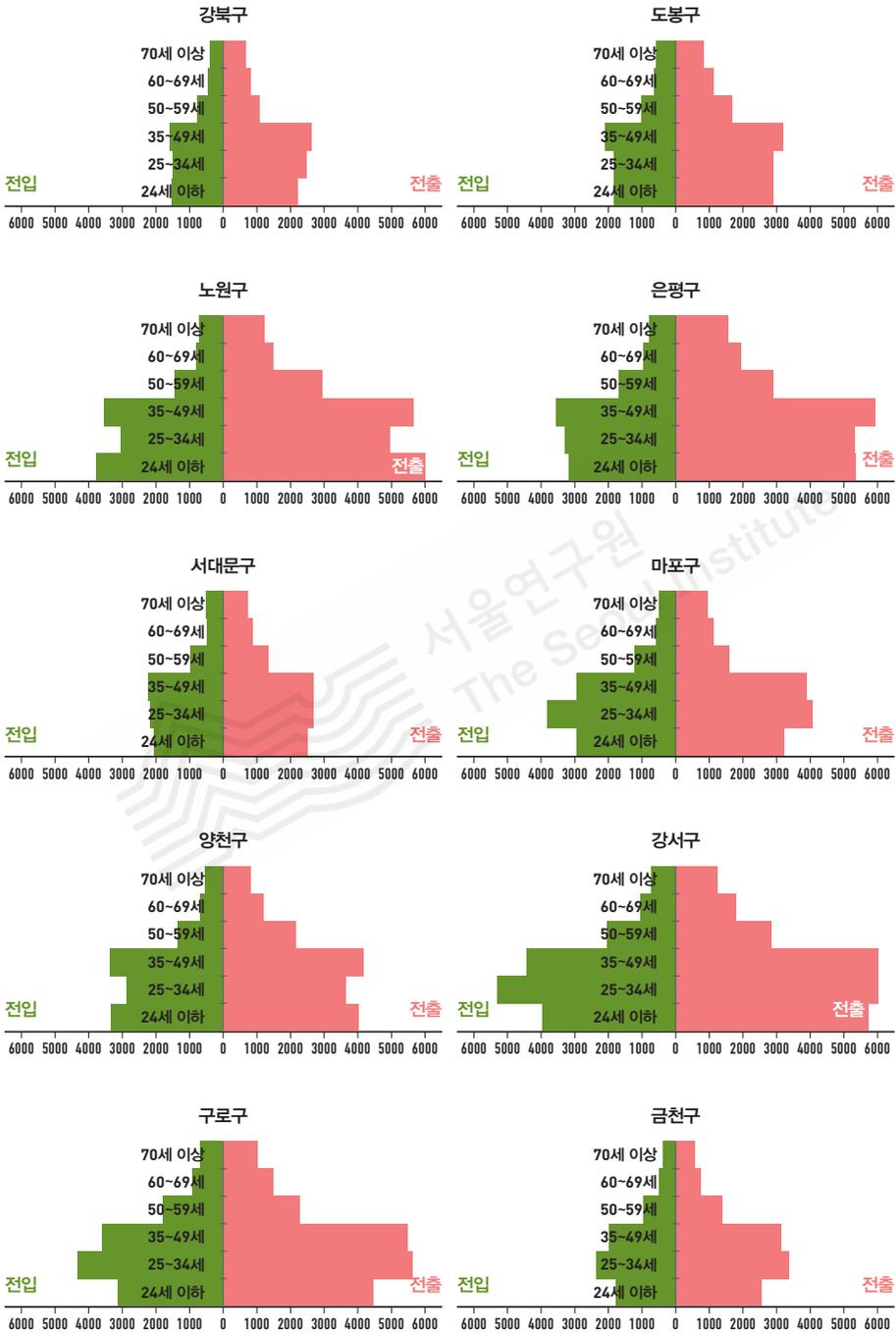
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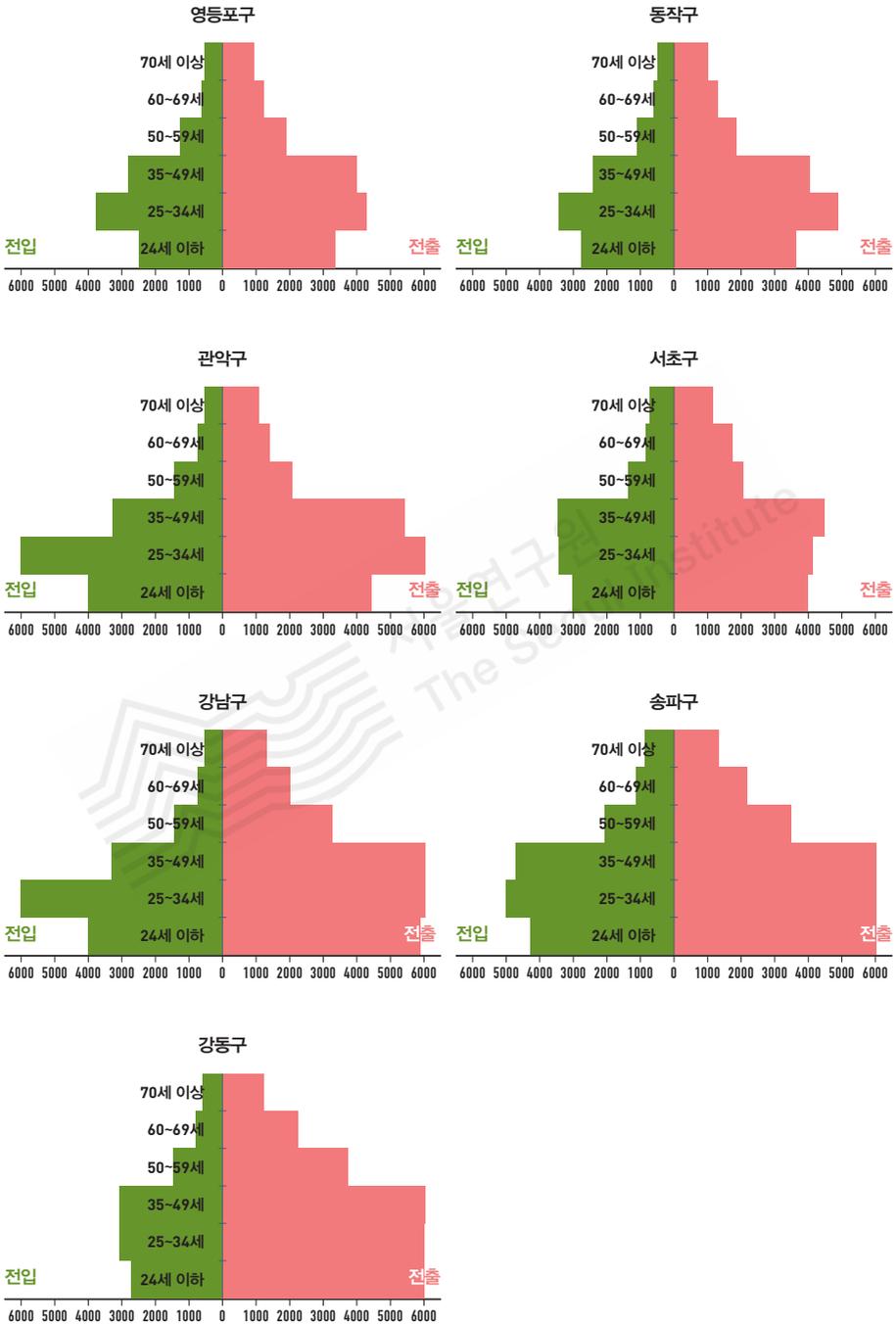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

## 02 통근통학인구

### 통근통학 이동 구간

-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많음

수도권 시도 간 통근통학인구 중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127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는 2010년 145만 8,000명에서, 2015년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127만 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19만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는 3만 2,000명이다. 2010년과 2015년의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천에서 오는 인구는 2.6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경기에서 오는 인구는 18.6퍼센트에서 19.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서울 내부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78.3퍼센트에서 77.0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2015년 기준 7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는 58만 3,000명,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7만 1,000명, 서울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7만 9,000명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경우 통근통학을 이유로 한 순유입 인구는 76만 8,000명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 통근통학을 위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통근통학인구와 비교해 볼 때, 2015년의 경우 경기도, 인천 등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나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나도 크게 증가하였다.

- 서울로 통근통학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는 21개

2015년 기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구로시 등 21개 지역이다.

- 서울 거주 통근통학인구의 42.4퍼센트는 서울 시내 다른 구로 이동

서울시 거주 12세 이상 통근통학인구 중 37.8퍼센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이동

| 표 4-4 |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2010, 2015)

단위: 천 명

현재 거주지	통근통학(2010)					통근통학(2015)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전체	13,931	6,714	1,437	5,780	14,420	14,424	6,517	1,445	6,462	14,934
서울	5,830	5,257	77	496	65	5,671	5,017	71	583	79
인천	1,540	173	1,237	131	18	1,641	191	1,250	200	23
경기	6,483	1,251	120	5,111	107	7,027	1,277	121	5,629	141
수도권 외	79	34	3	42	14,229	84	32	3	49	14,69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4-5 |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2015)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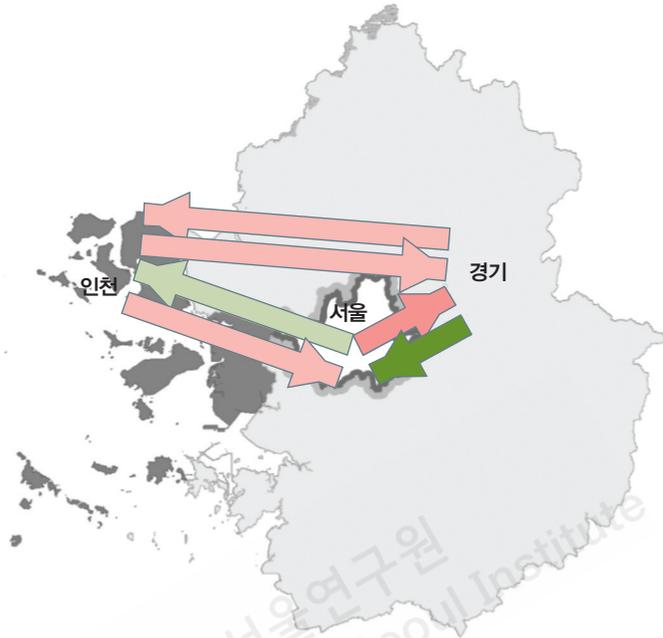
현재 거주지	통근					통학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전체	11,617	5,310	1,163	5,144	11,883	2,807	1,207	282	1,318	3,051
서울	4,550	3,988	62	500	48	1,121	1,029	9	83	31
인천	1,332	165	993	174	12	309	26	257	26	11
경기	5,663	1,133	106	4,425	82	1,364	144	15	1,204	59
수도권 외	71	25	2	44	11,741	13	7	1	5	2,95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하며, 7퍼센트는 같은 구내, 42.4퍼센트는 서울 시내 다른 구로, 12.7퍼센트는 서울 이외 다른 시도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 도민과 인천 시민의 경우 해당 시도 경계를 넘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각각 24.9퍼센트, 21.5퍼센트로 나타나 서울 시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

- 10만 명 미만
- 10만~50만 명
- 50만~100만 명
- 100만 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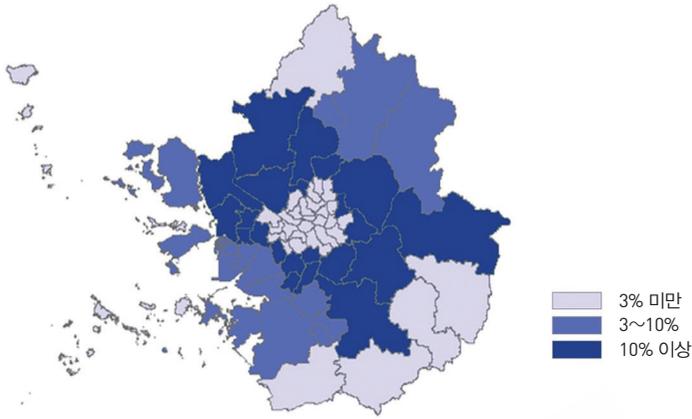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주간인구

-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10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상주인구는 951만 명, 주간인구는 1,028만 명으로 주간인구지수(108.1)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기도(94.1)와 인천시(92.2)는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편으로 상당수의 주민이 서울의 직장 및 교육기관으로 유입되어 낮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372.8)이며, 종로구(265.7)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은평구는 74.6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32 |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 및 상위 시군구(2015)



순위	시군구명	비율(%)
1	경기도 과천시	38.9
2	경기도 광명시	38.8
3	경기도 하남시	35.8
4	경기도 구리시	35.5
5	경기도 남양주시	30.0
6	경기도 고양시	29.7
7	경기도 의정부시	29.2
8	경기도 성남시	25.9
9	경기도 부천시	24.5
10	경기도 김포시	23.6
11	경기도 안양시	22.7
12	경기도 의왕시	20.8
13	경기도 군포시	19.0
14	경기도 용인시	16.6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15.4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15.3
17	경기도 양주시	15.2
18	경기도 광주시	13.4
19	인천광역시 서구	13.2
20	경기도 양평군	13.0
21	경기도 파주시	12.6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9.9
23	경기도 수원시	9.5
24	경기도 동두천시	9.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4-6 | 수도권 통근통학 이동 구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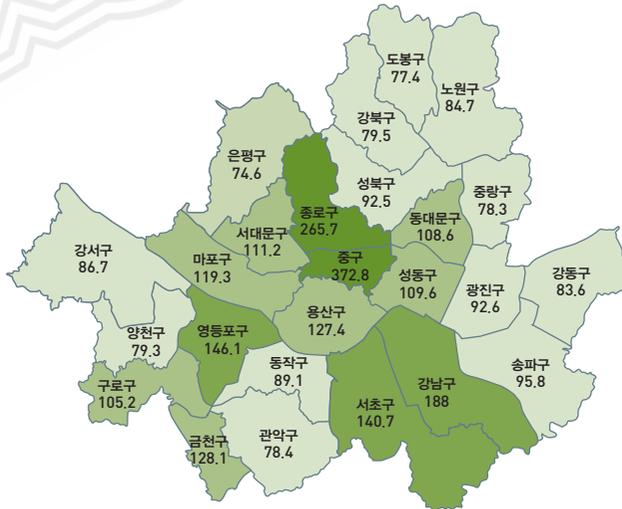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인구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다른 읍면동		
				같은 시군구 내	같은 시도 내	다른 시도
수도권	21,609	14,583	6,052	1,674	4,172	2,686
		(100.0)	(41.5)	(11.5)	(28.6)	(18.4)
서울	8,614	5,750	2,175	404	2,438	733
		(100.0)	(37.8)	(7.0)	(42.4)	(12.7)
인천	2,486	1,665	703	160	387	415
		(100.0)	(42.2)	(9.6)	(23.2)	(24.9)
경기	10,509	7,169	3,174	1,109	1,347	1,539
		(100.0)	(44.3)	(15.5)	(18.8)	(21.5)

| 그림 4-33 | 자치구별 주간인구지수(2015)

이동률(%)

- 74.6 ~ 95.8
- 95.9 ~ 128.1
- 128.2 ~ 188.0
- 188.1 ~ 372.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서울 전출입인구

### ● 인구가동으로 인한 서울 인구감소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출입 이동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2만 명씩 서울 인구가 감소하였다. 2015년 서울 전입인구는 158만 9,431명, 서울 전출인구는 172만 6,687명이다. 이러한 인구가동에 따라 서울 인구는 2015년 13만 7,256명 감소하였다.

### ● 서울의 흡인력은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에서 인구유입은 활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연평균 54만 명으로, 2006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2015년 기준 27만 명으로 전체 전입인구의 약 5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5년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에서 전입한 인구는 3만 3,000명, 강원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2만 명이다.

### ●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연평균 40만 명, 전국으로 연평균 60만 명 이동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5년 40만 4,25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시도로 이동한 인구가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는 약 36만 명,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약 4만 5,000명, 충청남도 와 강원도로 전출한 인구는 각각 2만 2,000여 명이다.

### ● 25~39세 인구가동 활발

전입인구는 30~34세가 13.4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25~29세(12.1퍼센트), 35~39세(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출인구도 30~34세가 13.8퍼센트로 가장 많으

며 그다음은 25~29세(11.0퍼센트), 35~39세(10.0퍼센트) 순이다. 즉 전출입이 활발한 연령대는 취업, 결혼 등의 인구가동 요소가 많은 25~39세임을 알 수 있다.

- 1~2인가구의 전출입이 전체 가구이동의 80퍼센트 차지

가구 규모별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전입 67만 285건으로 전체의 68.5퍼센트를 차지하였고 전출 역시 68만 1,407건으로 전체의 66.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인가구 다음으로 이동이 많은 가구는 2인가구로 전입 12만 1,093건, 전출 13만 8,351건을 차지하였다. 1~2인가구가 전체 이동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입이 80.9퍼센트, 전출이 79.4퍼센트로 나타났다.

## 서울 대도시권 인구가동

-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27만 명 전입, 전입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순

2015년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27만 명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가구의 이동 네트워크는 주로 인천·경기 인접지역과 서울 외곽지역 간 권역별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에서 출발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중랑구 등에 많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 사유는 '주택'이 가장 컸으며(32.1퍼센트), 직업(27.9퍼센트), 가족(27.5퍼센트)이 뒤를 이었다.

-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40만 명 전출,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2015년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40만 명으로 지역별로는 강동구,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 등에서 출발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에 많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하게 된 사유로는 '주택'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43.2퍼센트), '가족'(25.5퍼센트), '직업'(20.5퍼센트)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주택문제가 서울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서울 전출인구는 연령별로 사유·도착 지역에 큰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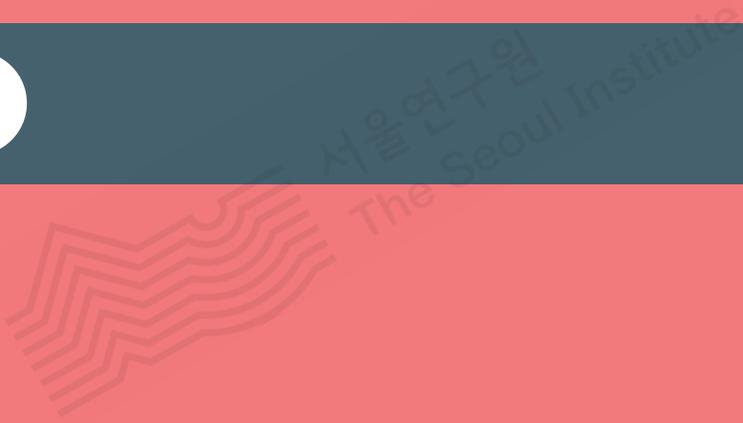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으로 전 연령대에서 주택 문제가

이동의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동 사유로서 '주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집단은 50~59세(50.0퍼센트), 60세 이상(51.6퍼센트)이었다. 24세 이하(43.6퍼센트), 35~49세(44.4퍼센트)도 '주택'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다. 25~34세와 35~49세는 '주택' 이외에 '직업'이 이동 사유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5~34세는 26.6퍼센트, 35~49세는 23.4퍼센트가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 서울 전출인구가 가장 많이 도착하는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10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는 2010년 145만 8,000명에서 2015년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127만 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19만 명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는 3만 2,000명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상주인구는 951만 명이고 주간인구는 1,028만 명으로 주간인구지수(108.1)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기도(94.1)와 인천시(92.2)는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편으로 상당수의 주민이 서울의 직장과 교육기관으로 유입되어 낮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372.8)이며, 종로구(265.7)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은평구는 74.6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부



# 통계로 보는 서울 가구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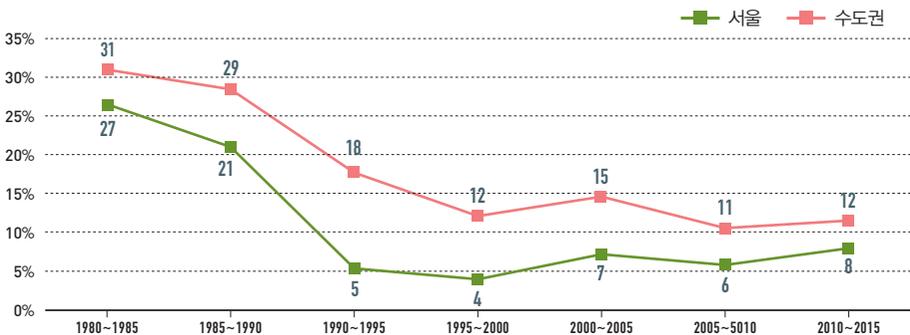
# 가구구조의 변화

## 01 가구 수의 변화

- 2015년 서울의 가구 수는 378만 가구로 1980년보다 약 2배 증가

1980년부터 서울의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 378만 4,490가구로 전국 가구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수도권의 가구는 921만 4,649가구로 전국 가구의

| 그림 5-1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 규모의 증가율(1980~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전수조사, 일반가구 기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1,836,903	2,324,219	2,814,845	2,965,794	3,085,936	3,309,890	3,504,297	3,784,490
수도권	2,919,711	3,827,935	4,919,405	5,792,619	6,502,119	7,462,090	8,254,281	9,214,64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전수조사, 일반가구 기준

약 48퍼센트에 해당한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 동안 서울의 가구는 약 2.1배, 수도권은 3.2배, 전국은 2.4배 증가하여 증가율은 수도권, 전국, 서울 순으로 높았다.

## 02 가구 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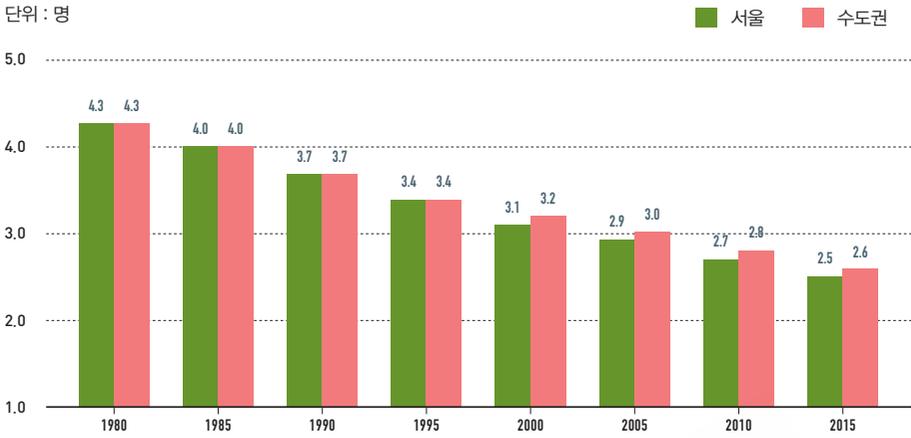
### ● 서울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69퍼센트 차지

인구총조사에서 일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구분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1세대 가구+2세대 가구+3세대 가구+4세대 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의 69.3퍼센트를 차지한다. 1인가구는 29.5퍼센트를 차지하며, 비친족가구는 1.2퍼센트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 ● 2015년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이 2.5명, 수도권은 2.6명

2015년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family size)는 2.5명으로 1980년 4.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 수도권, 전국이 모두 비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인다. 35년 동안 평균 가구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4.3명에서 2.6명으로, 전국의 경우 4.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 그림 5-2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1980~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 표 5-2 | 서울의 가구 유형(2015)

가구 유형(일반가구 기준)	%
1세대 가구(부부)	16.08
2세대 가구(부부+자녀)	48.23
3세대 가구(부모+부부+자녀)	4.99
4세대 가구(부모+부부+자녀+손자녀)	0.04
1인가구	29.48
비친족가구	1.17
합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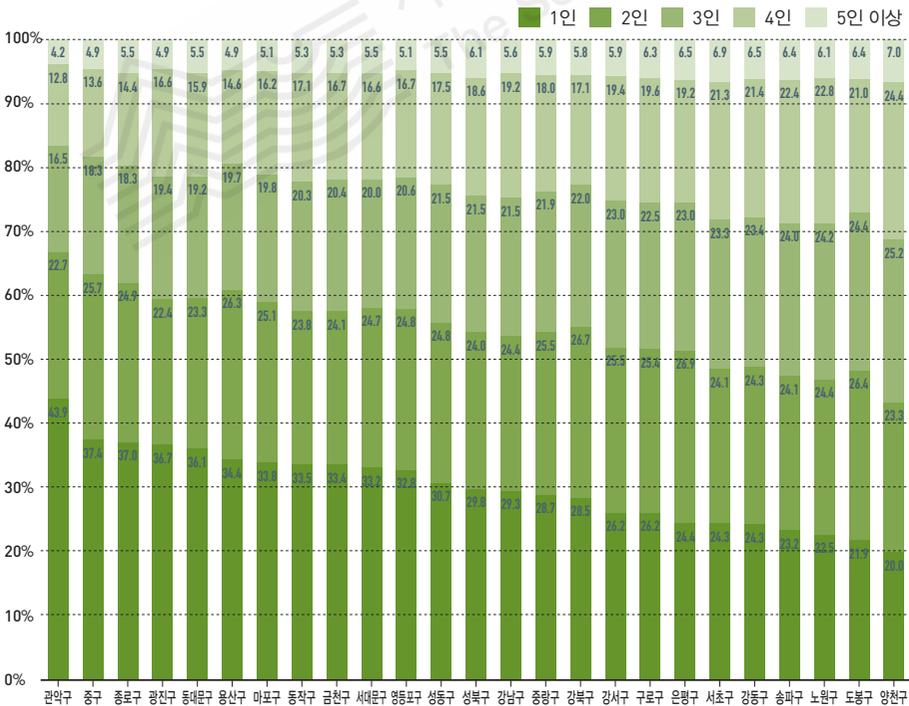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03 자치구 가구 수 분포

## ●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양천구,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

2015년 기준 양천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로 2.12명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는 관악구(43.9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중구(37.4퍼센트), 종로구(37.0퍼센트)가 그 뒤를 따른다. 1인가구가 가장 적은 구는 양천구(16.8퍼센트)로 나타났고, 그 뒤를 도봉구(21.9퍼센트), 노원구(22.5퍼센트)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3 | 자치구별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유형(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5-3 | 서울 자치구별 평균 가구원 수(2000~2015)

2000			2005			2010			2015		
순위	자치구	평균 가구원 수 (명)									
1	도봉구	3.33	1	양천구	3.13	1	양천구	2.98	1	양천구	2.77
2	노원구	3.30	2	도봉구	3.10	2	노원구	2.90	2	노원구	2.67
3	양천구	3.30	3	노원구	3.09	3	도봉구	2.88	3	송파구	2.67
4	강동구	3.23	4	강동구	3.04	4	송파구	2.86	4	도봉구	2.65
5	은평구	3.22	5	송파구	3.01	5	강동구	2.84	5	서초구	2.65
6	강북구	3.22	6	은평구	3.00	6	은평구	2.83	6	강동구	2.63
7	송파구	3.21	7	구로구	2.98	7	서초구	2.80	7	은평구	2.58
8	중랑구	3.20	8	강서구	2.96	8	구로구	2.78	8	구로구	2.56
9	강서구	3.20	9	강북구	2.95	9	강서구	2.77	9	강서구	2.55
10	구로구	3.12	10	중랑구	2.94	10	성북구	2.72	10	중랑구	2.49
11	성북구	3.12	11	성북구	2.92	11	중랑구	2.72	11	성북구	2.49
12	동작구	3.09	12	서초구	2.91	12	강북구	2.72	12	강남구	2.49
13	성동구	3.09	13	금천구	2.87	13	영등포구	2.67	13	강북구	2.47
14	서초구	3.08	14	동작구	2.85	14	성동구	2.65	14	성동구	2.44
15	서대문구	3.07	15	성동구	2.85	15	서대문구	2.64	15	서대문구	2.38
16	관악구	3.05	16	영등포구	2.83	16	금천구	2.63	16	금천구	2.38
17	영등포구	3.05	17	광진구	2.82	17	광진구	2.61	17	영등포구	2.38
18	금천구	3.04	18	서대문구	2.80	18	동작구	2.60	18	동작구	2.38
19	광진구	3.04	19	동대문구	2.76	19	동대문구	2.59	19	마포구	2.35
20	강남구	2.98	20	용산구	2.71	20	강남구	2.56	20	동대문구	2.33
21	마포구	2.97	21	종로구	2.70	21	마포구	2.53	21	광진구	2.32
22	동대문구	2.94	22	마포구	2.69	22	종로구	2.51	22	용산구	2.31
23	용산구	2.94	23	강남구	2.67	23	중구	2.49	23	종로구	2.28
24	종로구	2.91	24	중구	2.66	24	용산구	2.48	24	중구	2.25
25	중구	2.86	25	관악구	2.54	25	관악구	2.31	25	관악구	2.1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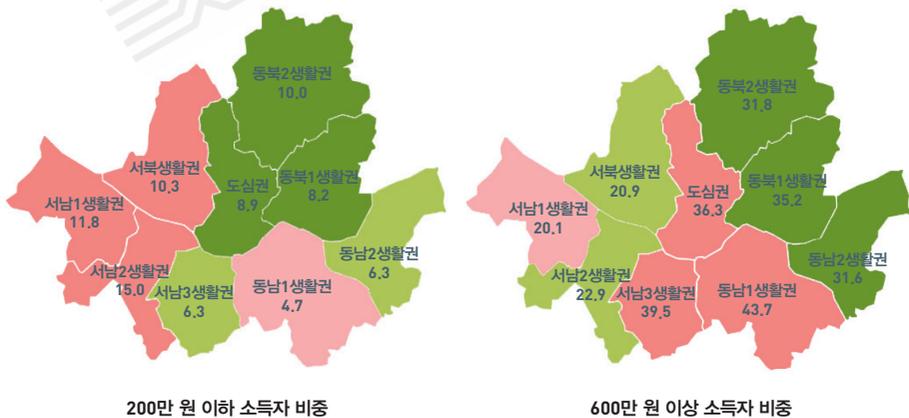
# 04 가구소득

## 서울시 보통가구의 소득

- 서울 보통가구는 월평균 400~500만 원 소득

2015년 서울서베이 자료 기준으로 서울의 보통가구는 48.9세의 남자 가장으로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월평균 400~500만 원의 소득을 가진다.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동남1생활권(43.7퍼센트), 서남3생활권(39.5퍼센트), 도심권(36.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서남2생활권(15.0퍼센트), 서남1생활권(11.8퍼센트), 서북생활권(10.3퍼센트)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5-4 | 200만 원 이하 소득자 비중(좌), 6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중(우)



자료 :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2015)

## | 6장 |

# 1인가구

## 01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 2015년 서울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29.5퍼센트 차지

2015년 서울의 1인가구는 111만 5,744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5퍼센트를 차지한다. 1980년에 서울의 1인가구 수는 8만 2,477가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규모가 1985년에는 15만 6,207가구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25만 7,382가구, 1995년에는 38만 2,024가구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 1인가구는 다시 2000년에는 50만 2,245가구, 2005년에는 67만 5,739가구 등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해 결국 2015년에 112만여 가구에 달했다. 1980년에 비해 지난 35년 동안 서울의 1인가구는 13.5배 증가하였다.

- 1980년 대비 2015년 수도권의 1인가구는 16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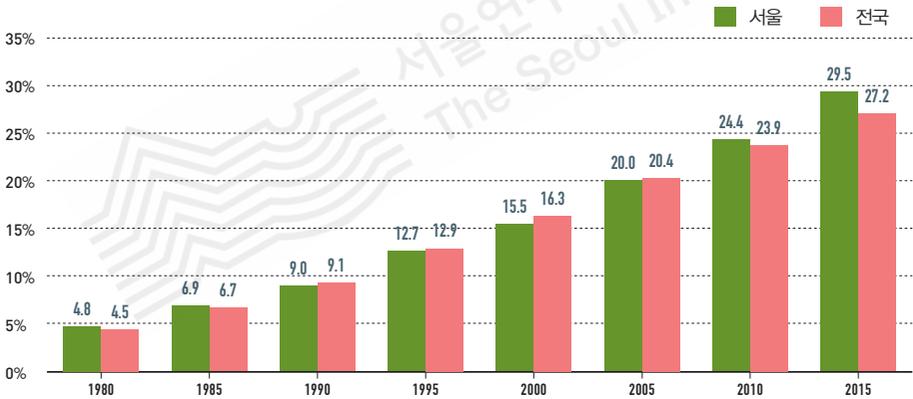
수도권의 1980년도 1인가구의 수는 약 14만 가구였다. 1985년에는 약 26만 가구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약 43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1인가구는 다시 1995년에 약 68만 가구, 2000년에 약 94만 가구, 2005년에 약 138만 가구, 2010년 약 182만 가구, 2015년에는 약 239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 사이에 수도권의 1인가구는 약 16배 증가하였다. 전국의 1인가구는 1980년 약 38만 가구였지만, 2015년 약

| 표 6-1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비중 및 규모 추이(1980~20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가구 수	82,477	156,207	257,382	382,024	502,245	675,739	854,606	1,115,744
	비율(%)	4.8	6.9	9.0	12.7	15.5	20.0	24.4	29.5
수도권	가구 수	137,839	260,191	427,401	679,370	936,927	1,380,245	1,822,848	2,385,893
	비율(%)	4.5	6.7	9.1	12.9	16.3	20.4	22.1	25.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전수조사, 일반가구 기준

| 그림 6-1 | 서울과 전국의 1인가구(1980~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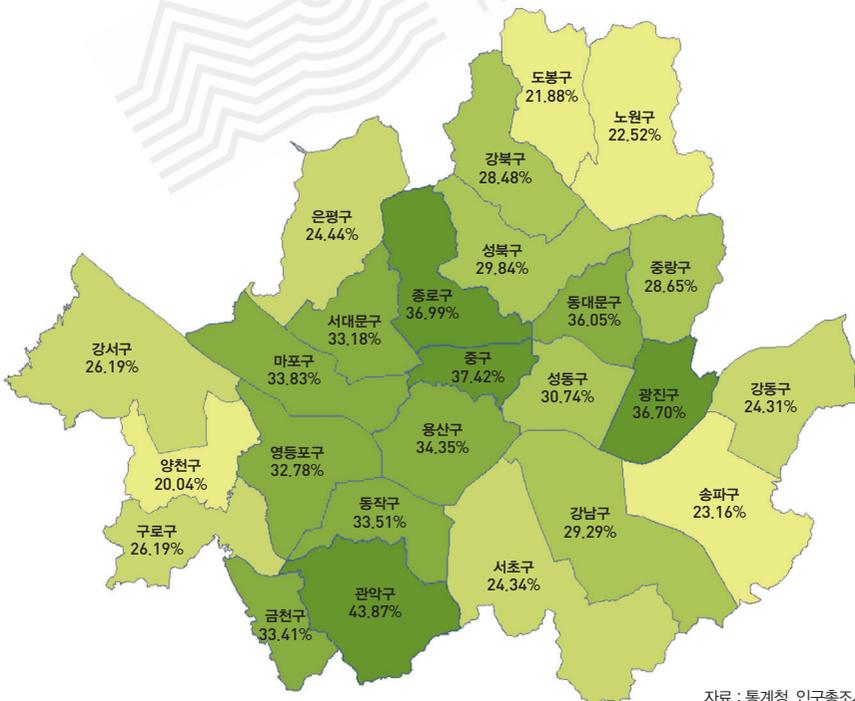
520만 가구로 35년 사이에 약 14배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가구의 27.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 02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수의 변화

-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관악구

지금부터 25여 년 전인 1990년에는 구로구 1인가구가 2만 1,676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성동구 2만 332가구, 성북구 1만 6,411가구, 도봉구 1만 3,643가구, 동대문구 1만 2,813가구의 순이었다. 이 시기에 1인가구의 수는 중구가 7,698가구였고, 종로구는 8,671가구였다. 은평구, 서초구 등에서도 1인가구가 적었다. 15년이 지난 2000년에는 강남구의 1인가구 수가 3만 4,667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관악구(2만 9,256가구), 송파구(2만 6,606가구), 동대문구(2만 6,498가구) 순으로 나타나 1990년도와는 완전히 바뀐 구도를 보여 준다. 이후 다시 15년이 지난 2015년에는 관악구가 1인가구 10만 30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강남구(6만 1,897가구), 강서구(5만 6,990가구) 순이었다.

| 그림 6-2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비율(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6-2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규모 변화(1990~2015)

1990			2000			2010			2015		
	자치구 명	가구 수									
1	구로구	21,676	1	강남구	34,667	1	관악구	84,423	1	관악구	100,302
2	성동구	20,332	2	관악구	29,256	2	강남구	59,528	2	강남구	61,897
3	성북구	16,411	3	송파구	26,606	3	송파구	42,222	3	강서구	56,990
4	도봉구	13,643	4	동대문구	26,498	4	강서구	41,804	4	광진구	54,210
5	동대문구	12,813	5	성북구	24,576	5	마포구	41,109	5	동작구	53,954
6	송파구	12,805	6	마포구	23,754	6	동작구	40,256	6	송파구	53,481
7	강남구	11,625	7	광진구	22,711	7	성북구	38,652	7	동대문구	52,884
8	서대문구	11,373	8	영등포구	22,704	8	동대문구	36,897	8	마포구	52,437
9	영등포구	11,197	9	동작구	21,833	9	광진구	36,411	9	성북구	52,005
10	관악구	10,837	10	구로구	21,274	10	노원구	34,290	10	영등포구	48,433
11	강동구	10,676	11	강서구	21,158	11	영등포구	34,158	11	노원구	46,129
12	동작구	10,665	12	서초구	20,204	12	중랑구	33,324	12	중랑구	45,138
13	마포구	10,629	13	강동구	20,164	13	강동구	31,719	13	은평구	43,936
14	양천구	10,365	14	중랑구	19,115	14	구로구	30,156	14	구로구	40,988
15	강서구	10,123	15	서대문구	18,698	15	서대문구	29,943	15	서대문구	40,160
16	중랑구	9,918	16	은평구	17,824	16	은평구	29,795	16	강동구	39,897
17	용산구	9,617	17	노원구	17,621	17	서초구	29,188	17	서초구	37,496
18	노원구	8,829	18	성동구	17,205	18	성동구	27,041	18	강북구	35,787
19	서초구	8,744	19	금천구	16,706	19	강북구	26,054	19	성동구	35,259
20	은평구	8,735	20	양천구	16,426	20	용산구	25,846	20	양천구	32,832
21	종로구	8,671	21	용산구	15,233	21	양천구	25,218	21	금천구	31,219
22	중구	7,698	22	강북구	14,049	22	금천구	23,274	22	용산구	31,025
			23	종로구	12,784	23	도봉구	21,233	23	도봉구	27,348
			24	도봉구	10,826	24	종로구	18,156	24	종로구	22,776
			25	중구	10,353	25	중구	13,909	25	중구	19,16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90~2015)

| 표 6-3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비중 변화(1990~2015)

1990			2000			2010			2015		
	자치구 명	비율(%)									
1	중구	14.46	1	중구	23.29	1	관악구	38.84	1	관악구	43.87
2	종로구	13.08	2	종로구	22.71	2	종로구	31.41	2	중구	37.42
3	용산구	11.77	3	동대문구	21.78	3	중구	30.46	3	종로구	36.99
4	성북구	11.17	4	용산구	20.32	4	용산구	29.89	4	광진구	36.70
5	서대문구	11.04	5	강남구	20.26	5	강남구	29.62	5	동대문구	36.05
6	구로구	10.54	6	마포구	19.69	6	마포구	29.07	6	용산구	34.35
7	동작구	9.86	7	금천구	19.51	7	동대문구	28.82	7	마포구	33.83
8	동대문구	9.58	8	광진구	18.58	8	동작구	27.62	8	동작구	33.51
9	강서구	9.57	9	관악구	18.39	9	광진구	27.28	9	금천구	33.41
10	성동구	9.52	10	영등포구	18.27	10	금천구	26.90	10	서대문구	33.18
11	마포구	9.19	11	서초구	17.38	11	서대문구	26.57	11	영등포구	32.78
12	강남구	9.03	12	구로구	17.32	12	성동구	25.25	12	성동구	30.74
13	영등포구	8.97	13	동작구	17.24	13	영등포구	24.64	13	성북구	29.84
14	서초구	8.50	14	성북구	17.10	14	성북구	23.73	14	강남구	29.29
15	중랑구	8.39	15	서대문구	16.99	15	중랑구	22.99	15	중랑구	28.65
16	양천구	8.05	16	성동구	16.82	16	강북구	22.25	16	강북구	28.48
17	도봉구	7.77	17	중랑구	14.16	17	강서구	21.59	17	구로구	26.19
18	송파구	7.63	18	강동구	14.03	18	서초구	21.33	18	강서구	26.19
19	강동구	7.57	19	송파구	13.78	19	구로구	21.14	19	은평구	24.44
20	관악구	7.38	20	강서구	13.70	20	강동구	19.87	20	서초구	24.34
21	은평구	7.32	21	강북구	13.55	21	송파구	19.24	21	강동구	24.31
22	노원구	6.93	22	은평구	13.30	22	은평구	19.23	22	송파구	23.16
			23	양천구	12.05	23	도봉구	17.85	23	노원구	22.52
			24	도봉구	10.43	24	노원구	17.39	24	도봉구	21.88
			25	노원구	9.80	25	양천구	16.35	25	양천구	20.0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1990~2015)

---

## 03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특성

---

- 서울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25~34세에 집중

서울시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남성 가구주의 경우 30~34세가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분포가 낮았다. 여성 가구주는 25~29세가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년을 지나면서 분포가 다시 증가하여 고령층에서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 수도권 남성 1인가구 가구주는 30~34세에 집중 분포

수도권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남성 가구주의 경우 30~34세가 가장 높았다. 여성 가구주는 25~29세가 가장 높았고 고령층에서 다시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구는 관악구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관악구는 20대 가구주가 35.6퍼센트로 가장 높다. 강남구는 30대 가구주가 34.0퍼센트를 차지해 1인가구 가구주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도봉구(34.5퍼센트), 노원구(34.0퍼센트), 강북구(33.1퍼센트) 등이다.

- 1인가구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남성 가구주 비율보다 높아

서울시의 1인가구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51.2퍼센트로 남성 가구주 비율보다 2.4퍼센트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는 남성 가구주 비율이 높았으며,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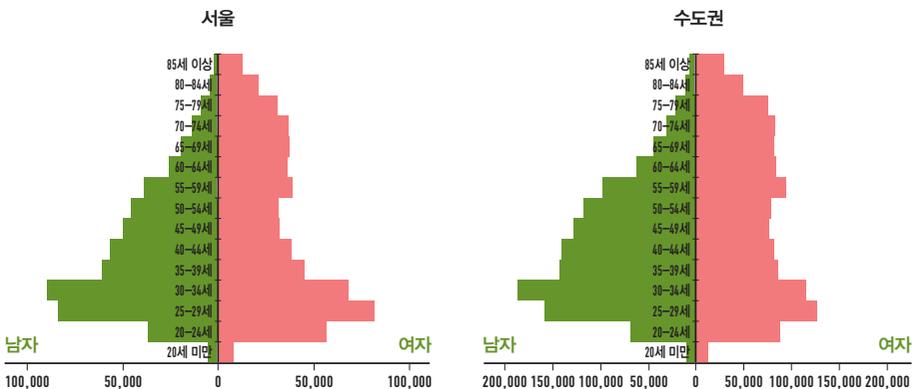
| 표 6-4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비율(2015)

	서울		수도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미만	1.03%	1.42%	20세 미만	0.83%	1.14%
20~24세	6.83%	9.78%	20~24세	5.55%	7.53%
25~29세	15.44%	14.24%	25~29세	12.91%	10.90%
30~34세	16.54%	11.84%	30~34세	15.14%	9.89%
35~39세	11.21%	7.80%	35~39세	11.64%	7.36%
40~44세	10.43%	6.65%	40~44세	11.49%	7.01%
45~49세	9.23%	5.58%	45~49세	10.43%	6.57%
50~54세	8.42%	5.52%	50~54세	9.56%	6.84%
55~59세	7.11%	6.82%	55~59세	7.99%	8.15%
60~64세	4.79%	6.33%	60~64세	5.13%	7.18%
65~69세	3.59%	6.45%	65~69세	3.64%	7.08%
70~74세	2.51%	6.37%	70~74세	2.56%	7.16%
75~79세	1.61%	5.45%	75~79세	1.71%	6.42%
80~84세	0.78%	3.57%	80~84세	0.87%	4.26%
85세 이상	0.48%	2.18%	85세 이상	0.52%	2.5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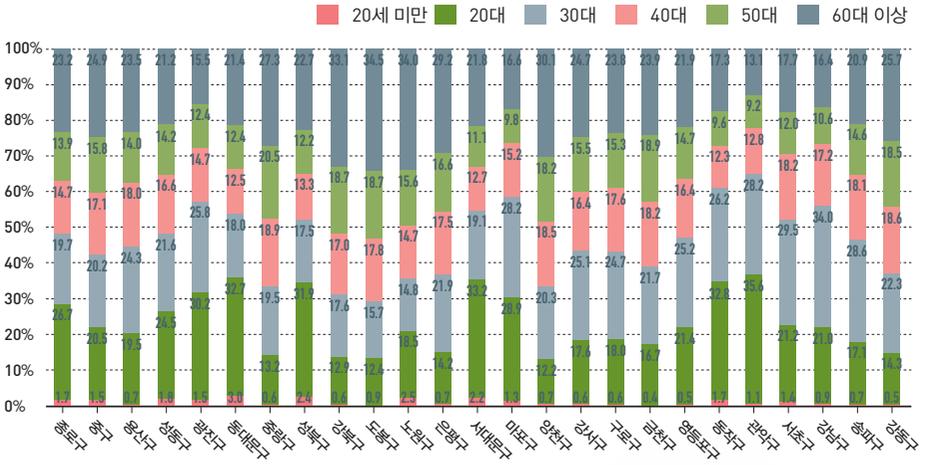
| 그림 6-3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구조(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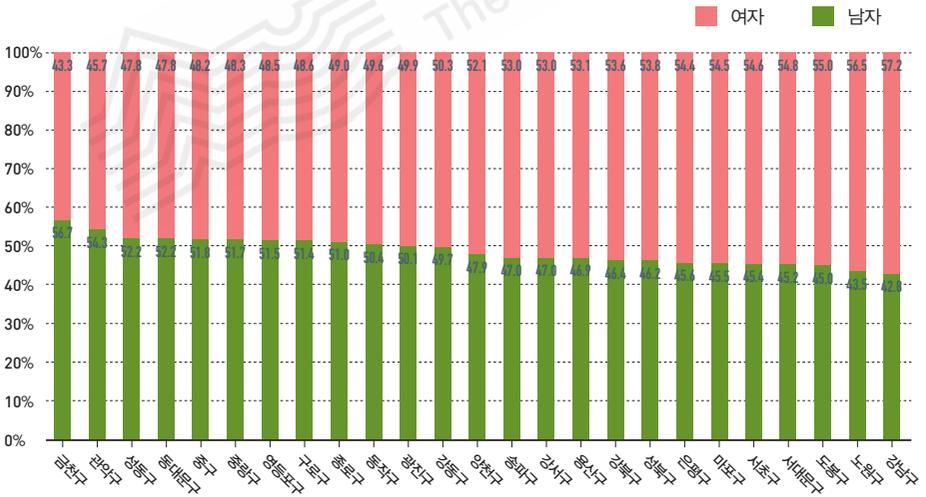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그림 6-4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분포(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그림 6-5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가구주의 성별 구성(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전수조사)

# 04 서울 1인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퍼센트

2015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중 경제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비율은 59.1퍼센트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서울보다 약간 더 높은 60.0퍼센트로 나타난다. 전국 1인가구의 경제활동

| 그림 6-6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1인가구 20% 표본조사

| 표 6-5 | 서울과 수도권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2015)

	1인가구(15세 이상) 전체 가구 수	일하였음 가구 수	일하지 않았음 가구 수	경제활동 참여율
전국	5,211,060	2,874,390	2,336,370	55.2%
서울	1,114,944	658,984	455,960	59.1%
인천	243,261	140,190	103,071	57.6%
경기	1,028,077	632,050	396,027	61.5%
수도권	2,386,282	1,431,224	955,058	6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1인가구 20% 표본조사

동 참여율은 55.2퍼센트이다. 서울시 남성 1인가구의 67.1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 1인가구의 52.4퍼센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각각 70.8퍼센트, 50.1퍼센트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경제활동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경제적 열악함을 추정할 수 있다.

## 05 여성 1인가구

### ● 여성 1인가구는 서울의 전체 가구 중 15퍼센트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이 1인가구의 가구주인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여성 1인가구 수는 2015년 현재 57만 1,685가구이다. 여성 1인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5.1퍼센트로 서울의 10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은 여성 혼자 사는 여성 1인가구이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여성 1인가구 수는 115만 6,295가구로, 수도권 전체 가구의 12.5퍼센트를 차지한다. 전체 가구 중 여성 1인가구의 점유율로 보면 서울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

| 표 6-6 | 서울과 수도권의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2000~2015)

	2000			2005			2010			2015		
	전체 가구 수	여성 1인가구		전체 가구 수	여성 1인가구		전체 가구 수	여성 1인가구		전체 가구 수	여성 1인가구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서울	3,085,936	264,905	8.58	3,309,890	353,835	10.69	3,504,297	450,030	12.60	3,784,490	571,685	15.11
수도권	6,502,119	483,542	7.44	7,462,090	697,881	9.35	8,254,281	917,146	10.90	9,214,649	1,156,295	12.5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 표 6-7 | 서울 자치구별 여성 1인가구 수 및 비중(2015)

	전체 가구 수	여성 1인가구	
		가구 수	비율(%)
관악구	228,636	45,831	20.0
마포구	154,981	28,560	18.4
광진구	147,718	27,024	18.3
용산구	90,313	16,469	18.2
서대문구	121,034	22,004	18.2
종로구	61,580	11,168	18.1
중구	51,205	9,227	18.0
동대문구	146,677	25,297	17.2
강남구	211,357	35,414	16.8
동작구	161,000	26,770	16.6
성북구	174,257	27,981	16.1
영등포구	147,745	23,470	15.9
강북구	125,666	19,187	15.3
성동구	114,719	16,858	14.7
금천구	93,443	13,520	14.5
강서구	217,636	30,223	13.9
중랑구	157,537	21,821	13.9
서초구	154,031	20,477	13.3
은평구	179,752	23,894	13.3
노원구	204,836	26,051	12.7
구로구	156,528	19,900	12.7
송파구	230,941	28,334	12.3
강동구	164,094	20,077	12.2
도봉구	124,981	15,033	12.0
양천구	163,823	17,095	10.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여성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관악구

서울시 전체 구 가운데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이다. 관악구에서 전체 가구의 20.0퍼센트를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마포구(18.4퍼센트), 광진구(18.4퍼센트), 용산구(18.3퍼센트), 서대문구(18.2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

## 01 노인가구의 변화

- 서울의 노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17.7퍼센트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한 가구로 정의된다. 2015년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총 67만 1,312호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7.7퍼센트이다. 2000년 노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14.2퍼센트였으며 2005년에는 약 56만 가구로 16.9퍼센트를 차지했다. 서울의 노인가구는 5년마다 3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인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패턴이나 서울보다는 노인가구 비중이 낮다. 수도권 노인가구는 2000년 14.8퍼센트, 2005년 17.1퍼센트, 2010년 19.8퍼센트, 2015년 16.3퍼센트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서울의 노인가구 구성은 2세대 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32.7퍼센트를 차지

2015년 서울의 노인가구를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 중 32.7퍼센트에 해당하는 21만 9,392가구가 2세대 가구이다. 즉 부모와 자식 세대로 구성된 가구인 것이다.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노인가구의 3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27.7퍼센트에 해당하는 18만 6,131가구이다. 노인가구 중

표 7-1 | 서울과 수도권의 노인가구 규모 및 비중 변화(2000~2015)

		2000	2005	2010	2015
서울	가구 수	438,578	559,256	709,585	671,312
	비율(%)	14.2	16.9	20.2	17.7
수도권	가구 수	964,512	1,279,389	1,632,075	1,499,448
	비율(%)	14.8	17.1	19.8	16.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표 7-2 | 서울과 수도권의 세대 구성별 노인가구 규모 및 비중(2015)

		계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가구	비친족가구
서울	가구 수	671,312	218,978	219,392	43,175	458	186,131	3,178
	비율(%)	100.0	32.6	32.7	6.4	0.1	27.7	0.5
수도권	가구 수	1,499,448	503,994	453,498	101,224	1,236	431,840	7,656
	비율(%)	100.0	33.6	30.2	6.8	0.1	28.8	0.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조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6.4퍼센트에 불과하다. 수도권 노인가구는 노인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33.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2세대 가구가 30.2퍼센트, 노인 1인가구가 28.8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 02 서울 자치구별 노인가구 현황

- 고령자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북구

강북구에서는 4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노인가구이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고령자가

| 표 7-3 | 서울 자치구별 노인가구 규모와 비율(2010~2015)

2010		가구 수	비율(%)	2015		가구 수	비율(%)
1	강북구	30,092	25.7	1	강북구	29,478	23.5
2	종로구	14,399	24.9	2	도봉구	26,059	20.9
3	중구	11,272	24.7	3	중구	10,581	20.7
4	서대문구	27,468	24.4	4	종로구	12,606	20.5
5	은평구	37,405	24.1	5	서대문구	24,167	20.0
6	도봉구	27,884	23.4	6	용산구	17,914	19.8
7	용산구	19,997	23.1	7	은평구	35,610	19.8
8	동대문구	29,321	22.9	8	동대문구	28,245	19.3
9	성북구	37,041	22.7	9	성북구	33,300	19.1
10	노원구	42,454	21.5	10	중랑구	29,544	18.8
11	성동구	22,835	21.3	11	노원구	38,232	18.7
12	중랑구	30,507	21.0	12	금천구	17,288	18.5
13	영등포구	29,154	21.0	13	영등포구	27,245	18.4
14	동작구	29,881	20.5	14	구로구	28,605	18.3
15	마포구	28,314	20.0	15	성동구	20,392	17.8
16	금천구	17,257	19.9	16	동작구	28,394	17.6
17	구로구	28,295	19.8	17	강서구	36,387	16.7
18	강서구	37,217	19.2	18	강동구	27,398	16.7
19	양천구	28,548	18.5	19	양천구	26,922	16.4
20	서초구	24,734	18.1	20	마포구	25,183	16.2
21	강동구	28,718	18.0	21	관악구	35,859	15.7
22	송파구	37,776	17.2	22	서초구	24,011	15.6
23	광진구	22,469	16.8	23	송파구	35,027	15.2
24	관악구	35,904	16.5	24	강남구	31,507	14.9
25	강남구	30,643	15.2	25	광진구	21,358	14.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2015)

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2015년에는 비율이 23.5퍼센트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도봉구 20.9퍼센트, 중구 20.7퍼센트, 종로구 20.5퍼센트, 서대문구 20.0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진구는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이 14.5퍼센트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강남구(14.9퍼센트), 송파구(15.2퍼센트), 서초구(15.6퍼센트)가 포함된 동남권이 노인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 03 서울 노인 1인가구주의 차별적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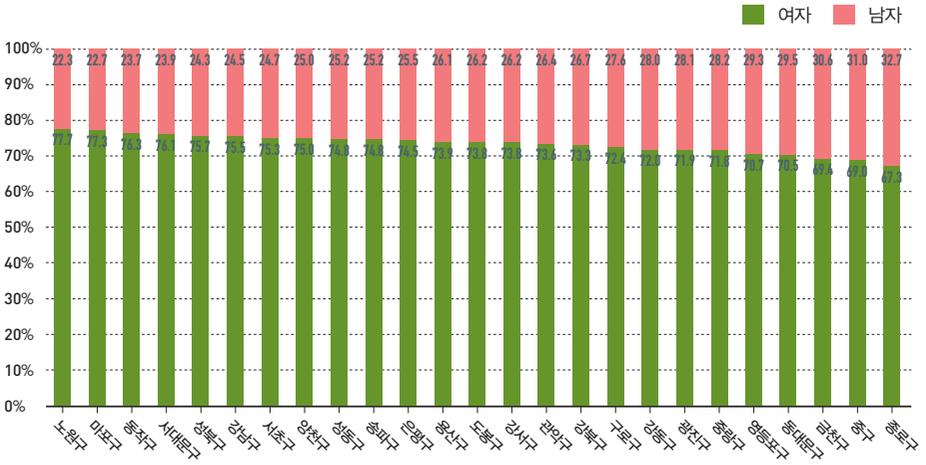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는 73퍼센트 이상이 여성 가구주

노인 1인가구주는 대부분 여성 가구주이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의 노인 1인가구주 가운데 77.7퍼센트가 여성이다. 노원구를 비롯해 마포구(77.3퍼센트), 동작구(76.3퍼센트), 성북구(75.7퍼센트), 강남구(75.5퍼센트), 서초구(75.3퍼센트), 양천구(75.0퍼센트)는 노인 1인가구주 4명 중 3명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서울 노인 1인가구주의 17.4퍼센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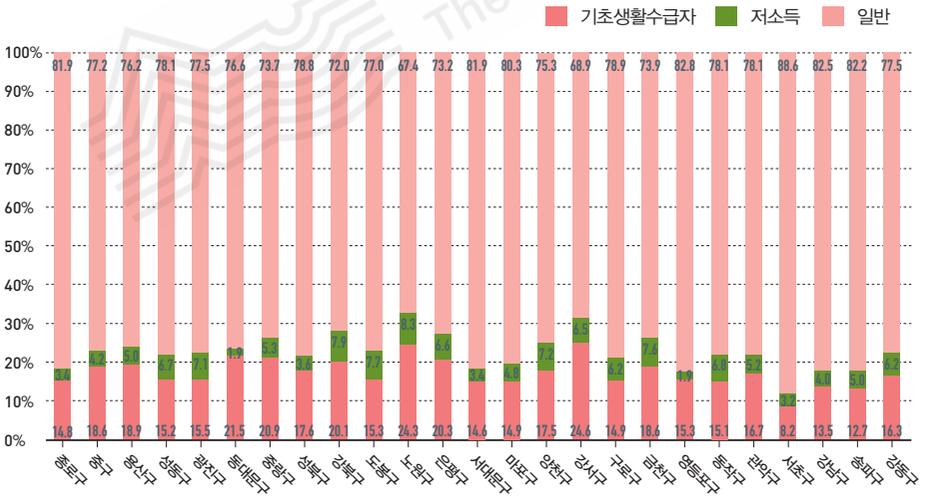
혼자 사는 노인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 노인 1인가구주의 17.4퍼센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고, 5.5퍼센트는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강서구(24.6퍼센트), 노원구(24.3퍼센트)로, 강서구에 3,693명, 노원구에 4,200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거주한다. 노원구는 저소득 노인의 비중도 8.3퍼센트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

| 그림 7-1 | 서울 자치구별 노인 1인가구주의 성별 구조(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그림 7-2 | 서울 자치구별 독거노인의 경제실태(2015)



\* 저소득노인은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함

자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015)

# 이혼가구

## 01 이혼가구의 분포

- 서울 가구 중 이혼가구는 33만 6,346가구로 전체의 8.9퍼센트

이혼가구는 가구주가 이혼 상태인 가구이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전체 가구 중 이혼가구는 33만 6,346가구로 전체 가구의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이혼가구는 87만 4,959가구로 수도권 전체 가구의 9.5퍼센트를 차지해 서울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 서울 이혼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

서울에서 이혼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랑구로 2015년 기준 이혼가구가 2만 719가구이다. 이는 중랑구 전체 가구의 13.1퍼센트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즉 중랑구에서는 10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의 가구주가 이혼 상태이다. 강북구와 금천구도 이혼가구 비중이 12.4퍼센트, 12.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편 서초구의 이혼가구 비율이 6.1퍼센트로 서울에서 가장 낮다.

표 8-1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가구 규모와 비중(2010, 2015)

	전체 이혼가구주 가구(2010)		전체 이혼가구주 가구(2015)	
	가구 규모	전체 가구 중 비중	가구 규모	전체 가구 중 비중
서울	260,789	7.4%	336,346	8.9%
수도권	644,077	7.8%	874,959	9.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2015)

표 8-2 | 서울 자치구별 이혼가구 규모와 비중(2010, 2015)

2010	이혼가구주 가구 규모	전체 가구 중 비율	2015	이혼가구주 가구 규모	전체 가구 중 비율
중랑구	16,362	11.3%	중랑구	20,719	13.1%
강북구	12,277	10.5%	강북구	15,573	12.4%
금천구	8,740	10.1%	금천구	11,175	12.0%
은평구	14,388	9.3%	도봉구	13,774	11.0%
강서구	17,534	9.1%	은평구	18,961	10.5%
중구	3,964	8.7%	강서구	22,549	10.4%
강동구	13,408	8.4%	강동구	16,900	10.3%
도봉구	9,965	8.4%	중구	5,018	9.8%
노원구	14,757	7.5%	양천구	15,319	9.3%
동대문구	9,481	7.4%	동대문구	13,674	9.3%
양천구	11,308	7.3%	광진구	13,237	9.0%
종로구	4,230	7.3%	노원구	18,002	8.8%
광진구	9,683	7.3%	구로구	13,153	8.4%
성동구	7,727	7.2%	서대문구	10,084	8.3%
서대문구	7,839	7.0%	성동구	9,429	8.2%
영등포구	9,630	6.9%	송파구	18,696	8.1%
성북구	11,236	6.9%	성북구	13,906	8.0%
용산구	5,950	6.9%	용산구	7,170	7.9%
구로구	9,482	6.6%	영등포구	11,355	7.7%
송파구	14,364	6.5%	종로구	4,712	7.6%
마포구	8,898	6.3%	관악구	17,237	7.5%
관악구	13,348	6.1%	마포구	11,191	7.2%
동작구	8,453	5.8%	동작구	11,130	6.9%
강남구	11,038	5.5%	강남구	14,025	6.6%
서초구	6,727	4.9%	서초구	9,357	6.1%

\* 주 : 표본조사, 일반가구 대상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일반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2015)

## 02 이혼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

- 2015년 서울의 이혼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많아

서울시 이혼가구의 가구주 성별 구조를 보면 남성 가구주 수가 12만 8,122이고, 여성 가구주 수는 20만 8,224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중 남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3.4퍼센트이며,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5.5퍼센트로 여성 가구주가 2.1퍼센트포인트 높다. 수도권 역시 여성 가구주가 전체 이혼가구 중 5.8퍼센트로 남성 가구주 비율인 3.7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3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가구주 성별 가구 규모와 비율(2015)

2015	남성 이혼가구주 가구		여성 이혼가구주 가구	
	이혼가구 규모	남성 가구주 비율	이혼가구 규모	여성 가구주 비율
서울	128,122	3.4%	208,225	5.5%
수도권	342,074	3.7%	532,88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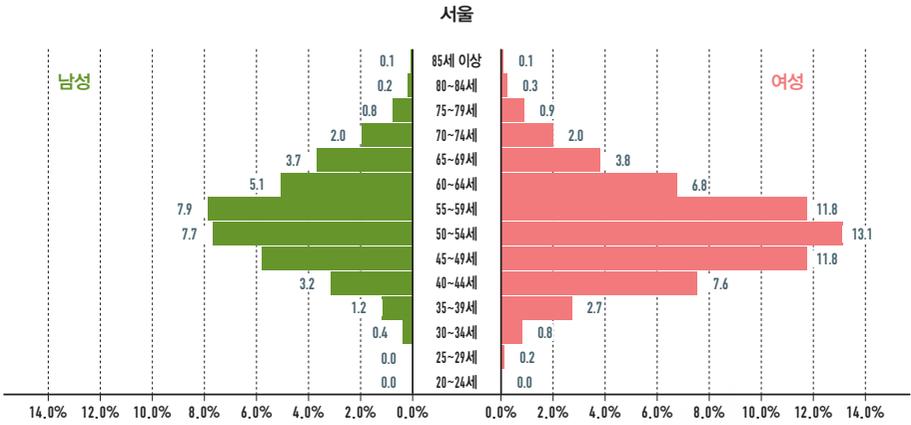
\* 주 : 표본조사, 일반가구 대상  
 집단가구, 집단사설가구,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일반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이혼가구주는 여성 50~54세 집단 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시 전체 이혼가구주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여성 50~54세로 13.1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여성 40~44세와, 55~59세가 각각 7.6퍼센트, 11.8퍼센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이혼가구의 약 70퍼센트는 40~50대였으며, 남성의 경우 55~59세가 7.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림 8-1 | 서울과 수도권 이혼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구조(2015)



\* 주 : 서울시 전체 이혼가구주 = 1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03 이혼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가구원 구성

- 남성 이혼가구주의 67퍼센트, 여성 이혼가구주의 60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여

남성 이혼가구주 가운데 67.7퍼센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32.7퍼센트는 일하지 않고 있다. 여성 이혼가구주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 이혼가구주 가운데 60.8퍼센트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39.2퍼센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이혼가구는 1인가구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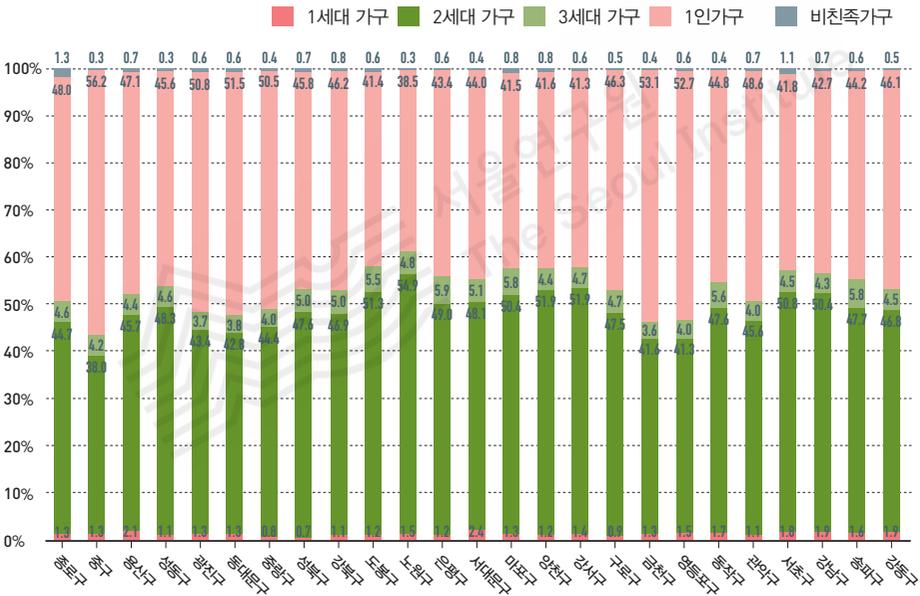
가구주가 이혼한 경우의 세대 구성 유형을 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지역별 편차는 크다. 중구(56.2퍼센트), 금천구(53.1퍼센트), 영등포구(52.7퍼센트), 동대문구(51.5퍼센트) 등의 이혼가구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노원구는 2인가구 유형이 54.9퍼센트로 1인가구 유형인 38.5퍼센트보다 높다.

| 표 8-4 | 이혼가구의 경제활동 상태(2015)

	서울	남자	여자
일하였음	63.4%	67.3%	60.8%
일하지 않았음	36.6%	32.7%	39.2%
합계	100.0%	100.0%	100.0%

\* 주 : 일하였음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 휴직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인구부문, 경제활동 20% 표본조사  
 혼인상태 중 별거는 이혼에 포함

| 그림 8-2 | 서울 자치구별 이혼가구의 세대 구성(2015)



\* 주 : 1세대 가구 :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가구주 + 기타 친인척 등  
 2세대 가구 : 부/모 + 미혼자녀, 부부 + 한부모, 조부/조모 + 미혼손자녀 등  
 3세대 가구 : 부부 + 미혼자녀 + 부친/모친

자료 : 인구총조사(2015), 표본부문

## 다문화가구

### 01 다문화가구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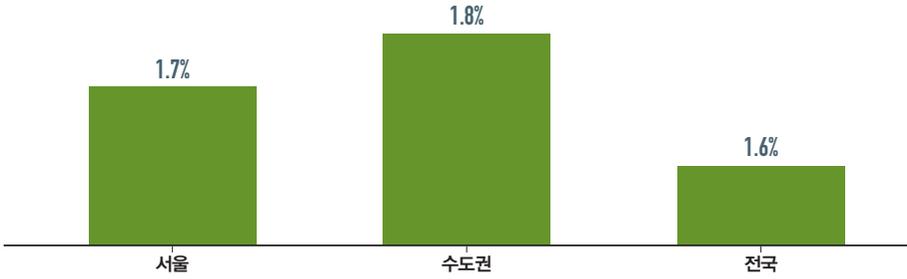
-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1.7퍼센트

다문화가구는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이 가구원으로 속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6만 4,013가구이며, 전체 가구원은 16만 7,836명이다. 서울 전체 가구(일반 가구 기준)의 1.7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의 다문화가구는 수도권 전체 가구의 1.8퍼센트를 차지하며, 전국 수준에서는 한국 사회 전체 가구의 1.6퍼센트가 다문화가구이다.

- 서울에서 다문화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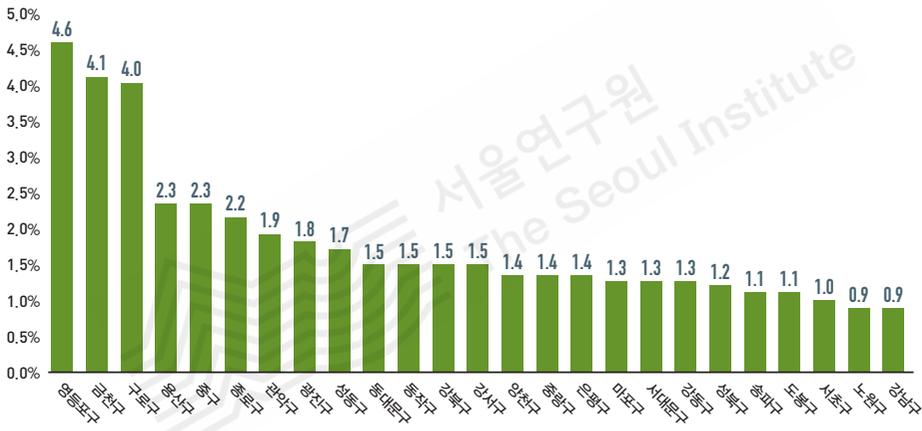
서울 자치구 중 다문화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로 전체 가구 중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금천구(4.1퍼센트), 구로구(4.0퍼센트) 순이다. 용산구와 중구도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2.3퍼센트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노원구는 다문화가구 비율이 0.9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그림 9-1 | 서울, 수도권, 전국의 전체 가구 수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그림 9-2 | 서울의 자치구별 전체 가구 수 대비 다문화가구 비중(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9-1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원 수별 다문화가구의 수와 비율(2015)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서울	가구 수	64,013	12,820	22,054	14,615	9,012	3,609	1,903
	비중	100.0%	20.0%	34.5%	22.8%	14.1%	5.6%	3.0%
수도권	가구 수	166,702	26,267	56,056	41,135	27,113	10,714	5,417
	비중	100.0%	15.8%	33.6%	24.7%	16.3%	6.4%	3.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표 9-2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구성별 다문화가구의 수와 비율(2015)

		전체	내국인(귀화)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내국인(출생) + 외국인 (결혼이민자)	내국인(출생) + 다문화자녀	내국인(귀화) + 외국인 (결혼이민자)	기타
서울	가구 수	64,013	14,451	14,498	18,124	7,875	3,614	5,451
	비중	100.0%	22.6%	22.6%	28.3%	12.3%	5.6%	8.5%
수도권	가구 수	166,702	30,574	40,947	52,840	20,029	8,533	13,779
	비중	100.0%	18.3%	24.6%	31.7%	12.0%	5.1%	8.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02 다문화가구의 특성

### ●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2인가구가 34.5퍼센트

서울의 다문화가구 가운데 2인가구가 34.5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3인가구가 22.8퍼센트, 1인가구가 20.0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2인가구가 33.6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3인가구가 24.7퍼센트, 4인가구가 16.3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 ● 다문화가구원 구성은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의 비율이 28.3퍼센트

다문화가구는 정의상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구에는 외국인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의 다문화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 수는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16만 7,836명이다. 가구구성별 다문화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 비율이 28.3퍼센트로 가장 높고, 내국인(귀화)과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비율이 각각 22.6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 비율이 31.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이 24.6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 표 9-3 | 서울과 수도권의 성별 연령별 가구원 수(2015)

	연령	총가구원			내국인(출생)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서울	계	167,836	78,001	89,835	91,589	53,482	38,107
	0~9세	28,158	14,201	13,957	27,131	13,706	13,425
	10~19세	10,351	5,123	5,228	9,051	4,563	4,488
	20~29세	14,624	4,343	10,281	3,675	1,793	1,882
	30~39세	28,520	11,049	17,471	10,624	6,172	4,452
	40~49세	34,887	18,607	16,280	16,105	12,069	4,036
	50~59세	27,474	13,797	13,677	10,958	7,929	3,029
	60세 이상	23,822	10,881	12,941	14,045	7,250	6,795
수도권	계	459,750	216,399	243,351	266,388	162,363	104,025
	0~9세	84,646	43,140	41,506	82,178	41,939	40,239
	10~19세	30,851	15,332	15,519	27,591	13,920	13,671
	20~29세	43,284	11,612	31,672	9,931	4,907	5,024
	30~39세	78,888	29,574	49,314	27,632	17,934	9,698
	40~49세	97,693	55,431	42,262	50,609	40,973	9,636
	50~59세	67,877	36,086	31,791	32,096	24,661	7,435
	60세 이상	56,511	25,224	31,287	36,351	18,029	18,322

## 03 다문화가구의 연령구조

- 다문화가구의 연령구조는 40대가 가장 많아

서울의 다문화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연령구성을 보면 전체 가구원 중 40대가 20.8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17.0퍼센트를 차지한다. 수도권의 경우 40대가 21.2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대 미만으로 18.4퍼센트를 차지한다.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40,297	12,457	27,840	27,239	7,835	19,404	8,711	4,227	4,484
760	357	403	0	0	0	267	138	129
940	428	512	84	0	84	276	132	144
4,348	1,337	3,011	5,219	510	4,709	1,382	703	679
8,194	1,847	6,347	8,029	2,132	5,897	1,673	898	775
10,140	3,258	6,882	7,023	2,341	4,682	1,619	939	680
9,170	2,866	6,304	5,384	2,138	3,246	1,962	864	1,098
6,745	2,364	4,381	1,500	714	786	1,532	553	979
96,332	25,976	70,356	75,339	17,782	57,557	21,691	10,278	11,413
1,825	871	954	-	-	-	643	330	313
2,162	985	1,177	225	-	222	873	424	449
12,306	3,358	8,948	17,349	1,277	16,072	3,698	2,070	1,628
24,014	4,368	19,646	23,449	5,122	18,327	3,793	2,150	1,643
24,695	6,854	17,841	18,586	5,503	13,083	3,803	2,101	1,702
18,380	5,136	13,244	12,614	4,417	8,197	4,787	1,872	2,915
12,950	4,404	8,546	3,116	1,460	1,656	4,094	1,331	2,76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다문화가구원 중 외국인(결혼이민자+기타) 연령구조는 30대가 가장 많아

서울의 다문화가구에 속한 외국인의 연령구조는 30대가 27.0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40대가 24.0퍼센트, 50대가 20.4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또한 30대가 28.1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40대가 23.1퍼센트, 20대가 21.7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 ● 통계로 보는 서울 가구 요약

### 가구구조

- 2015년 서울의 가구 수는 378만 가구로 1980년보다 약 2배 증가

1980년부터 서울의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 378만 4,490가구로 전국 가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수도권의 가구는 921만 4,649가구로 전국 가구의 약 48퍼센트에 해당한다. 1980부터 2015년까지 35년 동안 서울의 가구는 약 2.1배, 수도권은 3.2배, 전국은 2.4배 증가하여 수도권, 전국, 서울 순으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 수도권은 2.6명

2015년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으로 1980년 4.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 수도권, 전국이 모두 비슷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35년 동안 수도권의 경우에도 평균 가구원 수가 4.32명에서 2.6명, 전국의 경우에도 4.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 가구소득

- 서울의 보통가구(평균가구)는 가구소득 월 400~500만 원 규모

2015년 서울서베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보통가구는 48.9세의 남자 가장으로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월 400~500만 원의 소득을 가진다. 이를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서울의 보통가구는 48.3세의 남자 가장이 전문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월 327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별 소득을 살펴보면,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동남1생활권(43.7퍼센트), 서남3생활권(39.5퍼센트), 도심권(36.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서남2생활권(15.0퍼센트), 서남1생활권(11.8퍼센트), 서북

생활권(10.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와 노인가구

### ● 2015년 서울의 1인가구는 11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5퍼센트를 차지

2015년 서울의 1인가구는 111만 5,744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5퍼센트를 차지한다. 1980년에 서울의 1인가구 수는 8만 2천여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규모가 1985년에는 15만 6천여 가구로, 1990년 25만 7천여 가구, 1995년 38만 2천여 가구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급격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0년에는 50만 2천여 가구, 2015년에는 67만 5천여 가구에 이르러 1980년에 비해 지난 35년 동안 서울의 1인가구는 13.5배 증가하였다.

### ● 서울 1인가구주의 연령분포는 25~34세에 집중

서울시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남성 가구주의 경우 30~34세에서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도 25~29세에서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년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여 고령층에서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1인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51.2퍼센트로 남성 가구주 비율보다 2.4퍼센트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는 남성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 서울의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퍼센트

2015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주 중 경제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59.1퍼센트이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약간 더 높은 60.0퍼센트로 나타난다. 전국 1인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2퍼센트이다. 서울의 남성 1인가구주의 67.1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 1인가구주의 52.4퍼센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각각 70.8퍼센트, 50.1퍼센트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주의 경제활동 비율이 과반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 1인가구주의 경제적 열악함을 추정할 수 있다.

- **서울의 전체 가구 중 15퍼센트 이상은 여성 1인가구**

1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이 1인가구의 가구주인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여성 1인가구 수는 2015년 현재 57만 1,685가구이다. 여성 1인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5.1퍼센트로 서울에서 10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은 여성이 혼자서 가구주로 사는 여성 1인가구이다.

- **서울의 노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17.7퍼센트**

2015년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총 67만 1,312호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7.7퍼센트이다. 2000년 노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14.2퍼센트였으며, 2005년에는 16.9퍼센트(55만 9천여 가구)였다. 서울의 노인가구는 5년마다 3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패턴이나 서울보다는 노인가구 비중이 낮다. 2000년 수도권 노인가구는 14.8퍼센트, 2005년 17.1퍼센트, 2010년 19.8퍼센트, 2015년 16.3퍼센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서울의 노인가구 구성은 2세대 가구가 32.7퍼센트를 차지**

2015년 서울의 노인가구를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 중 32.7퍼센트에 해당하는 21만 9,392가구는 2세대 가구이다. 즉 부모와 자식 세대로 구성된 가구인 것이다. 노인부부만 구성된 1세대 가구는 노인가구의 3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혼자만으로 구성된 노인 1인가구, 즉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27.7퍼센트에 해당하는 18만 6,131가구이다. 노인가구 중 조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6.4퍼센트에 불과하다.

## **이혼가구와 다문화가구**

- **서울의 이혼가구는 전체 가구의 8.9퍼센트**

이혼가구란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이혼인 경우이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전체 가구 중 이혼가구는 33만 6,346가구로 전체 가구의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이혼가구는 87만 4,959가구로 수도권 전체 가구의 9.5퍼센트를 차지해 서울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 이혼가구주는 여성 50~54세 집단 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시 전체 이혼가구주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여성 50~54세로 전체의 13.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40~44세와 55~59세가 각각 11.8퍼센트로 나타났다. 이혼가구의 약 70퍼센트는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55~59세가 7.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1.7퍼센트

다문화가구는 가구원으로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을 포함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6만 4,013가구이며, 전체 가구원은 16만 7,836명이다. 서울 전체 가구(일반가구 기준)의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문화가구는 수도권 전체 가구의 1.8퍼센트를 차지하며,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1.6퍼센트가 다문화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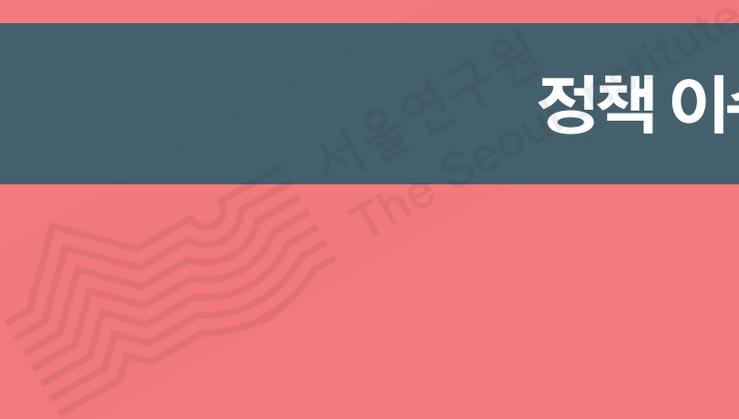
-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2인가구가 34.5퍼센트 차지

서울의 다문화가구 가운데 2인가구는 34.5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인가구(22.8퍼센트), 1인가구(20.0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2인가구가 33.6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3인가구(24.7퍼센트), 4인가구(16.3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3부



# 정책 이슈



## 인구성장 이슈

### 01 인구성장 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

- 절대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와 적응 방안 모색 필요

한국 사회는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의 출산력, 즉 합계출산율 2.0 이하로 내려간 후, 1990년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극소 출산력 상태로 내려온 한국의 출산력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위 선진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발굴 필요

인구 피라미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서 고연령층의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예측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늘 인구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사망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으로 시작된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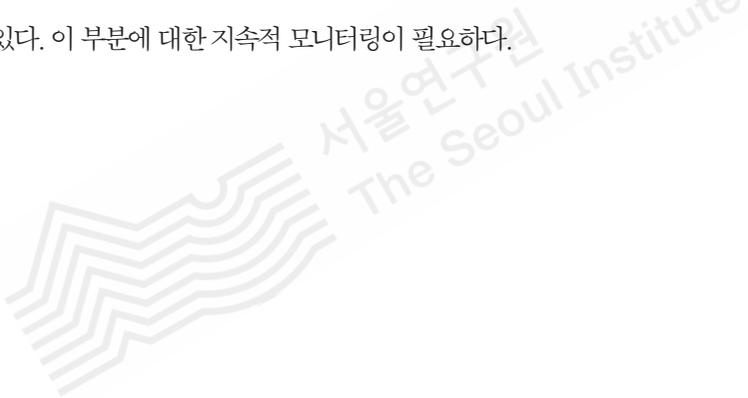
---

## 02 인구 규모 예측에 따른 시사점

---

- 새로운 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 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1천만 명 이하가 된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45년에는 881만 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자체의 인구감소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밀 부문을 해소하여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혹은 국제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서울시의 절대 인구는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인구구조 이슈

### 01 인구구조 최적화 상태에서 점차 악화

- 인구구조는 역삼각형 항아리 구조 변화 전망

낮은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령층의 사망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인구구조는 유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이 줄어들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인구구조는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아랫부분(젊은 층)이 좁아지고 윗부분(고령층)이 넓어지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응해야

2010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에서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유소년 피부양인구 및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최상의 인구구조이다. 이는 인구학적으로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인구구조로 '인구보너스 인구구조'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고령 피부양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양비가 높아지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던 시기에도

유소년 및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능력은 취약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곧 부양할 재원은 감소하는데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바뀌고 있으니 앞으로 유소년뿐 아니라 특히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변화뿐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 0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

---

-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실업 감소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층의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은 ‘그렇지 않다’이다. 서울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현재 외국인으로 충당되고 있는 업종의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의 내국인 취업 기피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의 지속적 유입 가능성에 따른 사회통합 이슈에 대응해야

현재 서울시 인구구조에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서울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녀 교육, 직업 다양화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저출산 심화와 젊은 층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문제점 부각될 듯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성인층이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시장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젊은 노동력은 공급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일자리 불안정 상태가 만혼과 출산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가족 형

성 단계의 인구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인구구조의 건강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고령가구를 위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시의 고령 세대는 뚝뚝한 노후대책 없이 고령의 삶을 맞이하고 있다. 가족은 더 이상 고령 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세대 간 상호 기대가 희박해지면서 고령 세대는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자살률 증가는 고령 세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은퇴 후 대책이 아닌 현재 빈곤 노인들을 위한 생계 유지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고령화 이슈

### 01 서울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추이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관계는 복잡적이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 복지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구조 및 인구과정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20~30대 고용불안정성 증가는 혼인을 및 출산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한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보건복지 체계 발전에 따른 건강 향상은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령화를 가속화한다. 이렇듯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관계는 상호적(reciprocal)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적 관계는 인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상호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서울의 인구 변화와 인구 고령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인구학적 방법론은 연령 구성 및 연령에 따른 출산, 사망, 인구이동률에 거의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연령

구성과 인구과정은 한 사회의 인구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하지만 인구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상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령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구학적 지표와 더불어 최근 인구학적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적인 인구 지표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서울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추이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

## 02 개념적 논의와 인구 지표

---

### ●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의 관계

인구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구 특성(성, 연령 등)의 분포를 의미하며, 인구과정은 인구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출산, 사망, 인구가동을 의미한다.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한다. 우선 인구구조는 인구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인구가동이 활발한데, 이는 인구과정이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과정은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출산율이 높은 사회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을 것이며, 영유아 사망률이 낮으면 그 자체로는 젊은 인구의 비중을 낮추게 된다. 또한 해외로의 이주가 활발한 사회는 국제 이민이 주로 젊은 연령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젊은 인구의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와 인구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구 변화 및 고령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개념적 논의: 대안적 인구 지표 활용의 필요성

앞서 지적했듯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Lee and Mason, 2010).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면적 경향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80년의 65세 인구와 2017년의 65세 인구는 경제적 조건,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다. 2017년 65세 인구는 1980년 65세 인구보다 평균적으로 매우 건강하며 보다 좋은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고령화 추이를 측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의 함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해서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계봉오(2015)를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쟁점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발전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노년인구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와 15~64세 인구의 비로 측정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노년인구 부양비의 증가를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65세 이상 인구의 사회경제적 의존성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는 크게 유리될 가능성이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특성은 시기별로 매우 다르며, 현재의 65세 이상 인구는 과거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특성 중심 접근방식(characteristics approach)이라고 부르는데(Lutz et al., 1998), 이는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 장래 연령(prospective age)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인구학적 분석에 활용되는 연대기적인 연령(chronical age)은 태어나서 관측 시점까지 살아온 기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회고적 연령(retrospective age)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기적 연령에 따라 인구과정(출산, 사망,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회고적 연령에 기반한 분석은 인구학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반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 연대기적인 연령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한계를 갖는다. 이는 연대기적 연령의 통시적, 공시적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감소하기 때문이다(Lutz et

al., 2008). 앞서 설명했듯이, 1980년과 2017년의 65세 인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그런데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인구 고령화 지표는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출산력 및 사망력 하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겠지만, 건강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의 증가는 전통적인 사망력 지표의 변화가 시사하는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1970년 기대수명은 61.9년이었고, 2013년에는 그 수치가 81.9년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1970년의 75세 인구는 기대수명보다 13.1년이나 더 오래 생존한 '초고령' 인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2013년의 75세 인구는 기대수명보다 '젊은' 인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기대수명, 노인인구 부양비 등 전통적인 지표의 시계열적 비교는 그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인구학적인 연구들은 장래 연령 혹은 기대여명에 기반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서울의 인구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인구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또한 제시되고 있다. 장래 연령 중심의 접근방식은 인구의 특징을 회고적 연령이 아니라 장래 연령에 기반해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는 인구의 특징을 연령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소득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인구 고령화 지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의 자료를 활용한 몇몇 연구들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비중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의 향상이 노인인구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Batljan, Lagergren and Thorslund 2009; Batljan and Thorslund 2009; Joung et al., 2000; Lutz, 2009). 최근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를 살펴본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함의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덜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Kye et al., 2014; Kye, 2016). 이번 장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활용한 분석은 제외하며,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더불어 장래 연령에 기반한 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 ● 인구 변화 지표

이번 장에서 활용되는 인구 변화 지표의 정의, 수식, 자료원을 <표 12-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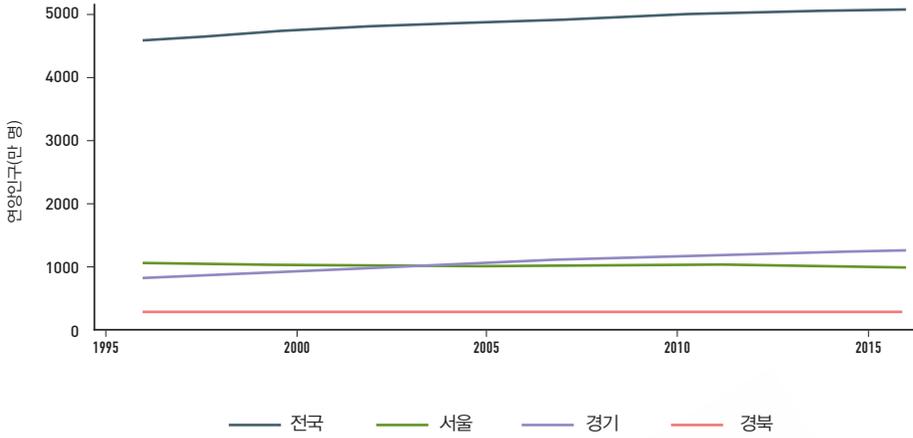
| 표 12-1 | 인구 변화 지표의 정의, 수식, 자료원

지표	정의 혹은 수식	자료원
총인구수	주민등록 연앙인구	주민등록 자료
자연증가율	(출생자-사망자)/주민등록 연앙인구	주민등록 자료 및 출생 및 사망신고
조출생률	출생자/주민등록 연앙인구	주민등록 자료 및 출생 및 사망신고
조사망률	사망자/주민등록 연앙인구	주민등록 자료 및 출생 및 사망신고
순이동률	(유입자-유출자)/주민등록 연앙인구	주민등록 자료
노년인구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주민등록 자료
중위연령	전체 인구에서 연령이 중앙값을 갖는 사람의 연령	주민등록 자료
RLE 15-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인구의 비중	주민등록 자료 및 시군구 연령별 사망률 자료
기대여명 평균	기대여명(ex)의 연령가중 평균	주민등록 자료 및 시군구 연령별 사망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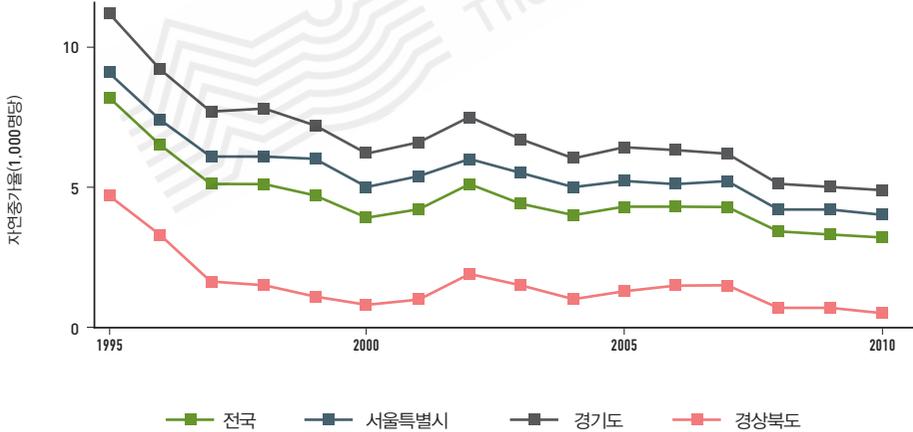
## 03 서울의 인구 변화 :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

〈그림 12-1〉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국 및 시도의 총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의 인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의 인구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 인구를 추월했다. 이러한 총인구 변화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동태 요인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데,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30~40대 인구의 인구유출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김창환, 2015).

| 그림 12-1 | 전국 및 시도의 총인구수 변화(1996~2016)



| 그림 12-2 | 전국 및 시도의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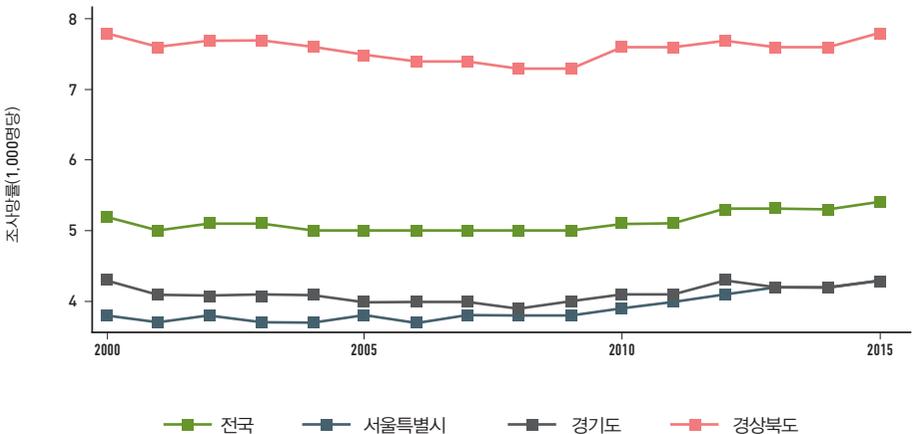
〈그림 12-2〉는 2000년 이후 전국, 서울, 경기 및 경북의 자연증가율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의 양상은 이들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준에서는 시도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 추이의 특징으로는 2000년 초반에 자연증가율이 빠르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5년에 최저점에 다다른 후에 2000

년대 후반에 다소 증가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에는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로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자연증가를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및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시도의 자연증가율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경북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자연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에는 1,000명당 0.5명으로 거의 영성장(zero growth)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낮은 자연증가율은 경북뿐만 아니라 농촌 중심 지역인 전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계봉오, 2016). 서울의 경우에는 경북에 비해서 약 1,000명당 5명 정도, 전국에 비해서는 1명 정도 높은 수준의 자연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서울의 자연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자연증가율은 경기도에 비해서는 1,000명당 1명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서울의 자연증가율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도보다는 다소 낮다.

앞서 논의했듯이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자연증가율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2-3>과 <그림 12-4>는 조사망률과 조출생률의 2000년 이후 변화추이를

그림 12-3 | 전국 및 시도의 조사망률 변화 추이(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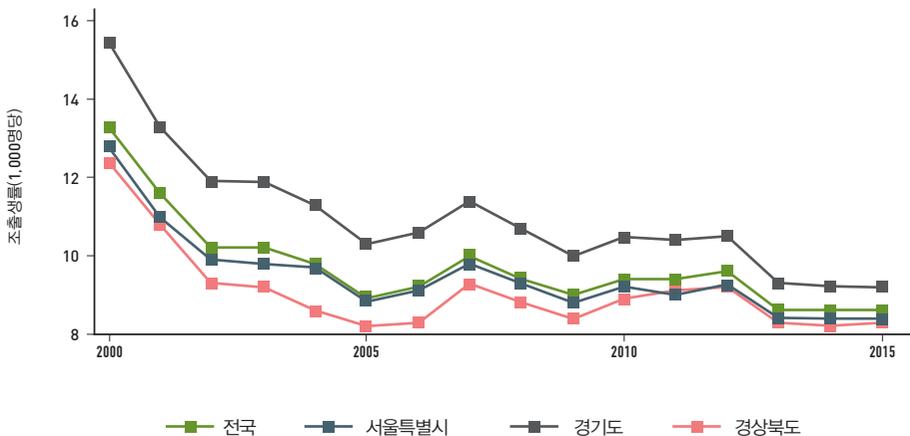
보여 준다.

〈그림 1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사망률은 2000년 이후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시기에 따라 다소간 등락이 있지만, 전국은 1,000명당 5명 수준, 경북은 1,000명당 7.5명 수준, 서울과 경기도는 1,000명당 4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의 조사망률이 경기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이후에는 두 지역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사망률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는 두 지역의 인구구조 및 연령별 사망률 변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지역 간 연령구조 차이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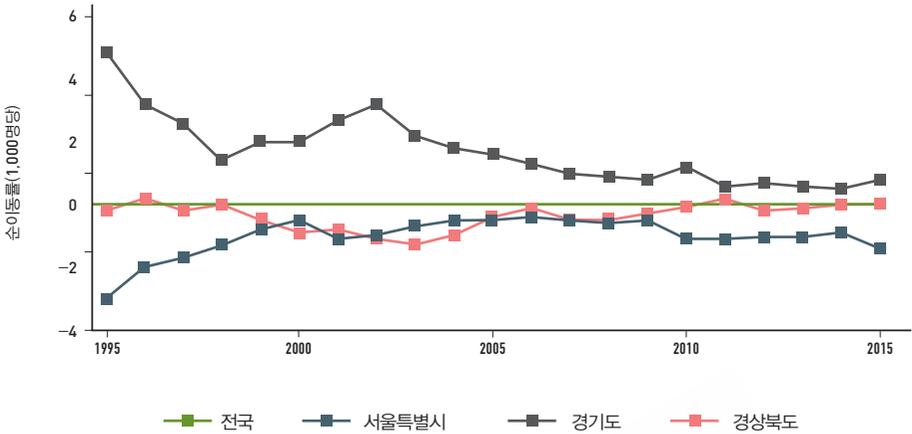
〈그림 12-4〉는 2000년 이후 조출생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자연증가율의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출생률의 변화 추이는 매우 비슷하며, 그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2000년 이후 빠른 출산율 하락을 반영해서 전국 및 각 지역의 조출생률은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조출생률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도의 조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경북 지역의 조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12-2〉부터 〈그림 12-4〉에 제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림 12-4〉 전국 및 시도의 조출생률 변화 추이(2000~2015)



| 그림 12-5 | 전국 및 시도의 시도 간 순이동률 변화 추이(1995~2015)



200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사망률의 변화보다는 출생률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조사망률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조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주면서 시기별로 다소간의 등락을 경험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인구의 자연증가율 변화로 이어졌다. 둘째, 서울의 자연증가율은 전국보다 다소 높고 농촌 중심 지역인 경북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경기도에 비해서는 낮다. 서울과 경기도의 자연증가율 차이는 1,000명당 1명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증가율의 변화는 <그림 12-1>에 나타난 전체 인구수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인구이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데, <그림 12-5>는 순이동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5>는 시도 간 순이동률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경기도는 유입자가 유출자보다 많고, 서울은 유입자보다 유출자가 많으며, 경북은 2000년대 초중반 유출자가 더 많았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입자와 유출자의 수가 거의 같다. 이는 <그림 12-1>에 제시된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역전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인구이동임을 확인해 준다. 서울은 자연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의 전반적인 인구감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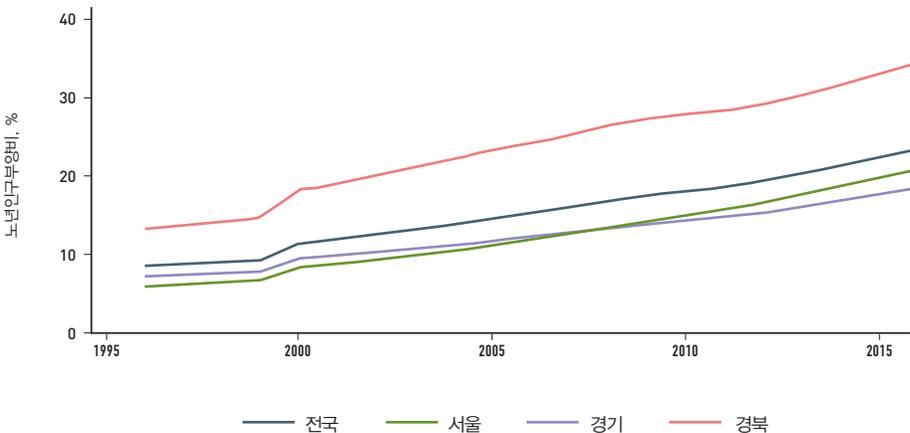
그런데 출생, 사망, 순이동 수의 변화는 출산율, 사망률, 순이동률 그 자체의 변화뿐

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앞서 논의했듯이 인구 변화는 인구구조와 인구동태을 변화에 의해서 설명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서울 인구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동태을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2-6>과 <그림 12-7>은 이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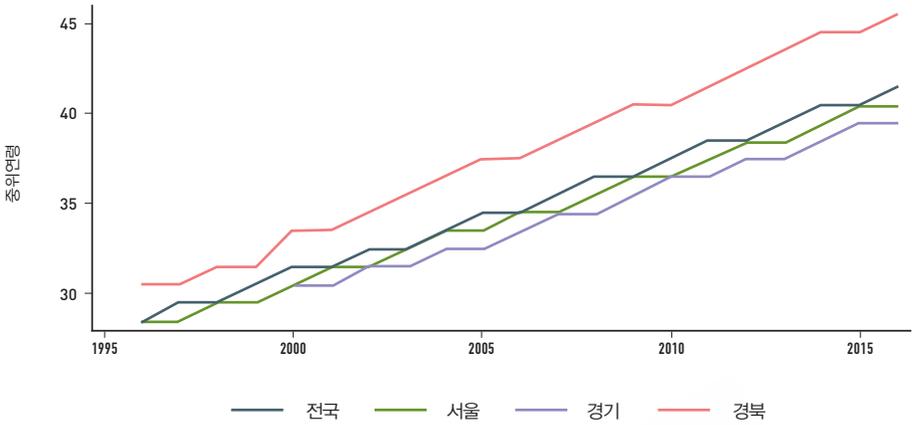
<그림 12-6>은 노년인구 부양비 추이를 보여 준다. 노년인구 부양비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인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표는 상승한다. 이는 <그림 12-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수준에서 노년인구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23.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96년의 8.4퍼센트와 비교할 때, 15.1퍼센트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의 경우에는 노년인구 부양비가 같은 기간 동안 6.1퍼센트에서 20.9퍼센트로 14.8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서울 및 경기도보다 매우 높은 노년인구 부양비를 보여 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노년인구 부양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두 지역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2000년 중반까지는 서울의 노년인구 부양비가 경기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가 이후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앞서 논의한 자연증가율 및 인구가동률 변화에 중요한 영향

그림 12-6 | 전국 및 시도의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1996~2015)



〈그림 12-7〉 전국 및 시도 중위연령 변화 추이(1996~2015)



을 미친다. 즉 서울은 경기도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구의 자연증가율, 특히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가동 간의 관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은 유입자보다 유출자가 많은 상황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이동 패턴은 서울 인구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인구가동은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서울의 유출자가 유입자보다 많은 중요한 이유는 30~40대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경기도로 이주하는 현상에 기인하는데(김창환, 2015), 이는 서울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림 12-6〉에 제시된 서울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인구가동 패턴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12-7〉에 제시된 중위연령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7〉은 각 시도의 중위연령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데 〈그림 12-6〉에서 확인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중위연령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중위연령은 1996년 28.5세에서 2016년 41.5세로 20년 동안 13년 상승했는데, 이는 연평균 0.65년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의 중위연령은 28.5세에서 40.5세까지이며 경기도의 중위연령은 28.5세에서 39.5세까지로 전국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중위연령 변화 추이 또한 서울의 인구 고령화가 경기도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추이 변화는 인구의 순이동률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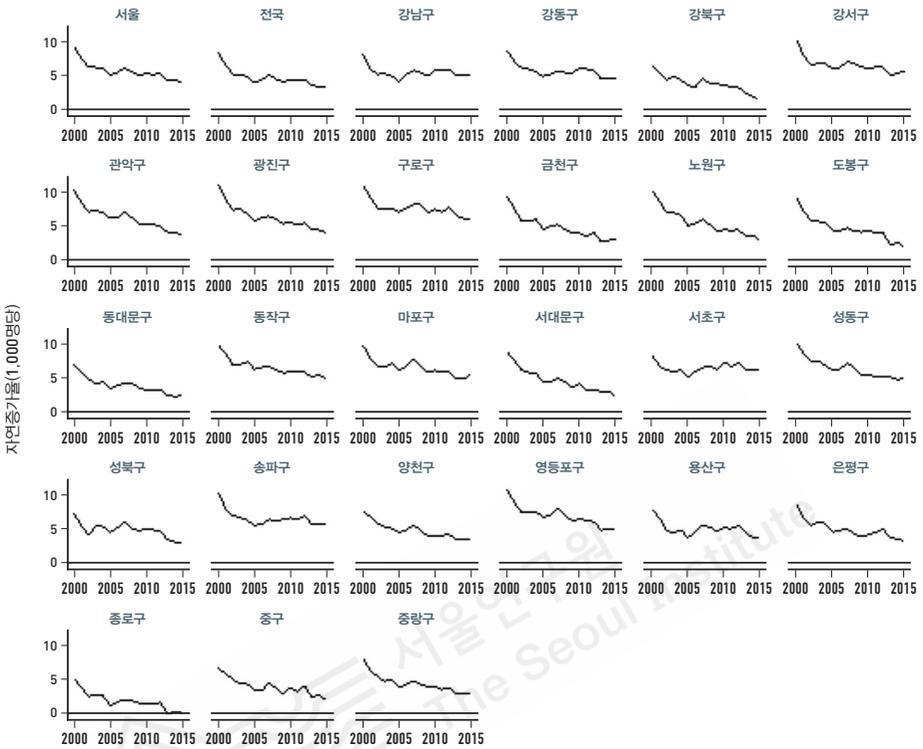
## 04 서울의 인구 고령화 : 서울시 자치구 비교

---

서울의 인구 변화를 전국, 경기도, 경북의 인구 변화와 비교해서 분석했다. 그런데 서울 인구는 자치구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자치구 간에 인구 변화의 양상이 서로 이질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 자치구의 인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이질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8〉은 2000년 이후 서울 각 자치구의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를 전국 및 서울 전체의 추이와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자치구별로 자연증가율의 수준 및 변화 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도심 지역인 종로구 및 중구 지역의 자연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2000년 들어 자연증가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대 중반에는 자연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구의 경우에는 종로구보다는 다소 높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흔히 '강남3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에는 자연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전체의 자연증가율은 이 기간 동안 정체 혹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이들 강남 지역의 자연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증가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의 자연증가율은 2000년 초반에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0년대 중반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의 자치구 간에 연령구조, 출생률, 사망률에 이질

〈그림 12-8〉 서울 자치구의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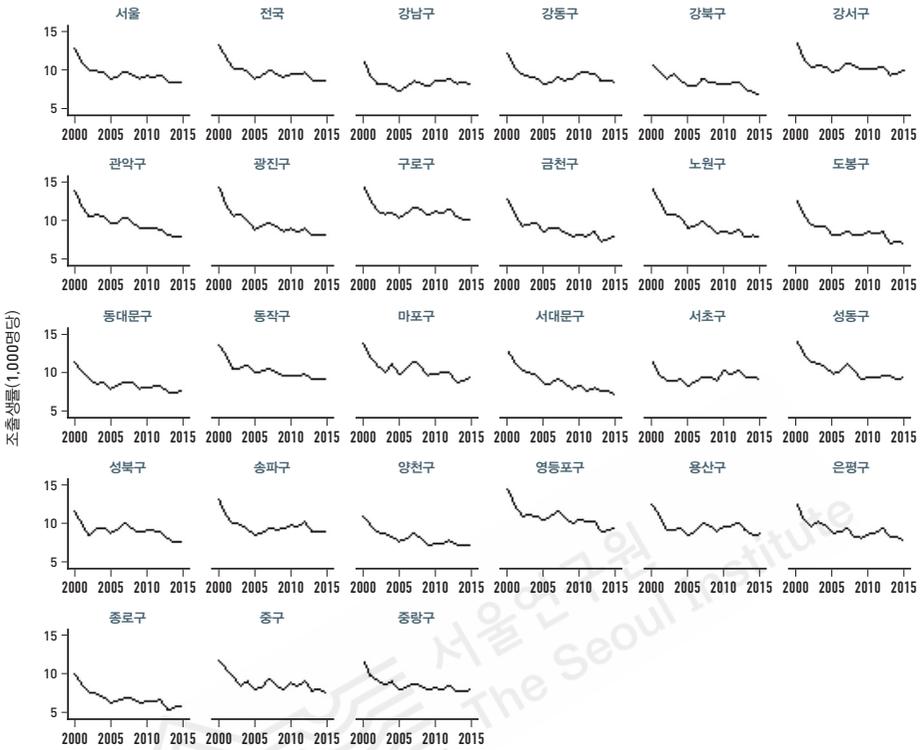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9〉는 서울 자치구들의 조출생률 변화 추이를 전국 및 서울 전체의 변화 추이와 함께 보여 준다. 조출생률의 변화 추이와 자연증가율의 변화 추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자연증가율이 매우 낮은 종로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출생률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조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연증가율이 급감했던 금천구, 서대문구 등의 경우에는 조출생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이는 자치구 간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의 차이가 상당 부분 출생률 변화 추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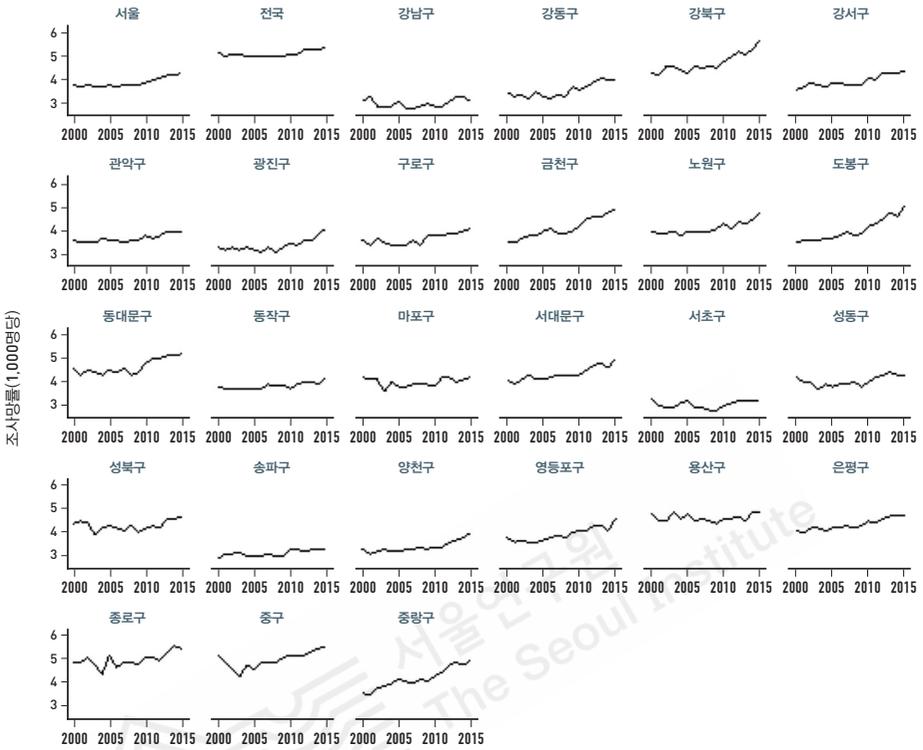
〈그림 12-10〉은 서울의 자치구들의 조사망률의 변화 추이를 전국 및 서울 전체의 변화 추이와 함께 보여 준다. 조출생률의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간 차이가 명확하

| 그림 12-9 | 서울 자치구의 조출생률 변화 추이(2000~2015)



게 드러난다. 앞서 논의했듯이 서울의 조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자치구 간의 차이는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조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자연증가율 및 조출생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조사망률이 서울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출생률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던 금천구, 도봉구 등의 지역에서는 조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변화 추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출생률이 상승하는 지역의 조사망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강남 3구),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망률은 높고(종로구와 중구), 조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의 조사망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금천구, 도봉구). 앞서 논의했듯이, 조출생률

〈그림 12-10〉 서울 자치구의 조사망률 변화 추이(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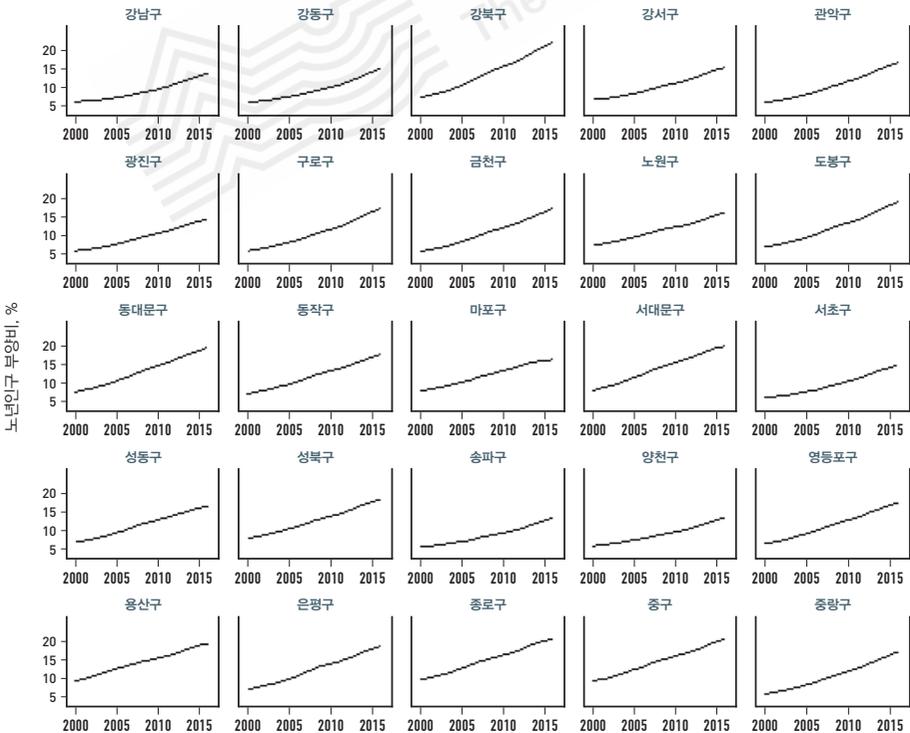
과 조사망률은 출산율과 사망률 자체뿐 아니라 연령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추이는 서울 자치구 내의 연령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한다.

〈그림 12-11〉은 서울 자치구들의 노년인구 부양비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 12-6〉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치구들의 노년인구 부양비 평균은 2000년 7.2퍼센트에서 2016년 17.3퍼센트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0.7퍼센트에 달함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증가세가 최근 들어 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 0.4~0.5퍼센트포인트 정도 증가하던 노년인구 부양비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1.0퍼센트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추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들이 65세 이상 인구가로 편입되면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인구 부양비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주목할 사실은 자치구 간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의 차이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자연증가율, 조사망률, 조출생률은 출산율과 사망률뿐 아니라 연령 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12-11〉은 서울 자치구 간의 연령분포의 이질성이 자연증가율, 조사망률, 조출생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잘 보여 준다. 낮은 조사망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출생률을 보여 주었던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노년인구 부양비가 다른 자치구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증가율이 낮은 종로구 및 중구의 경우에는 노년인구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망률의 증가 속도 및 조출생률의 감소 속도가 빠른 금천구, 서대문구 등은 노년인구 부양비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 간 노년인구 부양비의 차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의 노년인구 부양비의 표준편차는 2000년에는 1.3퍼센트였는데, 2016년에는 2.3퍼센트로 증가했다. 노년인구 부양비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그림 12-11〉 서울 자치구의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2000~2015)



4.2퍼센트포인트에서 8.1퍼센트포인트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들의 연령구성 이질성이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 주며, 이러한 연령구성 변화가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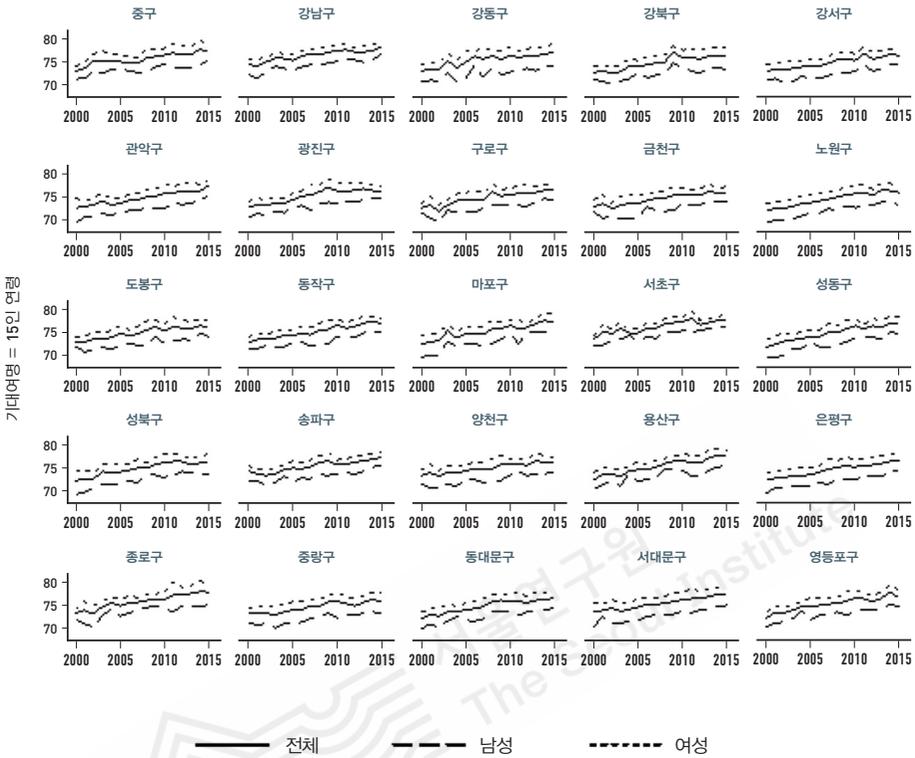
## 05 대안적 지표를 활용한 서울의 인구 고령화 분석

지금까지는 서울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출산, 사망, 인구이동률과 인구의 연령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통적인 인구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했다. 그렇지만 2절에서 논의했듯이 인구 고령화는 진공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연령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출산율 및 사망률의 하락에 따라 인구구성의 건전성이 점차 악화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연령은 인구구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인구구성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연령구성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성 변화와 함께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한 특성 중심 접근 방식(characteristics approach)에 기반한 대안적인 지표를 통해 서울 자치구의 인구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인구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 ● 기대여명 15년 이하의 비중

기대여명 15년 이하의 비중(proportion of remaining life expectancy below 15)은 기대여명이 15세 미만인 집단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생명표의 기대여명(ex)은 앞으로 생존할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래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여명 15년 이하의 비중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이 측정치는 연대기적 연령의 시기별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2-12>와 <그림 12-13>은 기대여명이 15년에 해당되는 연령 및 이 연령대 이상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Pr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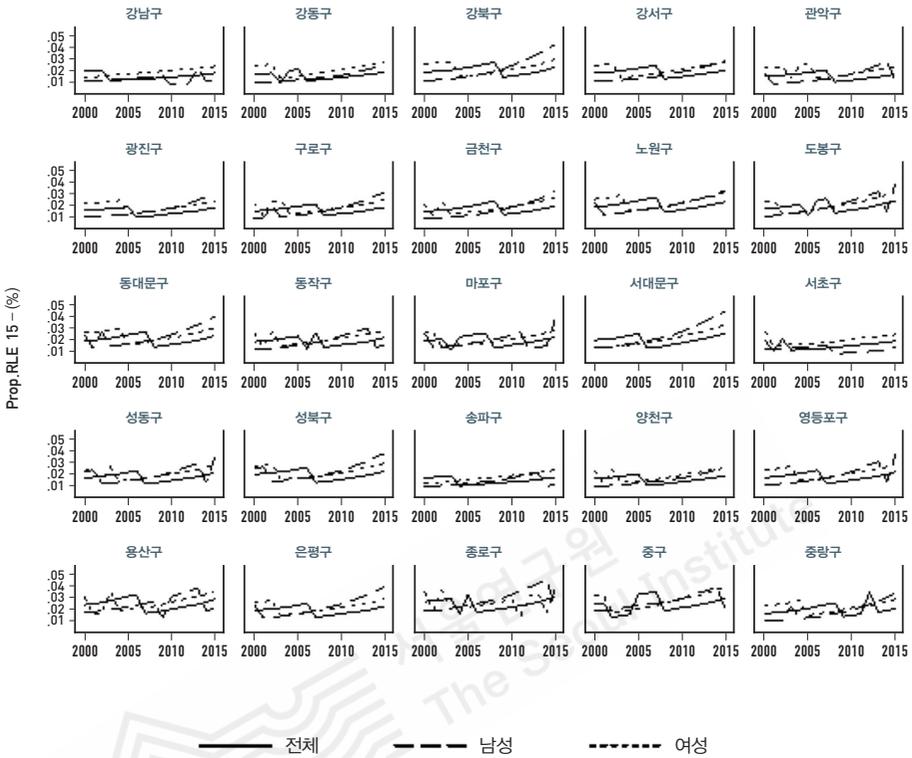
〈그림 12-12〉 기대여명이 15년인 연령의 변화 추이(2000~2015)



RLE 15-)의 시계열 추이를 서울 자치구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12〉는 기대여명이 15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보여 주고 있다. 기대수명 향상을 반영해서 이 연령은 관측 기간(2000~2015)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그림 12-13〉에 제시한 기대여명 15년 미만의 비중 역시 이 기간 동안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기대여명 15년 미만의 비중은 그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관측 기간 동안 1~4퍼센트 구간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는 〈그림 12-11〉에 제시한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노년인구 부양비의 변화 추이와 크게 대비된다. 즉 노년인구 부양비는 2000년 이후 15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0퍼센트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인구의 비중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추정치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정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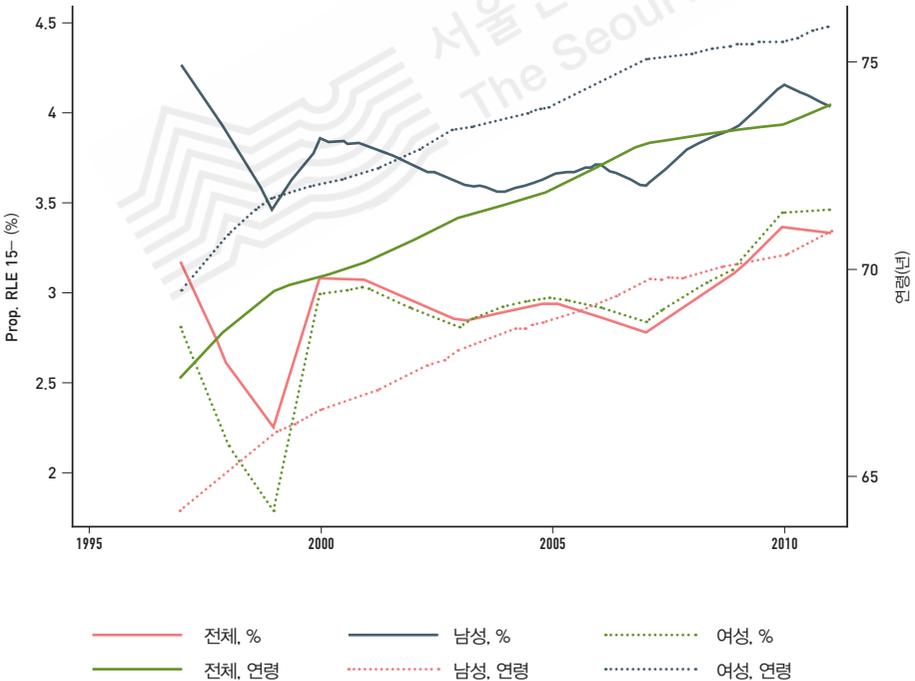
〈그림 12-13〉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인구의 비중 변화 추이(2000~2015)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정책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정의가 각종 복지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12-12〉에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한다면 노인인구는 대략 75세 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건강 향상에 따라 이 연령은 수명연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노인에 대한 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중은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방식보다 매우 낮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그림 12-13〉에 제시된 결과는 기대여명이 15세 미만인 인구의 비중은 1~4퍼센트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건강 수준의 향상을 고려한 인구 고령화 지표를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지표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매우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을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을 정의하는 하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70세 전후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한다면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준 혹은 기대수명 향상에 따라 연대기적 연령의 시기별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여명에 기반한 사망력 지표 및 인구 고령화 지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림 12-14>는 전국 수준에서 측정된 기대여명 15년 미만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연령은 전국이 서울 자치구들보다 다소 낮고 그 비중은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2-14 | 기대여명이 15년 미만 비중(1997~2011),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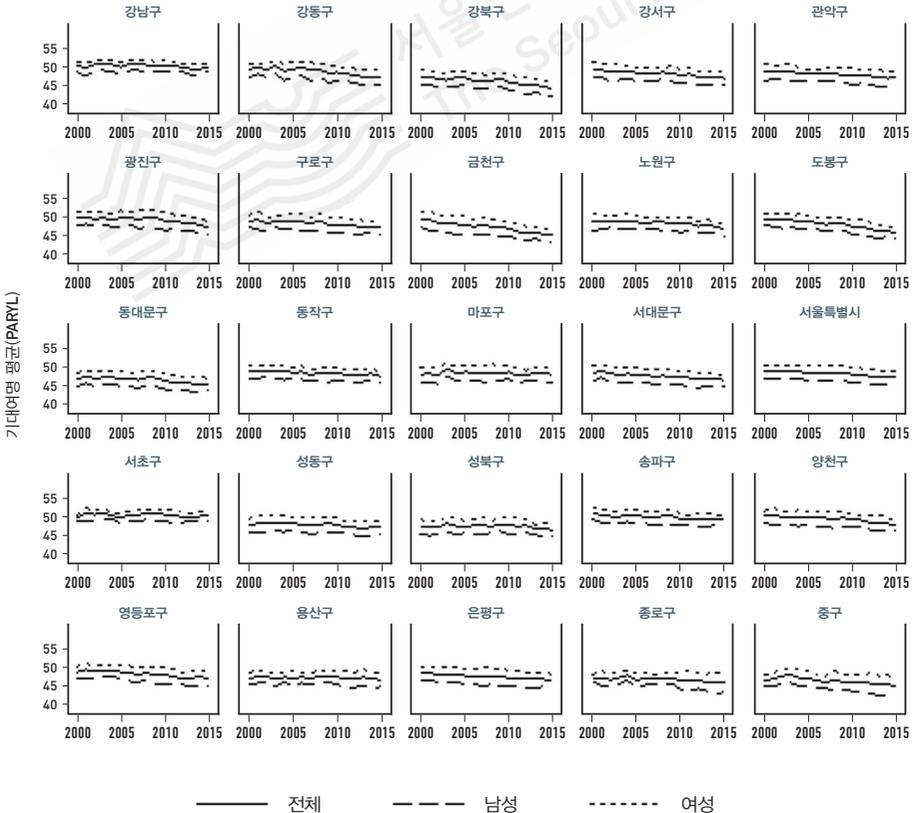


자료 : 박중서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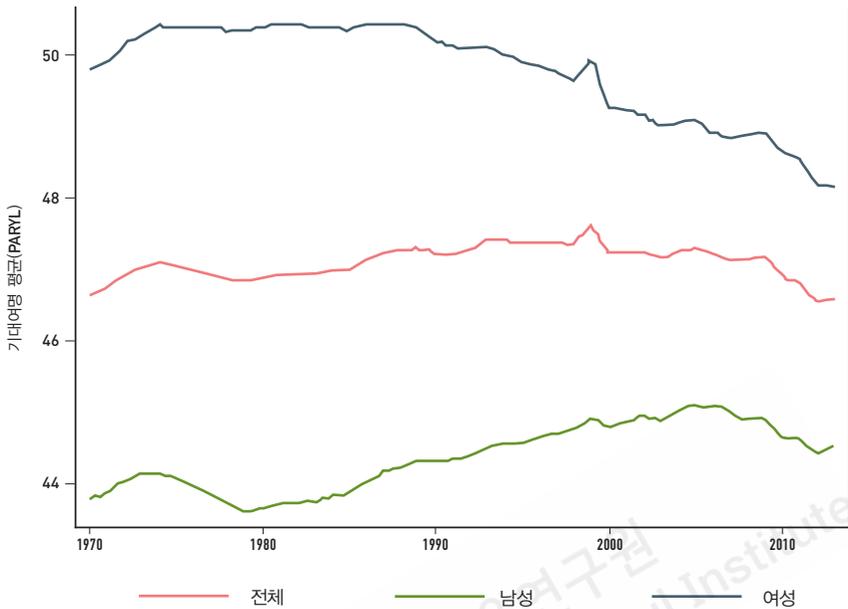
● 기대여명 평균

평균기대여명(PARYL)은 기대여명의 가중평균인데, 연령구성비를 가중치로 활용한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ARYL = \sum ex * px$  (ex: x세 기대여명, px: x세 인구비율). 이는 해당 시점의 기대여명 혹은 장래 연령의 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15>는 서울 자치구의 평균기대여명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그림 12-1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균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12-16>에 제시된 전국의 전체적인 추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 사회의 기대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매우 다르다. 즉 사망력의 하락에 따라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서 특정 시점의 생존자들

| 그림 12-15 | 서울 자치구별 기대여명 평균(2000~2015)



| 그림 12-16 | 전국 기대여명 평균 추이(1970~2014)



자료 : 박중서 외, 2015

의 기대여명의 평균값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균기대여명(PARYL)은 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현상을 사망률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연령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06 정책적 함의

이번 장에서는 전통적인 지표와 대안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의 인구 변화와 인구 고령화 추이를 분석했다. 전통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 서울의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

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자치구 간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안적인 인구 지표(RLE 15-, PARYL)의 경우 서울의 자치구들이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여 주며, 그 추세가 매우 안정적이다. 장래 연령에 근거한 지표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연대기적 연령에 초점을 맞춘 지표만을 활용하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함의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건강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망력의 하락에 따라 연령의 사회적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구구조는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구조는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모든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은 다소 '인구결정론적'인 성격을 띠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라는 맥락에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지나친 인구결정론적 담론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인구이동 이슈

### 01 서울 대도시권 권역별 발전 전략 필요

- 인구이동 패턴을 고려한 서울 대도시권 권역별 발전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

최근 몇 년간 서울 대도시권에서 서울과 인천·경기 간 인구이동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활발하였다. 서울 전출입인구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주로 인천·경기의 인접지역과 서울 외곽지역 간 권역별 이동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북, 서북, 동남 및 서남권 등 권역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서울과 인천·경기 내 인접지역 간 공공서비스, 주택, 광역 교통 등을 포함하는 권역별 발전 및 특화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접지역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활 서비스와 기반시설 공급,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기반 등 생활권의 발전과 특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02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방안 모색

### ●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필요

서울은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2만 명 인구가 순유출하였다. 서울 전출입인구 중 25~39세 인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25~39세는 취업, 결혼, 출산 등으로 이동 요소가 많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생애주기별 이동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25~39세를 위한 일자리와 주택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50대와 60대 이상 인구가 주거 문제를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하여 서울시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인구이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천구와 구로구는 주로 25~34세, 35~40세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강동구와 강남구는 24세 이하, 50세 이상 등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북구와 강북구는 전출입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시 이러한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 특성과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전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반적인 인구 흡인력은 타 시도에 비해 우세한 편이며, 연령대별 주 이동 계층인 20대의 전입은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해당하는 20대는 주로 전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반면, 가족을 형성하는 30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로 전출하는 경향이 높다. 고령층 또한 자가주택 마련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0~40대 인구의 전출과 최근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전출에 주목하고, 이들 인구의 이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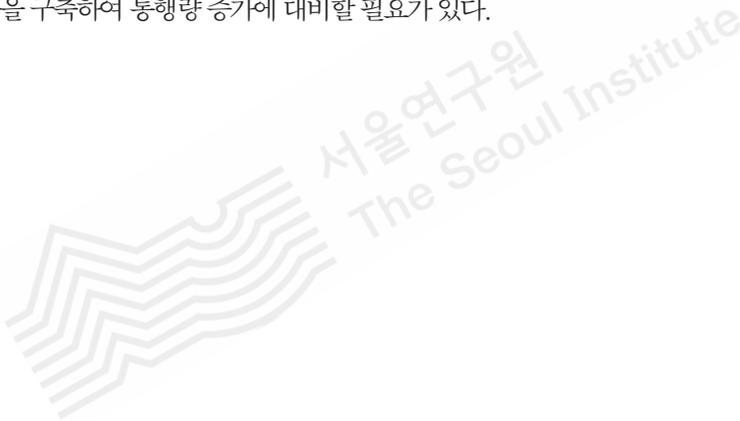
---

## 03 서울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효율적 체계 구축

---

- 서울 대도시권의 장거리 통근과 통행 증가에 대비한 교통 체계 정비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대부분 주택문제를 이유로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로의 통근,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한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역에 건설되는 신도시 신규 주택 물량은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여 공급될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 전출인구는 당분간 계속 발생할 것이며, 서울의 유입 및 통근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계 지역에 대중교통 환승 체계 등을 구축하여 통행량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가구구조 이슈

### 01 다양한 가구구조와 소규모 가구의 증가

- 다양한 가구구조 증대에 따른 사회정책 발굴해야

서울은 지금까지의 4인가구 중심 가구구조에서 벗어나 1~2인가구, 고령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구성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장년층의 이혼 증가와 고령층의 재혼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구 모습도 많이 등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 아닌 동거 형태의 거주 유형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가구구성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소규모 가구의 일반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 필요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가구의 내부적 다양성이 증가하므로 이들 특성에 적합한 주거공간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의 소규모 가구 분포도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응하는 주거공간을 개발해야 한다.

- **고령가구, 이혼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살핌 연계망 구축 필요**

서울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가구주(특히 여성)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경우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

## 02 1인가구 증가와 지역적 대응

---

- **1인가구의 불균등한 지역 분포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

서울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1인가구는 자치구별 비율뿐 아니라 혼인 상태, 경제활동 참여율, 고령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내부적 상이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들은 상이한 행정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불균등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연령별 1인가구의 경제력 고려한 사회지원정책 개발 필요**

젊은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의 경제력을 고려한 사회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서울시 1인가구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많은 편이다. 관악, 강남, 서초구의 1인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한편, 도봉, 노원, 강북, 중랑구 등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평균 소득이 낮은 지역의 1인가구들은 중장년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여성 1인가구 중 저학력, 고령층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여성 1인가구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데, 이후의 연령에서도 일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여성 1인가구주

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층에서 여성 1인가구주의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 03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 다변화

---

-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서울시 노인가구는 증가 추세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17.7퍼센트이다. 2000년 14.2퍼센트, 2005년 16.9퍼센트의 추세로 볼 때 5년마다 약 3퍼센트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노인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정책 필요

서울시 노인가구 중 노인세대로만 구성된 가구는 32.6퍼센트, 노인 1인가구는 27.7퍼센트로 두 유형의 고령가구가 6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노인 1인가구는 73퍼센트 이상이 여성 가구주로 노인 1인가구주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이러한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는 노인 1인가구들은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령인구들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사회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 04 이혼가구의 다양성 증가

---

- 여성 이혼가구주와 학령기아동으로 구성된 이혼가구 지원책 필요

서울시 전체 이혼율은 증가 추세이며, 이혼가구주는 여성 50~54세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 이혼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은 60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여성 이혼가구주 중 학령기아동과 함께 사는 비율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생활이 불안정한 이들 가정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황혼이혼 증가에 따른 고령자 해체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최근 일반적인 이혼율은 정제 상태이지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05 다문화가구 증가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

---

- 서울시 전체 가구의 1.7퍼센트는 다문화가구

서울시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1.7퍼센트인데,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와 금천구는 4퍼센트가 넘는다.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을 포함하는 다문화가구는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6만 4,000여 호로 전체 가구의 1.7퍼센트를 차지하며, 지역별로 보자면 영등포구와 금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2인가구가 34.5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외국인 신분 가구원이 다문화가구 전체 가구원의 21.4퍼센트**

다문화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특성을 보면, 출생부터 내국인인 경우가 54.6퍼센트, 귀화한 내국인인 경우가 24.0퍼센트, 여전히 외국인 신분인 경우가 21.4퍼센트이다. 외국인 신분으로 다문화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과 귀화한 가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역시 서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므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계봉오, 2015, 인구 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사회*, 106호, 41~72쪽.
- 계봉오, 2016, 전남 지역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 전남여성플라자.
- 김창환, 2015, 1990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 이동의 계층적 특징: 수도권 전입, 전출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1), 1~32쪽.
- 박중서 외, 2015. 인구정책 관련 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5-63호.
- Batljan, Ilija and Mat Thorslund, 2009, The Effect of Change in Educational Composition on Population Aging, *European Journal of Aging*, 6(3), pp. 191-200.
- Batljan, Ilija, Marten Lagergren, and Mats Thorslund, 2009, Population Aging in Sweden: The Effect of Change in Educational Composition on the Future Number of Older People Suffering Severe Ill-Health, *European Journal of Aging*, 6(3), 201-211.
- Jong & Inez & Anton Kunst & Evert van Imhoff, and Johan Mackenbach, 2000, Education Aging and Health: To What Extent can the Rise in Educational Level Relieve the Future Health Care Burden Associated with Population Aging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3(9), pp. 955-963.
- Kye, Bongoh, Erika Arenas, Graciela Teruel, and Luis Rubalcava, 2014, Education Elderly Health and Differential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A Demographic Approach, *Demographic Research*, 30, pp. 753-794.
- Kye, Bongoh, 2016, An alternative index of population aging: Accounting for education and elderly health in the case of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5(3), pp. 563-589.
- Lee, Ronald and Andrew Mason, 2010, Fertility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ov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2), pp. 159-182.
- Lutz, Wolfgang, 2009, The Demography of Future Global Population Aging: Indicators Uncertainty and Educational Composition,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35(2), pp. 357-368.
- Lutz, Wolfgang, Anne Goujon, and Gabriele Doblhammer-Reiter, 1998, Demographic Dimensions in Forecasting: Adding Education to Age and Sex,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supplement), pp. 42-58.

- Lutz, Wolfgang, Warren Sanderson, and Sergei Scherbov, 2008, The Coming Acceleration of Global Population Ageing, *Nature*, 451, pp. 716–719.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 표 |

- | 표 1-1 | 인구통계 분석 항목 및 통계자료 | 15쪽
- | 표 2-1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수 추이(1949~2015) | 17쪽
- | 표 2-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증가율(1949~2015) | 18쪽
- | 표 2-3 | 서울 자치구별 인구 규모 추이(1966~2015) | 20, 21쪽
- | 표 3-1 |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5) | 31쪽
- | 표 3-2 | 서울 자치구별 성비 변화(1980~2015) | 32쪽
- | 표 3-3 |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 순위별 성비 변화(1990~2015) | 34쪽
- | 표 3-4 | 서울과 수도권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 37쪽
- | 표 3-5 |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 수준별 인구와 비중(2005, 2010, 2015) | 39쪽
- | 표 3-6 |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변화(1980~2015) | 42쪽
- | 표 3-7 |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추계(2015~2045) | 43쪽
- | 표 3-8 |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변화(1970~2045) | 44쪽
- | 표 3-9 | 서울시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중 변화(1980~2015) | 46쪽
- | 표 3-10 | 서울시 남성의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율 변화(1980~2015) | 46쪽
- | 표 3-11 | 서울시 여성의 혼인 상태별 인구와 비율 변화(1980~2015) | 47쪽
- | 표 3-12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수(1992~2015) | 50쪽
- | 표 3-13 | 서울, 수도권, 전국의 외국인 성비(1992~2015) | 52쪽
- | 표 4-1 | 서울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2010, 2015) | 59쪽
- | 표 4-2 | 서울 인구가동(2015) | 61쪽
- | 표 4-3 | 가구규모별 전출입 이동 건수(2015) | 66쪽
- | 표 4-4 |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2010, 2015) | 85쪽
- | 표 4-5 |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2015) | 85쪽
- | 표 4-6 | 수도권 통근통학 이동 구간 분포 | 88쪽
- | 표 5-1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 규모 변화(1980~2015) | 95쪽

- | 표 5-2 | 서울의 가구 유형(2015) | 96쪽
- | 표 5-3 | 서울 자치구별 평균 가구원 수(2000~2015) | 98쪽
- | 표 6-1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비중 및 규모 추이(1980~2015) | 101쪽
- | 표 6-2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규모 변화(1990~2015) | 103쪽
- | 표 6-3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비중 변화(1990~2015) | 104쪽
- | 표 6-4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비율(2015) | 106쪽
- | 표 6-5 | 서울과 수도권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2015) | 108쪽
- | 표 6-6 | 서울과 수도권의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2000~2015) | 109쪽
- | 표 6-7 | 서울 자치구별 여성 1인가구 수 및 비중(2015) | 110쪽
- | 표 7-1 | 서울과 수도권의 노인가구 규모 및 비중 변화(2000~2015) | 112쪽
- | 표 7-2 | 서울과 수도권의 세대 구성별 노인가구 규모 및 비중(2015) | 112쪽
- | 표 7-3 | 서울 자치구별 노인가구 규모와 비율(2010~2015) | 113쪽
- | 표 8-1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가구 규모와 비중(2010, 2015) | 117쪽
- | 표 8-2 | 서울 자치구별 이혼가구 규모와 비중(2010, 2015) | 117쪽
- | 표 8-3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가구주 성별 가구 규모와 비율(2015) | 118쪽
- | 표 8-4 | 이혼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2015) | 120쪽
- | 표 9-1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원 수별 다문화가구의 수와 비율(2015) | 122쪽
- | 표 9-2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구성별 다문화가구의 수와 비율(2015) | 123쪽
- | 표 9-3 | 서울과 수도권의 성별 연령별 가구원 수(2015) | 124, 125쪽
- | 표 12-1 | 인구 변화 지표의 정의, 수식, 자료원 | 141쪽

| 그림 |

- | 그림 2-1 | 전국 인구 중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1949~2015) | 17쪽
- | 그림 2-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증가율(1949~2015) | 18쪽
- | 그림 2-3 |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인구 | 19쪽
- | 그림 2-4 | 서울 자치구별 인구 규모 변화 | 22, 23쪽
- | 그림 2-5 |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2015~2045) | 25쪽
- | 그림 3-1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피라미드(1980~1995) | 28쪽
- | 그림 3-2 |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피라미드(2000~2015) | 29쪽
- | 그림 3-3 |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5) | 31쪽
- | 그림 3-4 | 서울 자치구별 성비 변화(1990~2015) | 33쪽
- | 그림 3-5 | 서울과 수도권의 출생 시 성비 변화(1990~2015) | 33쪽
- | 그림 3-6 |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 순위별 출생 시 성비 변화(1990~2015) |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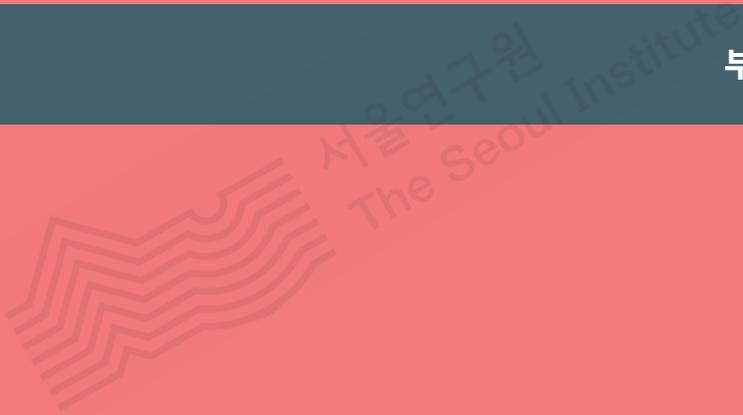
- | 그림 3-7 | 서울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 36쪽
- | 그림 3-8 | 서울과 수도권의 학령인구 변화(2000~2045) | 38쪽
- | 그림 3-9 |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 수준별 인구 비중(2005, 2010, 2015) | 39쪽
- | 그림 3-10 |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연령층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중 | 40쪽
- | 그림 3-11 | 2015년 서울과 수도권의 성별 대졸 이상 인구 비중 | 40쪽
- | 그림 3-12 | 서울과 수도권의 5년 단위 부양인구 비중 변화 | 43쪽
- | 그림 3-13 |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양비 변화(1970~2045) | 44쪽
- | 그림 3-14 |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미혼인구의 비율 | 48쪽
- | 그림 3-15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 인구 변화 | 48쪽
- | 그림 3-16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수 변화(1992~2015) | 49쪽
- | 그림 3-17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증감률(1992~2015) | 49쪽
- | 그림 3-18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인구 성비(1992~2015) | 51쪽
- | 그림 3-19 |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연령구조(2015) | 53쪽
- | 그림 4-1 | 서울 인구 총전입, 총전출 및 순이동(2014~2016) | 60쪽
- | 그림 4-2 | 서울 순이동(전입-전출) 현황(2015) | 60쪽
- | 그림 4-3 | 서울 전입: 시도 간 인구가동(2005~2015) | 62쪽
- | 그림 4-4 | 서울 전입인구: 시도 간 이동(2015) | 63쪽
- | 그림 4-5 | 서울 전입: 시도 간 인구가동(2005~2015) | 64쪽
- | 그림 4-6 | 서울 전출인구: 시도 간 이동(2015) | 65쪽
- | 그림 4-7 | 연령별 전출입인구(2015) | 64쪽
- | 그림 4-8 | 서울 전입인구 네트워크 | 67쪽
- | 그림 4-9 | 경기·인천 → 서울 전입 사유 | 67쪽
- | 그림 4-10 | 서울 전출인구 네트워크 | 69쪽
- | 그림 4-11 | 서울 → 경기·인천 전출 사유 | 69쪽
- | 그림 4-12 | 24세 이하 전출입 네트워크 | 70쪽
- | 그림 4-13 | 24세 이하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 71쪽
- | 그림 4-14 | 24세 이하 전출입 사유 | 71쪽
- | 그림 4-15 | 25~34세 전출입 네트워크 | 72쪽
- | 그림 4-16 | 25~34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 73쪽
- | 그림 4-17 | 25~34세 전출입 사유 | 73쪽
- | 그림 4-18 | 35~49세 전출입 네트워크 | 74쪽
- | 그림 4-19 | 35~49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 75쪽
- | 그림 4-20 | 35~49세 전출입 사유 | 75쪽
- | 그림 4-21 | 50~59세 전출입 네트워크 | 76쪽

- | 그림 4-22 | 50~59세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 77쪽
- | 그림 4-23 | 50~59세 전출입 사유 | 77쪽
- | 그림 4-24 | 60세 이상 전출입 네트워크 | 78쪽
- | 그림 4-25 | 60세 이상 전출입인구 및 이동 사유 | 79쪽
- | 그림 4-26 | 60세 이상 전출입 사유 | 79쪽
- | 그림 4-27 | 자치구별 이동률(서울-경기·인천) | 80쪽
- | 그림 4-28 | 연령별 전출입인구(서울-경기·인천) | 81쪽
- | 그림 4-29 | 연령별 전출입인구(서울-경기·인천) | 82쪽
- | 그림 4-30 | 연령별 전출입인구(서울-경기·인천) | 83쪽
- | 그림 4-31 |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2015) | 86쪽
- | 그림 4-32 |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 및 상위 시군구(2015) | 87쪽
- | 그림 4-33 | 자치구별 주간인구지수(2015) | 88쪽
- | 그림 5-1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 규모의 증가율(1980~2015) | 94쪽
- | 그림 5-2 | 서울과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1980~2015) | 96쪽
- | 그림 5-3 | 자치구별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유형(2015) | 97쪽
- | 그림 5-4 | 200만 원 이하 소득자 비중(좌), 6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중(우) | 99쪽
- | 그림 6-1 | 서울과 전국의 1인가구(1980~2015) | 101쪽
- | 그림 6-2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비율(2015) | 102쪽
- | 그림 6-3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구조(2015) | 106쪽
- | 그림 6-4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분포(2015) | 107쪽
- | 그림 6-5 | 서울 자치구별 1인가구 가구주의 성별 구성(2015) | 107쪽
- | 그림 6-6 | 서울과 수도권의 1인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2015) | 108쪽
- | 그림 7-1 | 서울 자치구별 노인 1인가구주의 성별 구조(2015) | 115쪽
- | 그림 7-2 | 서울 자치구별 독거노인의 경제실태(2015) | 115쪽
- | 그림 8-1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구조(2015) | 119쪽
- | 그림 8-2 | 서울 자치구별 이혼가구의 세대 구성(2015) | 120쪽
- | 그림 9-1 | 서울, 수도권, 전국의 전체 가구 수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2015) | 122쪽
- | 그림 9-2 | 서울의 자치구별 전체 가구 수 대비 다문화가구 비중(2015) | 122쪽
- | 그림 12-1 | 전국 및 시도의 총인구수 변화(1996~2016) | 142쪽
- | 그림 12-2 | 전국 및 시도의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2000~2015) | 142쪽
- | 그림 12-3 | 전국 및 시도의 조사망률 변화 추이(2000~2015) | 143쪽
- | 그림 12-4 | 전국 및 시도의 조출생률 변화 추이(2000~2015) | 144쪽
- | 그림 12-5 | 전국 및 시도의 시도 간 순이동률 변화 추이(1995~2015) | 145쪽
- | 그림 12-6 | 전국 및 시도의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1996~2015) | 146쪽

- | 그림 12-7 | 전국 및 시도 중위연령 변화 추이(1996~2015) | 147쪽
- | 그림 12-8 | 서울 자치구의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2000~2015) | 149쪽
- | 그림 12-9 | 서울 자치구의 조출생률 변화 추이(2000~2015) | 150쪽
- | 그림 12-10 | 서울 자치구의 조사망률 변화 추이(2000~2015) | 151쪽
- | 그림 12-11 | 서울 자치구의 노년인구 부양비 변화 추이(2000~2015) | 152쪽
- | 그림 12-12 | 기대여명이 15년인 연령의 변화 추이(2000~2015) | 154쪽
- | 그림 12-13 |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인 인구의 비중 변화 추이(2000~2015) | 155쪽
- | 그림 12-14 | 기대여명이 15년 미만 비중(1997~2011), 전국 | 156쪽
- | 그림 12-15 | 서울 자치구별 기대여명 평균(2000~2015) | 157쪽
- | 그림 12-16 | 전국 기대여명 평균 추이(1970~2014) | 158쪽



부록



##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헤드라인을 넘어서

임채윤 |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교수

### 01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는 보통 1980년 이후에 태어나 새 밀레니엄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성인기를 맞이한 세대를 지칭한다. 보통 세대 구분이 그런 것처럼 엄격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981년에서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대 구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침묵의 세대(1928~1945년),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그리고 X세대(1965~1980년)의 뒤를 잇는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2016년 현재 그 인구가 대략 7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이미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제치고 미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6).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밀레니얼’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중 저술가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Millennials Rising)』이라는 책에서 강한 성취감, 자신감, 팀 지향성 등 일곱 가지

를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꼽는데, 체계적 증거보다는 일화에 기반한 인상비평에 가깝다(Howe and Strauss, 2009). 또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고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에코 세대’(Echo Boomer)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인지 베이비붐 세대와 흔히 연관되는 특징들을 밀레니얼 세대에 적용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트웬지(Twenge, 2014)는 밀레니얼 세대가 유난히 강한 권리의식과 자아도취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자기중심적 세대’(Generation Me)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주간 잡지 타임(*Time*)도 2013년 표지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나, 나, 나 세대’(The Me, Me, Me, Generation)라고 규정하고, 게으르고 권리의식이 강하지만 여전히 부모들과 같이 사는 세대라고 꼬집는다(Stein, 2013). 그 외에도 직업에 대한 애착이나 몰입이 낮은 세대, 동성애나 마리화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세대, 정치적 올바름에 민감한 세대 등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난무하다.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려는 이런 시도는 대중매체나 마케팅 전문가들이 체계적 증거 없이 하는 인상비평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체계적인 자료 분석에 기반하는 경우도 밀레니얼 세대 일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7000만 명이 넘고 1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태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일반화도 이 세대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대론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경향들 중에서 현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대론이 흔히 빠지기 쉬운 과도한 일반화 혹은 단순화를 피하기 위해 세대 간 평균치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밀레니얼 세대 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한다.

## 02

##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배경

‘세대’는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개념이다(Ryder, 1965; Mannheim, 1970). 세대교체가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세

대 간 사회경제적 행위 양식이나 문화적 가치 및 태도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한 세대의 빈자리를 다음 세대가 채워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행위 양식, 가치, 태도 등의 사회적 변화에 세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세대 간의 이런 차이는 여러 요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성장기 그리고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한 시기에 미국 사회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나 배경을 이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 중요한 배경만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 노동시장, 결혼시장과 같은 주요 사회적 제도는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의 규모와 구성은 한 세대의 경험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가령 한국의 경우, 황금돼지해로 알려진 2007년 출산율이 그 전후에 비해 높아서 이 코호트(cohort)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구 규모가 세대의 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하겠다. 인구 규모 및 구성 측면에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인종 구성이다. 1965년 이민법 제정으로 이민 인구가 급증하는데, 특히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구성을 가진 세대가 되었다. 전례 없이 다양한 인종적 구성 속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복잡한 인종 간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지는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겠다.

밀레니얼 세대는 또 미국의 가족제도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에 성장했다(Cherlin, 2004). 그 결과 이전 세대에 비해 양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정에서 자란 비중이 높고, 동거 가족, 미혼모, 동성 가족 등 '비전통적' 형태의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도 많다. 또 기존의 성 규범, 특히 동성애와 관련된 규범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자라고 성인기를 맞이했는데, 이런 성장기의 경험은 밀레니얼 세대의 가족 및 성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Harding and Jencks, 2003; Hout and Fischer, 2014).

끝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한 시기는 미국 사회가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다(DiMaggio, Evans, and Bryson, 1996; Fiorina and Abrams, 2008).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정치적 엘리트 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신 도금시대(New

Gilded Age)로 불릴 만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 계급 및 계층 간 사회적, 문화적 차이도 심화되었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같은 시대에 나고 자랐지만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하며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별적인 특징만큼이나 밀레니얼 세대 내의 다양성과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이 장에서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인종적으로 전례 없이 다양한 구성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의 인종관계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의 교육적·경제적 성취를 살펴본다. 특히 신 도금시대를 사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성취를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본다. 끝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사회적 제도와의 관계를 종교·정치·가족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이 장은 과도하게 단순한 세대론을 경계하고 밀레니얼 세대 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

### 03

### 세대는 신화인가 사회적 실재인가

---

사회학에서 세대 효과를 논의할 때 연령과 기간(period) 효과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대와 연령과 기간 모두 사회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그 효과들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를 이용해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려는 시도들 중 상당수는 한 시점에서 관찰한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비교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연령의 효과를 세대의 효과와 혼동하기 쉽다. 가령 2017년에 이루어진 사회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20대에서 30대 초반)가 X세대(30대 후반에서 40대)에 비해 더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보였다고 하자. 두 세대 간 정치적 견해 차이는 두 세대의 성장기 정치적 환경과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세대 효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연령과 생애사적 단계에 기인한 차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2017년 X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은 세대 효과보다는 연령 효과에 기인한 현상일 것이다. 다른 예로 미국인들이 1990년대에 비해 2017년에 평균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자. 이 1990년대와 2017년의 차이는 한편으로 동성애에 더 호의적인 젊은 세대가 보수적인 이전 세대를 교체하면서 나타나는 세대 효과의 반영일 수 있지만, 모든 세대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데서 오는 기간 효과의 산물일 수도 있다.

이렇듯 세대 효과를 연령과 기간 혹은 시대의 효과와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이다(Fosse and Winship, forthcoming).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세대를 다양한 연령대에 반복해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해 다른 세대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보이는 태도와 행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가 비슷한 연령대에 동성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각 세대의 태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

이런 엄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세대적 특성의 경우도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15년여에 걸쳐 태어난 75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도 2000만 명가량 큰 이 집단이 어떤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일반화가 아닐 수 없다. 체계적 자료 분석에 기반하는 세대적 특성에 대한 규정도 보통 인위적으로 구분된 다른 세대와의 평균치 차이에 기반한다. 그런데 세대 간 상대적으로 적은 평균치의 차이가 중요한 세대적 구분으로 과대 해석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세대 내의 다양성을 간과하기도 쉽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고 성인기에 진입한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화가 심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같은 세대라고 해도 그 성장 배경과 일상적 경험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변화는 단절적이기보다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대 구분을 통한 비교는 연속적 변화를 단절적 변화로 오해하기 쉽다.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인위적 세대 구분과 세대 간 평균치의 비교에만 주목하는 세대론은 최선의 경우 과도하게 단순하고 불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고, 많은 경우 독자들을 호도하기 쉽다.

물론 이제 성인기에 진입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미국 사회를 주도할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의 미국인들과 비교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국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유념하며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을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고, 그러한 경향이 미국 사회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를 간략히 논의하도록 한다.

#### 04

#### 미국 역사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세대의 빛과 그림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세대로 불리는데, <그림 1>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젊은 성인기(18~33세)에 접어든 2014년 상황으로, 57퍼센트가 (비히스패닉계) 백인으로 분류되고 히스패닉계가 21퍼센트, 흑인이 13퍼센트, 그리고 아시아계도 6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분포는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침묵의 세대는 물론이고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변화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단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각 세대 안에서도 꾸준히 인종적 소수자의 비중, 특히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인구의 비중이 증가했고, 다음 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수인종 비중의 증가 이외에도 소수인종 내 인종 구성이 다양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히스패닉계 인구는 X세대에 와서는 흑인 인구와 비슷해졌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흑인 인구를 크게 앞질러 미국 사회에서 두 번째로 큰 인종 집단으로 부상했다. 물론 히스패닉 인구가 인종적으로나 출신국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종 구성의 세대 간 변화의 중요한 원인은 이민이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도 큰 이민자의 물결이 있었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유럽보다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미국 사회의 인종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는 줄어든 대신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09년 이후에는 이민자 중 중남미와 아시아 이민자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이는 출산율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계 인구의 비중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이 가지는 정치, 문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다양해지는 인종적 구성은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그림 1 | 세대별 인종 구성



주 : 이 그림은 각 세대가 18세에서 33세일 때를 기준으로 인종적 구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Pew Research Center, 2015) 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때 2055년경에는 소수인종들이 미국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Pew Research Center, 2016), 이는 백인이 지배해 온 미국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하겠다. 증가하는 인종적 다양성이 미국 사회의 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적 전망이 모두 가능하다. 낙관주의적 전망은 다양한 인종적 환경에서 자라는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빈번한 인종 간 사회적 관계와 관용적 태도, 그리고 신뢰를 통해 미국의 인종 간 관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 탈 인종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성급한 전망은 이런 낙관주의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그림 1>의 통계는 미국 전체 인구의 인종적 구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미국의 아파르트헤이트’(American Apartheid)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Massey & Denton, 1993) 다른 인종들이 각각 자기들이 다수를 접하는 동네에 모여 사는 인종 간 주거 분리 현상이 심각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인종 구성이 다양해진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일상을 사는 미시적 환경도 반드시 같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종 간 주거 분리가 부분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종 간 분리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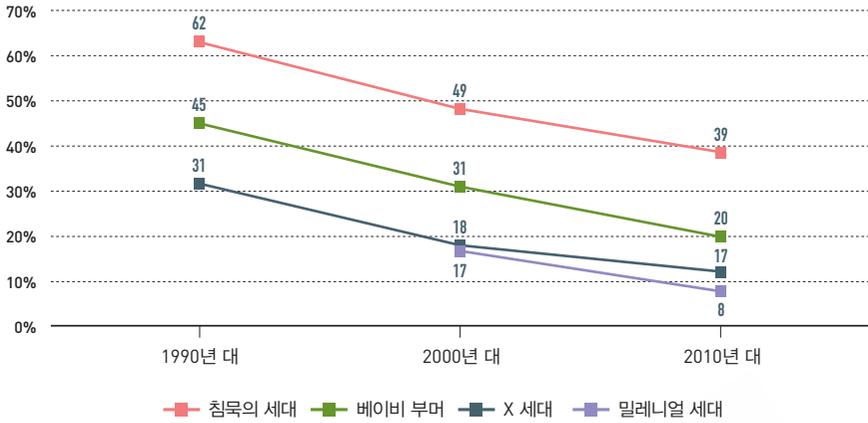
는 강화되기도 한다(Owens, 2017). 가령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흑인의 비중은 13퍼센트이지만, 흑인들은 평균적으로 동네 인구의 절반가량이 흑인인 곳에서 살고 있다. 히스패닉의 경우도 전체 인구에서 비중은 16.3퍼센트지만, 그들이 사는 동네 인구의 평균 48퍼센트가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난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거 분리의 정도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주거지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분리는 학교의 인종 간 분리로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1954년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학교의 인종 간 분리가 불법화되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종 간 주거 분리와 증가하는 계층적 주거 분리 때문에 학교의 인종적 분리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미국 사회학 리뷰(*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실린 한 논문은 특히 백인과 아시아계와 흑인과 히스패닉계 간의 인종적 분리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Fiel, 2013). 이러한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미시적 경험이 전체 인구 구성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대 내에서 인종에 따라 더 분절된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인종 간 관계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좀 더 빈번한 인종적 접촉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래서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접촉 이론(contact theory)에 기반한다. 하지만 인종 관계에서는 접촉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 인종 간 갈등이 많다는 집단 간 갈등 이론(conflict theory)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Blalock 1967; Quillian 1995; Bobo 1999; Bobo and Tuan 2006). 또 정치학자 퍼트남은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단 간의 관계뿐 아니라 집단 내 관계도 악화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Putnam, 2007).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백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이 미국 사회의 다수 인종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들으면 다른 인종에 대해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도 있다(Craig and Richeson, 2014). 티파티(Tea Party) 운동에서 드러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보수 백인들의 반감이 트럼프의 등장과 당선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반이민정서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집단행동과 증오범죄의 증가를 볼 때, 다양성이 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갈등 이론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듯하다. 요컨대 밀레니얼 세대의 다양한 인종적 구성이 꼭 낙관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 운동 이후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태도가 점차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조사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은

그림 2 | 세대별, 기간별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 데 반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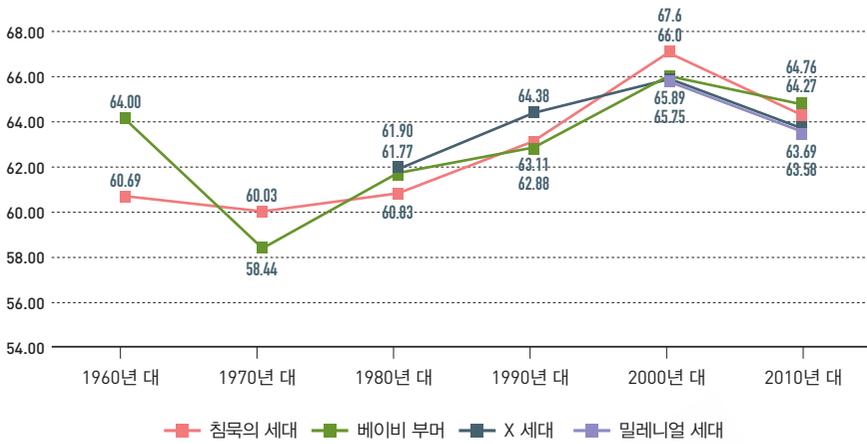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했다. 그림은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강한 반대(strongly oppose)'와 '어느 정도 반대(somewhat oppose)'를 합한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이다. 가령 <그림 2>는 미국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백인 응답자들의 비율을 세대별, 기간별로 나누어 보여 준다. 이 질문은 1990년 이후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추세를 보기는 어렵지만, 1990년 이후에도 흑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세대에서 빠르게 줄어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처음부터 다른 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2000년대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인종차별적 태도는 미국의 모든 세대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세대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증가하는 인종적 다양성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종 간 관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자료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정 온도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측정해 왔다. 감정 온도계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 혹은 인물에 대한 느낌을 0도(가장 차가운 느낌)에서 100도(가장 따뜻한 느낌)의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다. <그림 3>은 백인 응답자들의 흑인에 대한 감정적 온도를 세대별, 기간별로 나누어 본 것인데,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

그림 3 | 세대별, 기간별 백인의 흑인에 대한 감정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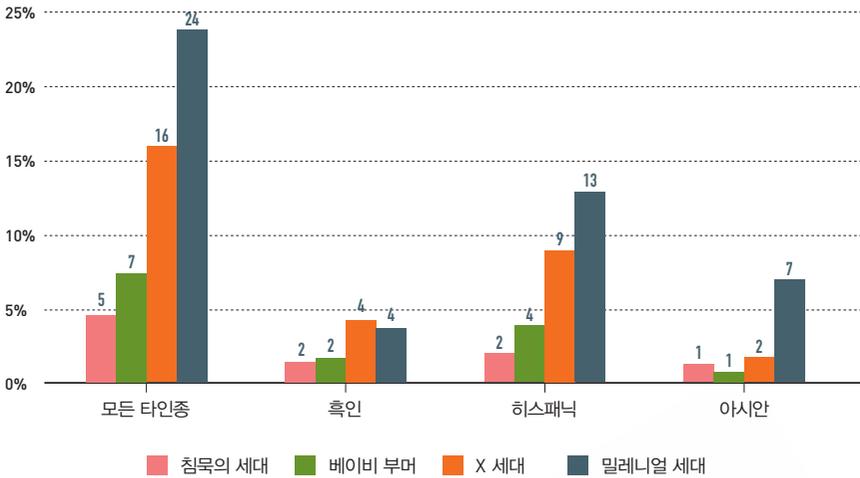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전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1948~2016) 자료를 이용해 백인 응답자들의 흑인에 대한 평균 감정 온도를 세대별, 기간별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모든 세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각 기간 내 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00년대부터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같은 기간 이전 세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조사에서 2000년대에 비해 흑인들에 대한 감정 온도가 약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적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그림에는 보여 주지 않았지만 백인들의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에 대한 감정 온도도 2000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꾸준히 높아져 왔고, 같은 기간 세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인종 집단 간 태도, 특히 백인들의 소수인종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대 효과의 탓도 있지만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간 효과의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인종 간 태도를 어릴 때부터 접하면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가 젊었을 때에 비해 처음부터 인종 간 관계에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속적인 인종 간 주거분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은 미국의 인종 간 관계가 적어도 태도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든 세대에

그림 4 | 세대별 핵심 상담 연결망에 각 인종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



주 : 이 그림은 1984년과 2004년 미국 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해 핵심 상담 연결망에 각 인종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백인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미국인들의 인종 간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인종 간의 자발적인 친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조사에서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인종 간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인종 간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세대별·기간별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미국 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사회조사 중에서 처음으로 사회 연결망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유명한 연결망 조사는 1985년과 2004년 두 차례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기간별 세대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또 2004년 자료는 설문조사 과정상 방법론적 문제 때문에 1985년 자료와 직접 비교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Paik, 2013). 마지막 조사 시점이 2004년이어서 이 장의 주요 관심사인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1985년과 2004년 백인 응답자 중 핵심 상담 연결망에 다른 인종의 가족, 친척, 친구, 혹은 지인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그림 4>에서 비교해 보았다. 핵심 상담 연결망은 설문 응답자에게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중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

는 사람의 이름을 5명까지 답변하도록 해서 측정했는데, 보통 가장 강한 연결망(strong ties)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sden, 1987). <그림 4>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소수인종을 핵심 연결망에 포함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에 비해서도 약 8퍼센트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각 세대 내에서는 1985년과 2004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망의 인종적 다양성에서는 세대 효과가 기간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연결망의 인종적 다양화를 흑인과의 관계보다는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과의 관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상담 연결망에 흑인이 포함된 비중은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여전히 4퍼센트 미만으로, 9~12퍼센트에 달하는 히스패닉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백인과 흑인 간의 사회적 통합이 다른 인종과의 통합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여전히 그 벽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컨대 미국의 인구를 구성하는 인종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민법 개정 이후에는 히스패닉과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러면서 인종 간 관계도 흑백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의 다른 세대들에 비해 인종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종 간 주거 및 교육의 분리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자라고 생활하는 미시적 환경이 이런 전체 인구 통계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조사에서 인종 간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종 간 태도 변화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의 반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변화가 미시적 사회 연결망에서는 좀 더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세대 효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와중에도 백인과 흑인 간의 미시적 사회통합은 백인과 히스패닉 혹은 백인과 아시안과의 관계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백인들의 타인종, 특히 흑인들에 대한 태도가 악화되는 징후가 있음도 주목해야 하겠다. 이렇게 복잡한 양상은 전반적인 시대적, 세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종 관계의 변화가 미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어 온 인종주의적 구조와 문화의 제약 속에서 불균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왔고,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이다. <표 1>은 각 세대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여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25세 이상으로 제한해 분석했다. <표 1>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34퍼센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나 대학 중퇴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30퍼센트나 되어서, 3명 중 2명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미 고등교육의 혜택을 상당히 받은 X세대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로,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라고 하겠다.

하지만 <표 1>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교육 확대의 현실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등교육 확대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빨리 확대되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여성의 비율이 침묵의 세대에는 17퍼센트에 불과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36퍼센트에 달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 남성의 경우 대학 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자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남녀 간 고등교육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에서 주목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다. 침묵의 세대에서 베이비붐 세대로 오면서 이 비율은 반으로 줄어든 반면, 그 이후 세대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약 15퍼센트 정도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고등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전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고등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일 뿐 아니라 세대 내 교육적 성취의 불평등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교육적 성취의 불평등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림 5>는 각 세대별 교육적 성취를 부모, 특히 모친의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우선 남녀를 통틀어 모친이 고등학교 학위 혹은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졌을 경우, 그 자녀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비율은 침묵의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그 이후 세대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모친이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

| 표 1 | 세대별 · 성별 교육적 성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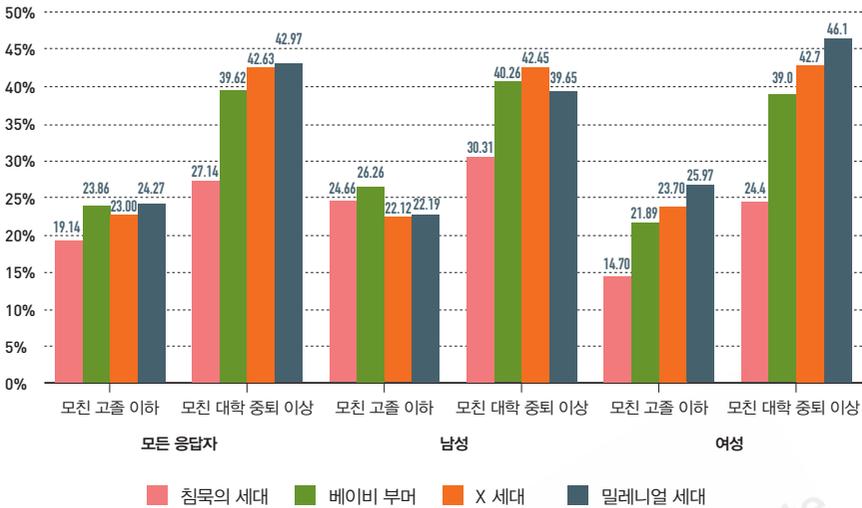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중퇴/준학사	대졸 이상
전체	침묵의 세대	24	35	19	21
	베이비 부머	13	31	27	29
	X 세대	14	25	29	32
	밀레니얼 세대	14	23	30	34
남성	침묵의 세대	25	29	20	26
	베이비 부머	13	29	27	31
	X 세대	15	26	27	32
	밀레니얼 세대	15	24	30	31
여성	침묵의 세대	24	40	19	17
	베이비 부머	13	32	28	27
	X 세대	13	24	30	32
	밀레니얼 세대	14	21	29	36

주 : 이 표는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그 결과 모친의 학력에 따른 교육적 성취 차이가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 더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남녀 간의 중요한 차이를 숨기고 있다. 남자의 경우, 특히 모친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대학을 졸업하는 비중이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대학 교육을 마치는 비율이 세대 간에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교육을 받은 모친의 자녀들 중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빠르게 늘어 결과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 모친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차가 남녀 모두에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고등교육의 확대로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고등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적 성취가 아니라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교육적 성취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고등교육이 노

그림 5 | 모친의 교육 수준에 따른 세대별 교육적 성취



동시장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더 커지는 추세이고 고등학교 학력 혹은 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교육적 성취의 양극화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런 추세를 염두에 두고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성취를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득불평등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각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도 세대 간에 더 커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베이비 붐 세대나 X세대 구성원들 내의 불평등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득은 인생의 각 시점에서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관측된 평생 소득 자료를 요구하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밀레니얼 세대도 아직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세대가 30세에서 35세인 시점에 세대 내 총가구소득 불평등을 비교한다. 20대에는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학업 중인 사람의 비중이 최근 세대에서 더 높기 때문에, 20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는 미국 노동통계청의 현재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세 가지 가구소득 불평등지

표 2 | 세대 내 소득불평등지수 비교

세대	출생연도	조사연도	지니계수	50%/하위10%	상위10%/하위10%
베이비 부머	1950~55	1985	0.33	2.94	1.95
	1955~60	1990	0.34	3.00	2.05
	1960~65	1995	0.36	3.12	2.15
X 세대	1965~70	2000	0.38	2.96	2.20
	1970~75	2005	0.39	3.16	2.27
	1975~80	2010	0.40	3.32	2.32
밀레니얼 세대	1981~86	2016	0.42	3.47	2.36

주 : 이 표는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3월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수, 즉 하위 10퍼센트 소득과 중위소득 비율, 중위소득과 상위 10퍼센트 소득 비율, 그리고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 등을 보여 준다. 첫 번째 지표는 저소득층과 중위 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두 번째는 중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를 측정한다. 세 번째는 각 세대 내 전반적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보여 준다.

〈표 2〉의 세 지표 모두 세대 내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195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초기 베이비붐 세대들이 30세에서 35세였던 1985년, 세대 내 지니계수는 0.33이었던 데 반해, 초기 X세대(1965~1970년생)가 비슷한 연령대였던 2000년에는 0.38로 증가했고, 2016년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0.42까지 높아졌다. 대략 30년 만에 지니계수가 약 0.1 증가한 것인데, 세대 내 소득불평등이 나이가 들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라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다른 두 불평등지수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베이비붐 세대의 중위소득은 하위 10퍼센트 소득의 세 배 정도였는데,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3.5배로 커졌고, 중위소득층과 상위 10퍼센트 소득의 비율도 1.95에서 2.36까지 증가해, 소득분배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적 성취와 관련하여 소득불평등보다 더 많은 정치적,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세대 간 계층이동의 문제이다.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학자 맨자와 브룩스는 급증하는 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인들이 불평등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주장한다(Manza and Brooks, 2014). 미국인들이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이유로 흔히 '미국의 꿈', 즉 미국이 높은 사회경제적 이동을 허락하는 '기회의 땅'이라는 믿음이 거론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현재의 불평등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 간 계층이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Krueger, 2012). 특히 소득불평등의 증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교육적,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세대 간의 계층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다(Putnam, 2016).

세대 간 계층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부모가 그 세대 내 소득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와 자녀의 세대 내 상대적 지위를 비교하는 상대적 계층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 계층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성장해 자기 세대 내에서 부모에 비해 더 높은 상대적 지위를 획득하거나(상향 이동) 그 반대의 경우(하향 이동)를 일컫는다. 미국인들이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상대적 계층이동의 기회가 다른 나라, 특히 유럽에 비해 더 빈번하고 또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계층이동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세금 자료와 다른 행정 및 조사 자료들을 활용해 상대적 계층이동을 연구한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Lee and Solon, 2009; Chetty et al., 2014), 다음 두 가지 발견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선 사회과학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세대별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 계층이동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체티 연구팀은 1971년생부터 1983년생이 26세인 시점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계층이동률 추이를 분석했는데, 세대 간 큰 변화가 없었다(Chetty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Lee and Solon, 200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체티 연구팀은 미국의 상대적 계층이동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결론을 내린다. 둘째로 경제학자 코락의 연구(Corak, 2013)는 미국의 상대적 계층이동률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상대적 이동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세기 후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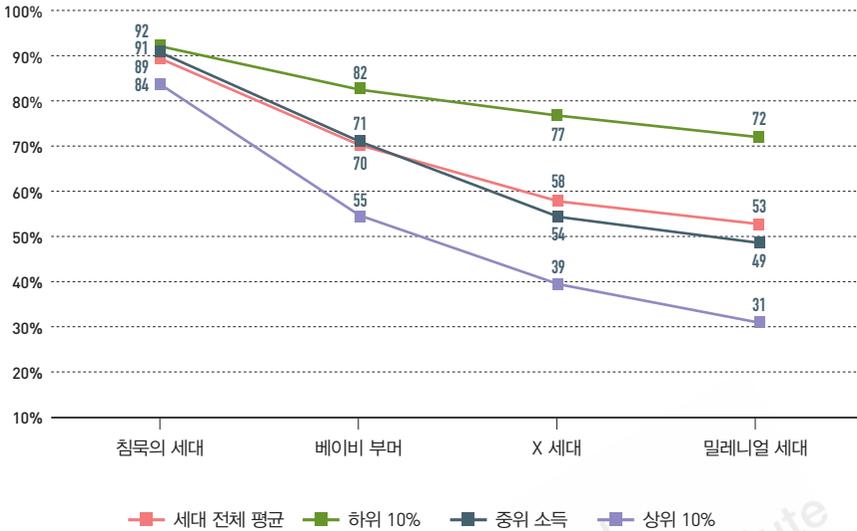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겠다.

이런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상대적 계층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서 상대적 계층이동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utnam, 2016).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아직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잠재적 소득이 20대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티 연구팀의 결론은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상대적 계층이동이 세대 간 사회적, 경제적 이동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도 아니고 어찌면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척도는 세대 간 절대적 계층이동인데, 이 척도는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에 비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누리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대 간 절대적 이동은 보통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한 뒤 비교해서 측정한다. 상대적 계층이동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절대적 이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편인데, 최근 경제학자 체티와 사회학자 그러스키의 공동 연구팀에서는 가용한 행정 자료와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1940년에서 1984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들의 절대적 계층이동을 측정해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Chetty et al., 2017). 이 논문은 자녀가 30세일 때 가구소득과 부모가 30세일 때 가구소득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고 비교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 상대적 계층이동과는 대조적으로 절대적 계층이동이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 준다.

〈그림 6〉은 체티 연구팀의 논문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한 절대적 계층이동률의 각 세대별 평균치와 부모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침묵의 세대(이 자료에서는 1940~1945년생)의 경우 90퍼센트 정도가 부모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누리려 거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절대적 계층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시기에 태어난 침묵의 세대는 10명 중 9명이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운택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그 이후 세대에서 절대적 계층 상승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70퍼센트, X세대는 58퍼센트만이 절대적 계층 상승을 경험했고,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는 52퍼센트만이 부모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누린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2명 중 1명만이 부모에 비해 소득의 상향 이동을 했

그림 6 | 세대별, 부모 소득별 절대적 계층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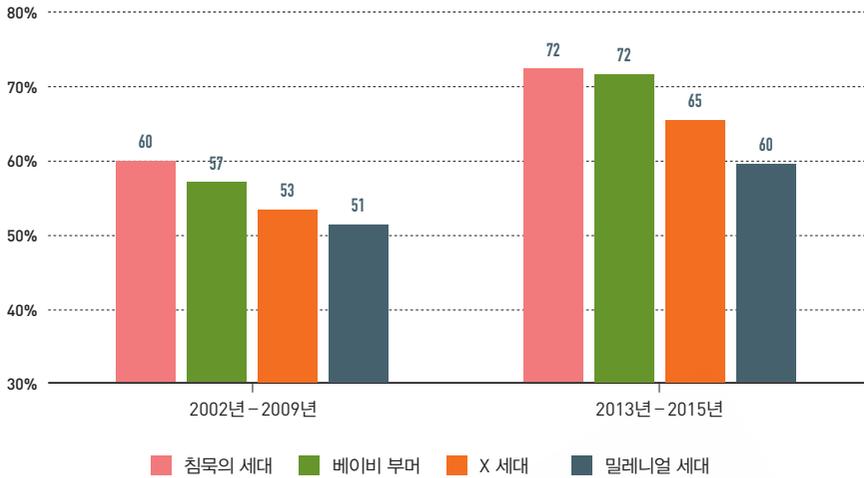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체티와 그레스키 공동 연구팀(Chetty et al., 2017)의 자료를 이용해 세대별 평균을 구해 구성하였다.

고 다른 1명은 하향 이동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름 세대에서는 10명 중 7명이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을 누렸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큰 변화라고 하겠다.

이러한 절대 이동률의 하락은 부모들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그 하락의 폭은 부모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가 확률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침묵의 세대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경우도 80퍼센트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걸 고려하면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절대적 이동률의 격차도 세대별로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나타난 절대적 이동의 하락은 불과 한두 세대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큰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하겠다. 베이비부름 세대의 경우 부모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게 흔한 경험이었던 반면, 베이비부름 세대의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는 그 반대의 경험이 흔한 경험이 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절대적

그림 7 | 세대별 지금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주 : 이 그림은 퓨리서치센터의 2002년,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이동률의 빠른 하락이 사람들의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그림 7>은 퓨리서치센터에서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여러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각 세대에서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경제적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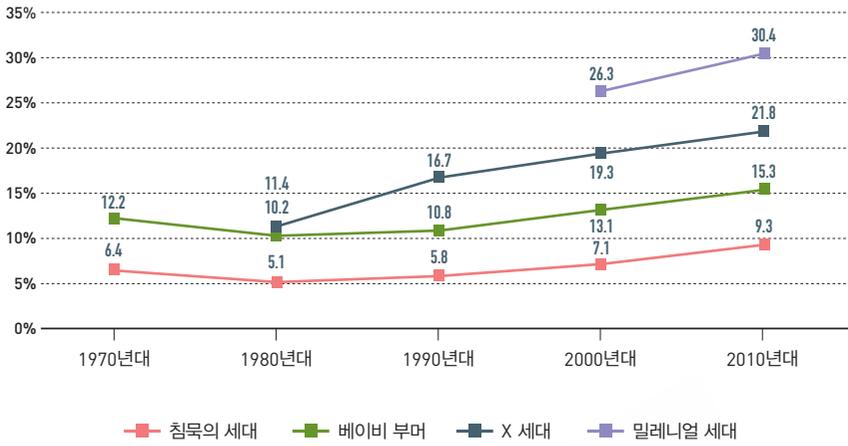
<그림 7>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우선 2000년대나 2010년대 모두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의 반 이상이 지금 아이들이 자랐을 때 부모들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망해, 세대 간 절대적 계층이동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 미국인들의 차세대 경제적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오면서 더 비관적이다. 이는 2007~2008년 대불황, 그리고 그 이후 경제적 불평등 및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특별히 낙관적이기보다는 연령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는 60퍼센트 가까이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서구에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뽑힌다. 유럽과 북미의 대부분 나라는 20세기 후반 종교적 믿음과 참여도가 낮아진 데 비해 미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여러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10명 중 6명이 신의 존재를 의심의 여지없이 믿고 있으며, 10명 중 3명 이상이 매주 한 번 혹은 더 자주 예배나 미사와 같은 종교의례에 참여하고 있다(Chaves, 2017).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데, 가령 영국의 경우 50퍼센트 이상이 소속된 종교가 없고 14퍼센트 정도만이 매주 종교의례에 참여하고 있다(NatCen Social Research, 2012). 서구에서 비교적 종교적인 나라로 알려진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미국인들의 종교적 믿음과 참여 수준은 훨씬 높은 편으로, 오히려 종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중동 국가들에 비교할 만하다(Putnam and Campbell, 2010). 미국인들의 높은 종교성은 사회학의 가장 고전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인 세속화 이론, 즉 근대화가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이론의 중요한 반증으로 받아들여져서 사회학 내에서 세속화 이론의 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Voas and Chaves, 2016).

하지만 최근 미국인들의 종교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종교 혹은 속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0년도에는 8퍼센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의 사회조사에 포착된 가장 큰 사회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또한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변화가 주로 세대교체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Hout and Fischer, 2014; Voas and Chaves, 2016). 실제로 <그림 8>에서 보듯이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년)에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젊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성인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이미 26퍼센트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바로 앞의 X세대가 20대일 때에 비해서도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은 숫자이다. 각 세대 내에서도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세대 간 차이에 따른 변화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세대 간 변화가 무종교 성향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8 | 세대별, 기간별 소속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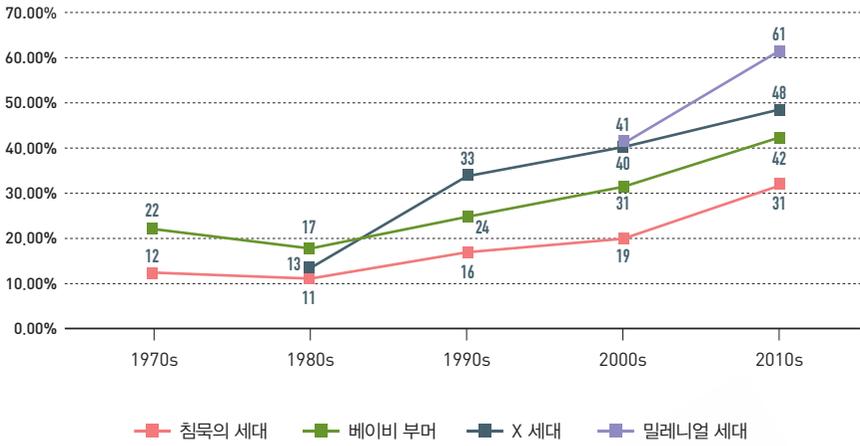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무종교 성향의 증가를 미국 사회의 뒤늦은 세속화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Marwell and Demerath, 2003), 실제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세대 간 차이가 종교 의례의 참여 빈도, 신에 대한 믿음 등 종교성을 측정하는 다른 변수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침묵의 세대가 아직 30대였던 1970년대에는 종교의례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15퍼센트, X 세대에서는 18퍼센트,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30퍼센트까지 늘어난 실정이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비율도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15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는 비슷한 연령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속화를 단순히 종교적 믿음과 참여의 감소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분명 미국 사회의 세속화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대화가 종교적 신념을 약화시키고 약해진 믿음이 종교적 참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세속화 이론으로 미국의 세대 간 종교성의 감소 패턴이나 시점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종교적 신념보다 조직된 종교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가 더 먼저 그리고 더 크게 감소하는 것도 전통적 세속화 이론의 예측과는 잘 맞지 않는다(Hout and Fischer, 2002). 사회학자 하우트와 피셔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의 젊은

그림 9 | 세대별, 기간별 동성애 관계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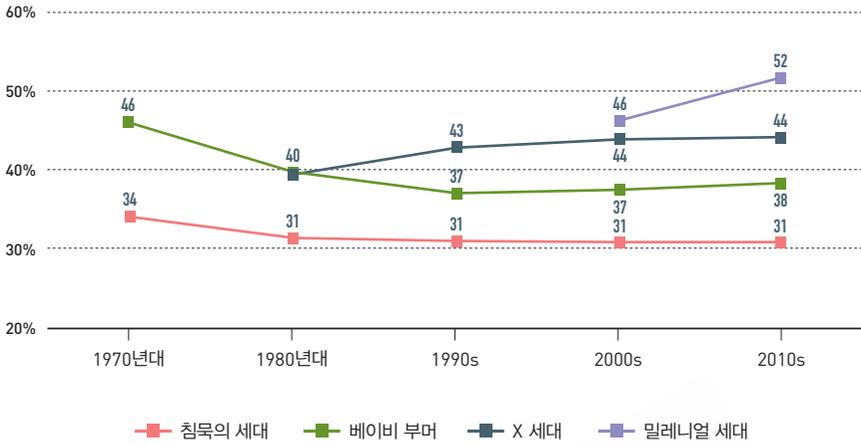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세대에서 늘어나는 무종교 성향을 사회문화적 가치관, 특히 성문제를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에서 찾는다(Hout and Fischer, 2014).

실제 성문제를 둘러싼 가치관을 보면 세대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9>는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각 세대의 견해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동성애 관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침묵의 세대는 1980년대까지 11퍼센트에서 12퍼센트 정도에 머물렀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해 2010년대에는 약 32퍼센트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젊을 때부터 앞 세대에 비해 동성애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1990년대 이후 더 개방적인 태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화는 X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이르면 동성애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60퍼센트를 넘어 처음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화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간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세대 효과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성문제에 대한 다른 지표들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2010년대에 이루어진 조사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65퍼센트 정도가 혼전 성관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

그림 10 | 세대별, 지지 정당별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주 : 이 표는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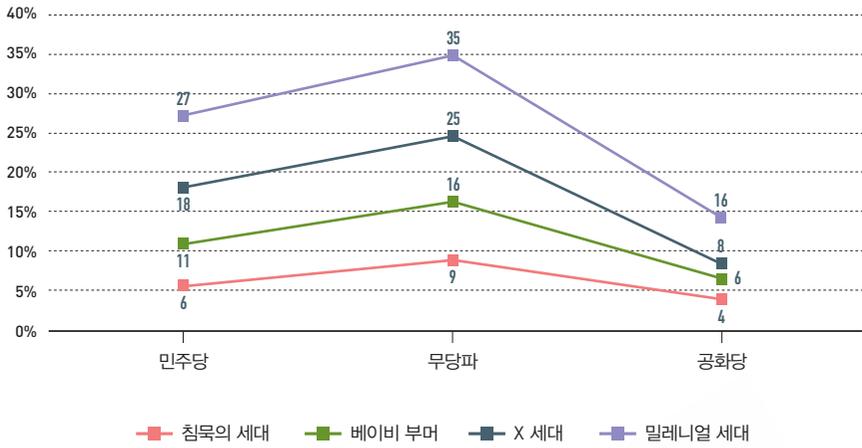
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침묵의 세대의 비슷한 연령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고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도 15퍼센트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들과 종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종교적 참여를 교차분석해 보면 무종교 성향이 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점차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70년대 동성애 관계가 잘못이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종교의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10퍼센트와 14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던 데 비해 2010년대에는 25퍼센트와 35퍼센트로 그 차이가 벌어져, 종교적 성향과 성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미국 젊은 세대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약해지는 종교적 믿음과 참여를 현대화에 따른 세속화로 보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제도화된 종교의 권위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낮은 종교성은 지배적인 사회제도와 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거리감이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세대별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비교하는 <그림 10>도 이런 사회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라

그림 11 | 세대별, 소속 정당별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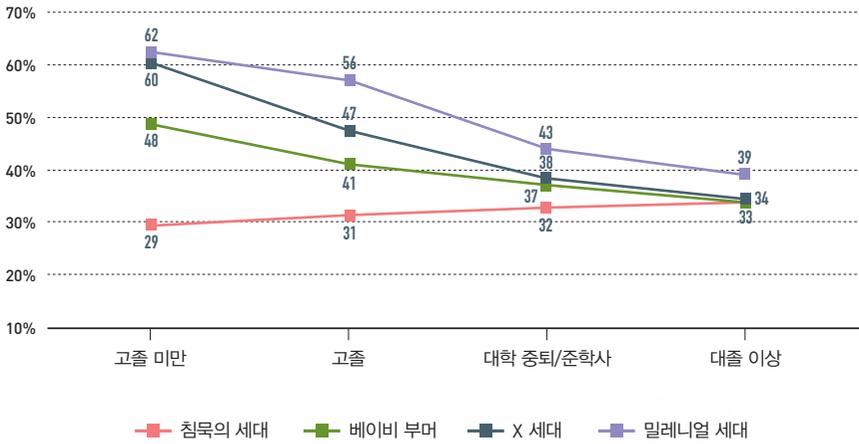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지지 혹은 소속감을 느끼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당파(인디펜던트)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세대별 그리고 기간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Gelman, 2009), 젊은 세대들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에서 2명 중 1명은 스스로를 무당파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연령대 베이비붐 세대나 바로 앞의 X세대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침묵의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중 무당파의 비율이 기간별로 큰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어 당파성이 더 강해진 반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무당파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이런 무당파 성향은 무종교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11>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각 세대와 소속 정당별로 나누어 본 것인데, 침묵의 세대에서는 소속 정당과 무종교 성향 간에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젊은 세대일수록 무정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무종교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무당파 성향의 밀레니얼 세대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퍼센트가 넘는데, 이는

그림 12 | 세대별, 학력별 무당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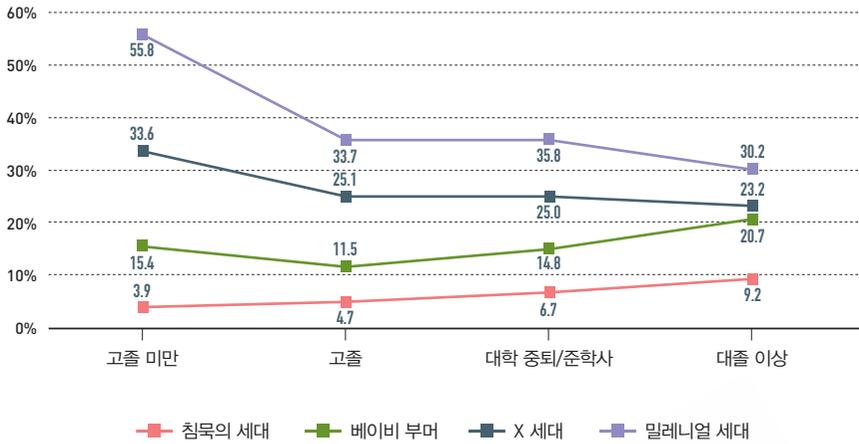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같은 세대의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도 8 퍼센트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즉 조직된 종교와 거리를 두는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의 주요 정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화된 종교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이탈은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2>는 각 세대에서 무당파의 비율을 교육 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다. 대학 졸업자로 한정해서 보면 세대별 무당파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학 졸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 고등학교 학위만 가지거나 특히 그 미만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무당파의 비율이 침묵의 세대에서 30퍼센트 미만이던 것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62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서 보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의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고졸 혹은 그 이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요컨대, 미국의 젊은 세대, 특히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젊은 세대에서 교육, 정당, 종교 등 주요 사회적 제도 모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추세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제도인 결혼과 노동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많은 사회학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미국의 결혼 제도는 20세기 말과 21

그림 13 | 세대별, 학력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



주: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세기 초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특히 노동 계층에서 ‘결혼 제도의 해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Cherlin, 2004; Murray, 2013). <그림 13>은 각 세대가 30대 인 시점(30~39세)에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모든 교육 수준에서 초혼 연령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30대에도 미혼인 사람의 비율이 젊은 세대에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그림 13>은 실제로 그런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미혼의 비율이 대졸 이상에서보다 고졸 그리고 고졸 미만 학력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세대 간 변화가 초혼 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저학력층에서 결혼 제도 자체가 약화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자들의 세대 간 미혼 비율의 증가는 결혼 제도 붕괴라는 말에 걸맞을 만큼 크다. 고등학교 학위가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56퍼센트가 30대에도 결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침묵의 세대의 4퍼센트에 비해 무려 14배 높은 수치다. 이는 특히 미혼의 비중이 고학력자 사이에서 더 높았던 침묵의 세대와 비교할 때 큰 사회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은 각 세대가 30세에서 35세인 시점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을 남녀 그리고 학력별로 구분해 보여

표 3 | 세대별, 성별,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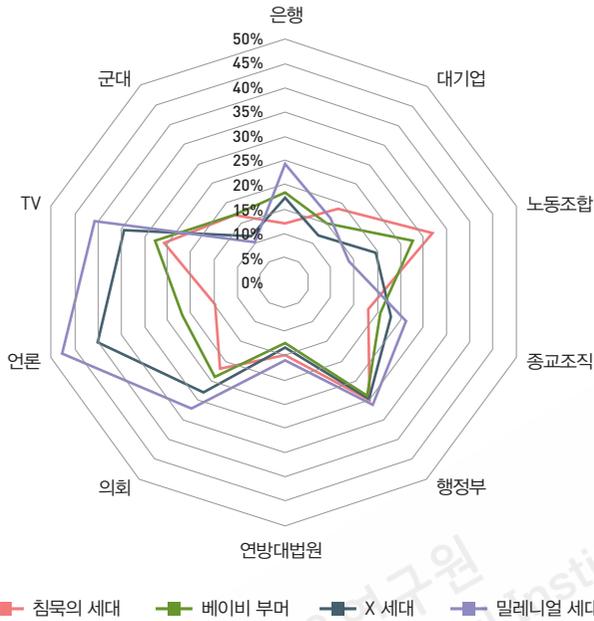
단위 : %

세대	출생연도	조사연도	남성		여성	
			고졸 이하	대학중퇴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중퇴 이상
베이비 부머	1950~55	1985	94	97	66	77
	1955~60	1990	93	97	68	78
	1960~65	1995	90	97	69	80
X 세대	1965~70	2000	91	96	71	80
	1970~75	2005	89	95	64	78
	1975~80	2010	89	95	63	79
밀레니얼 세대	1981~86	2016	86	94	61	80

주 : 이 표는 미국 노동통계청의 현재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주고 있다. 우선 남성만 보면 고졸 혹은 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초기 베이비붐 세대의 94퍼센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85.5퍼센트로 9퍼센트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의 참여율은 97퍼센트에서 93.4퍼센트로 3.5퍼센트포인트만 하락했다. 그림에서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으로 한정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97퍼센트로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즉 세대 간 남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하락은 거의 전적으로 저학력층, 특히 고졸 혹은 그 미만 학력을 가진 남성들에 한정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까지는 학력에 상관없이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는 고졸 혹은 그 미만 학력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만 참여율이 하락했다.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대졸 학력 이상의 여성으로 한정하면 참여율이 오히려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도 보인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 여성 중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참여율은 83퍼센트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무려 20퍼센트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15퍼센트포인트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교육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격

그림 14 | 세대별 제도에 대한 불신



주 : 이 그림은 미국 종합사회조사(1972~2016년) 자료를 이용해 구성하였다. 각 제도에 대해 종합사회조사는 응답자가 신뢰하는 정도를 '아주 많이 신뢰함/ 어느 정도만 신뢰함/ 거의 신뢰하지 않음'의 3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는데, 이 그림은 이 중 '거의 신뢰하지 않음'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차가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4>는 각 세대가 비슷한 연령기(18~35세)일 때 각 제도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이전 세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회, 종교, 금융기관, 언론 등 사회의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노동조합과 군대에 대한 신뢰는 젊은 세대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은 밀레니얼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세대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져서, 최근 조사만 횡단적으로 분석하면 세대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불신은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시점에 성장한 데서 오는 기간 효과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종교, 정당, 결혼제도에 있어서의 이탈과는 달리 제도에 대한 불신은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고학

력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 불신만으로는 앞에서 본 저학력층의 높은 제도적 이탈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과 낮은 참여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가 비슷한 연령대일 때에 비해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종교, 정당, 결혼, 노동시장 등 사회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참여가 낮다. 이러한 사회제도로부터의 이탈은 저학력층, 특히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고졸 미만 학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세대별 고졸 미만 학력자의 비중은 침묵의 세대(24퍼센트)에서 베이비붐 세대(14퍼센트) 사이에서는 줄었지만, 이후 X세대(16퍼센트)와 밀레니얼 세대(18퍼센트)에 와서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어떤 의미에서 고졸 미만 학력 소유자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도 젊은 세대가 사회제도로부터 이탈하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이런 경향은 밀레니얼 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 이면에 교육적 성취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회제도 참여의 양극화가 같이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

## 07

###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

---

이 글에서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를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인종 간 관계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1960년대 이후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온 이민들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세대이다. 하지만 인종별 주거 및 교육의 분리 때문에 전체 인구 구성의 변화가 꼭 개인의 미시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는 인종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종 관계에 대한 경험이 더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인종 간 관계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태도가 더 지배적인 시대에 나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의 젊은 시절에 비해 타인종에게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사회 연결망에서 인종 간 관계의 변화는 더 더디고 세대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해 본다. 특히 흑백 간의 연결망은 다른 인종 간의 연결망에 비해 여전히 드문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오랜 인종 차별 역사의 긴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교육적, 경제적 성취를 살펴보았다. 밀레니얼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고등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정체가거나 오히려 늘어나 세대 내 교육적 성취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보았다. 이런 불평등의 확대는 세대 내 소득불평등에서도 확인된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내의 소득 분포가 이전 세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불평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세대 간 계층이동의 경우, 상대적 계층이동은 세대 간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반해 절대적 이동은 세대 간 크게 하락했다.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는 상향 이동을 할 확률과 하향 이동을 할 확률이 비슷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거의 모든 초기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모보다 더 높은 소득수준을 누렸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하겠다.

끝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주요한 사회제도의 관계를 종교, 정당, 결혼,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전 세대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는 주요 사회적 제도와의 참여가 낮아졌다. 이러한 주요 사회제도와와의 '불화'는 저학력층, 특히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 학력에 따른 제도적 참여의 격차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을 졸업한 밀레니얼 세대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결혼하고 주요 정당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반면에 고졸, 특히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는 주요 종교나 정당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은 소수만이 경험하는 제도가 되었으며,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30대 초반에도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꼽자면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한 다양성과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저물어 가는 침묵의 세대는 백인이 다수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적어도 거의 모든 남성이 한창 일할 나이에 노동시장에 참여했으며, 종파는 다르지만 기독교 신자였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 하나를 지지했다. 또 세대 내 소득 분포도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었고 무엇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절대적 계층 이동을 통해 부모보다 경

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렸다.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 및 계층 간 주거 분리로 서로 매우 다른 미시적 환경에서 성장했다. 고등교육 확장의 혜택을 받아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는 사람도 늘어 교육적 성취가 양극화로 이어졌다. 이런 교육의 양극화는 다시 가족, 노동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등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경험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세대 내 소득 분포도 전례 없이 불평등하고, 세대의 빈이 부모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누리는 하향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밀레니얼 세대를 다양화와 양극화의 세대로 정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물론 이런 다양화와 양극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이런 변화는 침묵의 세대에서 베이비붐 세대로, 그리고 다시 X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오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젊은 X세대와 가장 빠른 밀레니얼 세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 같은 세대 내에서도 출생 연도에 따라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어떤 측면의 변화들은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무종교 성향이나 저학력층의 비혼 경향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다양화와 양극화는 미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를 던지는데,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연대감의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들이 서로 교차하기보다는 겹쳐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지는 추세는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또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종교나 정당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사회적 연대 형성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연대 약화를 미국 사회에서 이미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갈수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두 정당의 양극화, 티파티와 월가 점령 등 좌우 모두에서 나타나는 급진적 사회운동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상징되고 그 이후 더 대담해지는 백인우월주의와 극우파 세력 등, 미국 사회는 이미 이런 다양화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학력층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향들도 우려스러운 양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들의 상당수가 학교, 가족, 노동시장, 종교, 정당 등 개인을 사회에 통합하는 모든 중요한 사회제도에서 이탈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로부터 고립은 그들 개인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공동체의 삶의

질과 사회적 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불만과 결합될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지지자들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들의 포퓰리즘적인 성향에 이런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과 고립이 기여하지는 않았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향이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밀레니얼 세대는 인종 간 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이전 세대들에 비해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의 다수가 다양성 속에서 다른 타자들과 같이 사는 법을 익혀 가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내 내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여전히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Blalock, Hubert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 Bobo, Lawrence D., 1999, Prejudice as group position: Microfoundations of a sociological approach to racism and race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 no.3, pp. 445-472.
- Bobo, Lawrence, and Mia Tuan, 2006, *Prejudice in politics: Group position, public opinion, and the Wisconsin treaty rights disput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ves, Mark, 2017, *American religion: Contemporary tren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rlin, Andrew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no.4, pp. 848-861.
- Chetty, Raj, David Grusky, Maximilian Hell, Nathaniel Hendren, Robert Manduca, and Jimmy Narang, 2017, The fading American dream: Trends in absolute income mobility since 1940, *Science* 356, no.6336, pp. 398-406.
- Chetty, Raj, Nathaniel Hendren, Patrick Kline, Emmanuel Saez, and Nicholas Turner, 2014, Is the United States still a land of opportunity? Recent trend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no.5, pp. 141-147.
- Corak, Miles,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 no.3, pp. 79-102.
- Craig, Maureen A., and Jennifer A. Richeson, 2014, More diverse yet less tolerant? How the increasingly diverse racial landscape affects white Americans' racial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no.6, pp. 750-761.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no.3, pp. 690-755.
- Fiel, Jeremy E., 2013, Decomposing school resegregation: Social closure, racial imbalance, and racial iso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 no.5, pp. 828-848.
- Fiorina, Morris P., and Samuel J. Abrams, 2008,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Annu. Rev. Polit. Sci.* 11, pp. 563-588.
- Fosse, Ethan, and Christopher Winship, Age-Period-Cohort Models: A Review and Critical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 (Forthcoming).
- Gelman, Andrew, 2009,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Why Americans vote the way*

*they do*,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ding, David J., and Christopher Jencks, 2003, Changing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7, no.2, pp. 211-226.
- Hout, Michael, and Claude S. Fischer, 2014, Explaining Why More Americans Have No Religious Preference: Political Backlash and Generational Succession 1987-2012. *Sociological Science* 1.
- Hout, Michael, and Claude S. Fischer, 2002, Why more Americans have no religious preference: Politics and gener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165-190.
- Howe, Neil, and William Strauss, 2009, *Millennials rising: The next great generation*, Vintage.
- Krueger, Alan, 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Presentation made to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January 12th, Available at <http://www.americanprogress.org/events/2012/01/12/17181/the-rise-and-consequences-of-inequality>.
- Lee, Chul-In, and Gary Solon, 2009, Trends in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no.4, pp. 766-772.
- Mannheim, Karl, 1970, The problem of generations, *Psychoanalytic review* 57, no.3, pp. 378.
- Manza, Jeff, and Clem Brooks, 2014, PRISONERS OF THE AMERICAN DREAM? AMERICANS' ATTITUDES TOWARDS TAXES AND INEQUALITY IN A NEW GILDED AGE.
- Marsden, Peter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122-131.
- Marwell, Gerald, and N. J. Demerath, 2003, Secularization by Any Other Na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no.2, pp. 314-316.
- Massey, Douglas S., and Nancy A. Denton,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urray, Charles, 2013, *Coming apart: The state of white America, 1960-2010*, Three Rivers Press.
- NatCen Social Research, 2012, *British Social Attitudes Report 2012*.
- Owens, Ann, 2017,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of School-Age Children and Adults: The Role of Schooling as a Segregating Force, *RSF*.
- Paik, Anthony, and Kenneth Sanchagrin, 2013, Social isolation in America: An artif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 no.3, pp. 339-360.
- Pew Research Center, 2015, Comparing Millennials to Other Generations. (<http://www.pewsocialtrends.org/2015/03/19/comparing-millennials-to-other-generations/>)
- Pew Research Center, 2016, Demographic Trends That Are Shaping the US and the World.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3/31/10-demographic-trends-that-are-shaping-the-u-s-and-the-world/>)

- Putnam, Robert 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 no.2, pp. 137-174.
- Putnam, Robert D., 2016,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imon and Schuster.
- Putnam, Robert D. and David E. Campbell, 2010, American grace: How religion unites and divides us.
- Quillian, Lincoln,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586-611.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843-861.
- Stein Joel, 2013, Millennials: The Me, Me, Me, Generation, Time, May 20.
- Twenge, Jean M., 2014, *Generation me-revised and updated: Why today's young Americans are more confident, assertive, entitled—and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Simon and Schuster.
- Voas, David, and Mark Chaves, 2016, Is the United States a counterexample to the secularization the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 no.5, pp. 1517-1556.



##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연구책임 변미리

공동연구 민보경, 박민진

외부 공동연구 계봉오, 임채운

초판 1쇄 인쇄 2019년 2월 21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2월 28일

펴낸이 서왕진

펴낸곳 서울연구원

편집 전말숙, 송도숙

디자인 이석운, 김미연

인쇄·제본 민언프린텍

업무협조 이원영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홈페이지 [www.si.re.kr](http://www.si.re.kr)

ISBN 979-11-5700-347-1 93310

© 서울연구원, 2019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9005665)